



터키문명전

THE CIVILIZATIONS OF TURKEY

# 이stanbul의 황제들

EMPERORS IN ISTANBUL

오스만 제국 술탄의 위대한 정복과 하렘의 로맨스!

인류문화의 보고, 터키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철의 제국 히타이트, 알렉산더와 헬레니즘 문명, 콘스탄티누스와 비잔틴 문명, 오스만 제국 술탄의 화려한 궁정문화로 이어지는 세계사 이해의 장이 될 것입니다.

터키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예술의 세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2012  
05.01 tue  
09.02 sun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KBS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주관 KBS미디어 시월ENC  
협찬 POSCO KOREAN AIR KB국민은행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258 나라경제 2012 May

경제정책 하면

# 나라경제

2012 nara.kdi.re.kr 5

## 대·중소기업 성과공유문화 확산된다

대·중소기업 성과공유문화 확산된다

경제부차관김동원위원회의 편집 | KDI 경제정보센터 발행



이슈  
솔로 이코노미, 줄여야 팔린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집중토론  
중국경제 패러다임 전환, 어떻게 대비할까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떼는 순간 산소가 됩니다.

우리나라 가구 당 대기전력은 전체 전기 소비량의 11%인 연간 360kWh입니다.  
이를 줄이면 연간 162kg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으며 전국 150만 가구에서  
실천시 약 24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일은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늦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외교관 이끌고 대한민국 알리는 박기태 반크 단장

# 우연한 기회에 내 안의 3%를 발견하다

내 인생은 아주 우연한 순간에 바뀌었다. 누군가 찰나의 순간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난 'yes'라고 답하겠다. 대학 4학년 무렵 세상은 외환위기 때문에 온통 난리였다. 내가 다니던 야간대학은 남들이 말하는 명문대와는 거리가 멀었고 바로 위 학번 선배들이 취업에서 전멸했다. 나는 낮에 빌딩 관리실에서 일을 했고, 그 돈으로 학교를 다녔다.

당시 나를 일컫는 키워드는 4無 청년. 학벌, 돈, 어학 점수, 외국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대학 졸업 이후가 두려웠다. 그나마 유일한 안식처는 토익공부였기에 빌딩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죽어라 토익공부를 했다. 매달 토익 점수가 10점씩 오르면 그게 내 인생의 행복그래프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빌딩을 성실히 관리하면, 이 빌딩에 있는 회사 CEO가 성실성을 높이 사서 취업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명문대를 다녔으면 달랐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 탓만 하며 신데렐라를 꿈꿨다.

그때 교양수업 가운데 인터넷 활용과목이 있었는데, 그 수업이 내 삶을 변화시킨 찰나의 순간이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가 탄생한 계기가 됐다. 자신이 꿈꾸는 주제를 담은 홈페이지 개설 과제가 주어졌고 나는 고심 끝에 외국 대학생들에게 사이버 관광가이드가 돼보자고 생각했다.

외국의 동아시아학과나 한국학과를 찾아 한국에 대해 궁금하면 연락을 달라, 한국 학생도 소개시켜 주겠다며

전 세계 대학 1천여곳에 메일을 보냈다. 100통의 답신을 받았고 온라인 자매결연을 맺자는 교수님까지 생겼다.

나는 그때까지도 반크를 취업의 도구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반크가 2002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최고 인기 펜팔사이트가 되면서 나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토익점수와 취업에 목매던 내가, 나의 작은 노력으로 아이들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다. 나는 더 이상 빌딩청소를 하면서 어느 CEO가 내 모습을 봐주기를 바라지 않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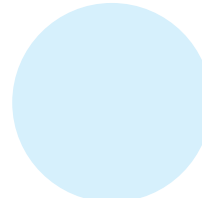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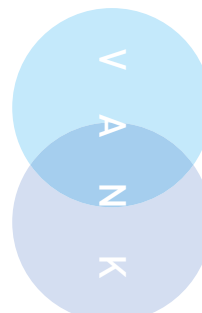
사이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잘 알려진 것처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표기된 전 세계의 교과서와 지도를 수정해 가는 반크의 활약이 시작됐다. 입시를 위해 영어만 고민하던 친구들은 한국 홍보를 위해 영어공부를 하면서 어느새 사이버외교관이 돼 있었고, 나는 사이버외교관들을 이끄는 단장이 돼 있었다. 올해 나온 외교통상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세계지도 사이트 중 동해가 일본해라고 표기된 것이 97%였는데 2012년에는 동해라고 표기된 것이 29% 정도 된다고 한다.

내 인생에서 97%는 10년 전 세계지도의 일본해 표기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였고 그것에 치여 살았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나는 내 안에 있던 3%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웠다. 내 작은 실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경험한 것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아는 일이다. 수능점수를 잘 받아 한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면 행복할까?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에 갇혀 취업 문만 통과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가?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기업 문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인생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삶을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박기태**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1999년 1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부부처와 산하단체, 언론기관 등과 함께 '해외 한국관 오류 시정 사업',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펼치는 등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하고 있다.



특집 **대·중소기업 성과공유문화 확산된다**



- 08 동반성장의 대표 브랜드 '성과공유제' 최우혁 지식경제부 동반성장팀장
- 10 인프라 구축, 문화 확산 통해 성과공유제 확산의 전진기지로 박노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확산팀장
- 12 성과공유 통해 개발된 제품, 공공입찰 시 우대 정재은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 14 2·3차 중소기업으로 성과공유 선순환 이룬다 신기룡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장
- 16 '공정한 납품단가 보장' 왜 안되나?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
- 18 제도 도입은 서구기업이, 시스템화는 일본에서 김경록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
- 20 "이제부터는 2~4차 협력기업까지 성과공유" 구현록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 부장
- 22 대·중소기업 모두 이익되는 성과공유 모델 개발 절실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장

인터뷰

42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금융행정 설 자리 없어"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03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우연한 기회에 내 안의 3%를 발견하다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경제정책해설

- 66 농식품,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먹는다  
 김응본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
- 69 고용창출 목표 달성 못하면 기업보조금 환수  
 정승희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장
- 71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터넷 벤처 키운다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정책해설 Plus \_ 개인정보보호법

- 58 민감 정보와 주민번호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 60 내 삶을 누군가 훑치고 있다  
 장윤정 전자신문 기자
- 61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별도의 동의 얻어야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62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처리방침 꼭 읽어보세요"  
 박희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팀장
- 63 개인정보 '통합' 관련 조항 신설해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42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26



집중토론

26 달라진 중국경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소장  
 지만수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부장

외신보도 분석

- 74 총선과 한미 FTA  
 이지연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 75 미국 국적의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가 마지막일까?  
 강지은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24 한미 FTA 발효 ①

한미 FTA 효과, 어떻게 나타날까  
 박종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31 김광일과 함께 읽는 책

「피로사회」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나라경제 인사이트

- 52 외환보유액, 많을수록 좋다?  
 김철환 아주대 명예교수
- 54 자산거품 붕괴, 어떻게 막아야 하나?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연중기획

함께 사는 세상\_다문화

- 90 "받은 만큼 베풀어야 진짜 한국사람 되죠"  
 해라 다문화 가수
- 92 사회·문화적 통합 넘어 노동시장의 통합 이뤄야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슈

슬로 이코노미, 줄여야 팔린다

- 33 넷 중 하나가 1인 가구... 증가 추세 지속될 것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 34 "1~2인 빈곤가구 대책 시급하다"  
 김영철 KDI 연구위원
- 36 싱글족 천국 '편의점'이 뜨다  
 장시복 머니투데이 산업2부 기자
- 37 기름기 쏙 뺀 소형주택에서 담백하게 살아야  
 박지현 이코노미리뷰 기자
- 38 건설·공급기준 완화로 도시형 생활주택 늘린다  
 권혁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39 싱글의, 싱글에 의한, 싱글을 위한!  
 심태현 '싱글메이트' 대표
- 40 정책 초점, 4인 가구에만? 1인 가구도!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세계는 지금

- 78 '수준 높은 교사' 어떻게 만들어지나?  
 장미란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 81 WTO 가입협상, 잘만 활용하면 시장빛장 풀 '열쇠'  
 홍승인 주제네바대표부 WTO 총괄 참사관
- 84 CAP(공동농업정책) 개혁,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이상만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참사관
- 87 본격화되는 지진복구 사업으로 일본경기 회복 조짐 보여  
 이상진 KOTRA 일본 오사카 무역관 과장

33



칼럼

41 도시농부의 농사일기

수확의 기쁨이 듬뿍한 열매채소  
김지숙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신문』 편집장

47 시인 이원규의 지리산 편지

배롱나무가 가르쳐주는 느낌의 미학  
이원규 시인

48 오소희의 '사람여행' - 페루

피고 지는 한 송이 백합처럼 사람도 문명도...  
오소희 여행작가

56 창의성을 기르는 생각 3.0

창의성으로 돌파하라; 뒤집기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

73 세상에 없는 직업

디자인 유통 중개인  
김현형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연구원

76 전략경영 특강

초경쟁 시대, '의미 있는 불균형을 더 불균형'하게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93 일상의 발견

소매물도 연가  
김창환 교육과학기술부 비상계획보좌관

95 그림의 겉과 속

가브리엘레 데스트레와 그 자매  
정석범 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

97 향기 나는 삶

대한민국을 스포츠마케팅하다  
서원덕 광고대행사 미르포스 AE

98 시평

경제교육은 인성교육이어야  
오영수 경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2012. 05 [제23권 05호 통권 258호]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현오석 KDI 원장
편집인	김규욱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고일동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민상기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오태석 기초과학정책과장 외교통상부 김영준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이용철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박상호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박형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최중균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황계영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김민석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윤성원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의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김운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동환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이진민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이재열
취재·편집기자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양은주
배포	김경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5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02-958-4656
팩스	02-3295-0748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2년 4월 30일(매월 말일 발행) 제23권 05호(통권 258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02-958-4634
광고 문의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656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인쇄	(주)성우에드컴
사진	이래스튜디오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성과를 얻고 그 결실을 사전에 약속한대로 나누는 제도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는데, 최근 상생과 동반성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월 14일 '성과공유제 확산방안'을 수립,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확산에 가속도가 붙었다. 공정한 성과공유 문화가 자리잡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짚어본다.

대·중소기업  
성과공유문화 확산된다





지난 4월 9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포스코 협력사인 대원인물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 처음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과제 상시등록부터 성과보상까지 일괄 관리하는 성과공유제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 동반성장의 대표 브랜드 될 '성과공유제'



최우혁  
지식경제부  
동반성장팀장  
whchoi@mke.go.kr

○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른바 '기업생태계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압축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군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며, 이에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은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을 바로잡고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성과공유제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 노력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성과공유제를 최초로 도입한 곳은 일본의 도요타로 협력사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성과공유제를 고안했다. 예를 들어 단가가 1만원인 부품을 8천원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면 단가를 9천원으로 책정해 원가절감분을 50:50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 사전계약 통해 대·중소기업 혁신성과를 공유

현재의 성과공유제는 이러한 원가절감 모델뿐 아니라 수탁·위탁기업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상생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협력활동의 목표 합의, 사전계약 체결, 성과 공유 등 3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사실상 모두 성과

공유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성과공유제는 그 탄생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제도다. 즉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이 뒤따르거나 시혜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타 동반성장 방법론에 비해 대기업에도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전경련도 정부의 성과공유제 확산 방침에 적극 동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2006년 「상생법」에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확산추진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 한국전력 등 일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성과공유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 등록하고 공식 추진 중인 모기업 수는 28개에 불과해 적극적 활용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성과공유제가 무엇인지,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산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과공유제의 개념과 모델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개별기업에 맡겨놓다 보니, 기업들은 일상적 협력활동을 계속하면서 이를 성과공유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번째 원인은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과 실적관리·평가시스템의 부재, 이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부족이다. 기업들의 일상적 협력활동 속에서 '성과공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전계약 등 성과공유제의 핵심요건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센티브는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평가가 어려워 정부의 정책지원 수단과 연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지원기구로 설치된 확산추진본부의 조직과 인력 부족, 법·제도상 적용 대상범위의 한계 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제반 여건 속에서 성과공유제 도입의 핵심전제인 '기업 CEO들의 관심과 의지'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 성과공유 확인제 도입...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성과공유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 제도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폭 넓게 파악해 시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14일 '성과공유제 확산방안'을 수립·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과 정부의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공유 유형을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모델로 정립해 성과공유제의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말부터 업계를 중심으로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구성·운영해 모델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려 한다.

둘째, 측정·평가 가능한 제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4월 중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공유 확인제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와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공유제 해당 여부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내려주는 제도로, 확인제 운영은 확산추진본부에서 맡게 된다. 확인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성과공유제 수행 실적에 대해 객관적 측정·평가가 가능해지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 또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시 가점, 정부 조달 또는 R&D 참여 시 가점, 해외동반진출 지원, 정부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CEO들의 의지와 관심을 환기하고, 적극적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30개 내외의 대기업과 '성과공유제 시행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10개사 내외를 '성과공유제 선도기관'으로 선정하고 핵심과제를 부여해 적극 수행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기업·기관별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공유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해 홍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과공유제 매뉴얼 제작·보급,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게 된다.

넷째, 성과공유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성과공유제 대상 수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대기업과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과의 성과공유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공유제로 달성한 성과에 대해 수익계약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28개 공기업에서 11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늘려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도입·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공유제를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기업 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다. 특히 오랜 거래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CEO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민**

# 인프라 구축, 문화 확산 통해 성과공유제 확산의 전진기지로



박노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확산팀장  
pns@win-win.or.kr

○ 지난 3월 14일 지식경제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성과공유제 확산방안을 보고하면서 성과공유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다. 이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제의 연구·조사·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확산추진본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과공유제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성과공유의 발전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선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해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객관적인 실적 측정·평가 등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종합시스템도 운영하고 성과공유제의 개념·적용모델, 단계별 수행절차 등을 제시해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도 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둘째, 성과공유제 성공모델의 확산이다. 전경련과 공동으로 성과공유연구회를 구성해 전기전자, 철강, 유통, 건설, 자동차 등 이미 연구된 업종별 모델을 구체화·고도화해 보급할 것이다. 이 밖에도 원가절감형 중심의 기존모델 외에 부품공동개발형, 신제품개발형, 공동판로개척형, 보유기술이전형 등을 새롭게 연구할 예정이다.

셋째, 대기업·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 유도다. 주요 대기업, 공공 부문 등 다수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



지난 4월 5일 리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12년 제 1차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성과공유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동반성장지수 대상 대기업 56개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식경제부, 전경련과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참여를 위해 10개사를 선도기관으로 선정해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확대 및 참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넷째, 2·3차 협력기업으로의 확산이다. 현재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과공유제 형태를 2·3차 협력기업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

해 협력사 컨소시엄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성과공유 시행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성과공유 우수기업·기관에 대한 포상 실시다. 기존의 포상규모를 확대해 포상훈격을 대통령상과 훈장으로 격상시킬 것이다. 성과공유제 매뉴얼도 제작해 개념·적용모델, 단계별 수행절차 등 기업들이 쉽게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15개 내외의 우수기업 사례를 심층 분석해 타 기업이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간하고 성과공유 우수기업을 선정해 타 기업·기관의 임직원 대상 현장방문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다.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구성해 기존에 연구된 성과를 토대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신규모델을 도출하고 대기업과 공공 부문 협력방안을 그룹화해 현실에 맞게 연구할 것이다. 인프라구축사업, 문화확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성과공유제 확산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원가절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동반성장의 길이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업종별·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업종별 협의체 구성, 2·3차 협력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하고 성과공유제 발굴 도우미 사업 추진, 지속협력 지수 개발, 성과공유제 연계 사업 등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Interview

담당자 인터뷰

## “함께하면 멀리 간다”

박노섭 성과공유확산팀장

### 성과공유제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했나?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같은 협력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된다. 시작부터 함께 참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동반성장 모델로서 2006년 「상생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작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으며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인가?

수행과제를 등록하고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민간 대기업 19개, 공공기관 9개로 현재 28개다. 다만 체계화, 모dul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직·간접적으로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략 100여개 정도된다.

### 성과공유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원가절감형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 22.5%, 신제품 공동개발 3.3%, 차세대 기술개발 0.3%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 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협력재단의 정부출연사업에 대한 우선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가점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성과공유제 시행목적의 투자재원 출연 시 반영되고 있는 법인세 공제도 대상기업을 확대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성이다.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 등 많은 부문에서 중소기업들의 협력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힘들다는 점이다. “동반성장 없이는 대기업도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 확산추진본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지금까지는 1차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공유제가 진행됐으나 이제는 2, 3차 협력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현안과제로 삼아 올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부에서는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공감대와 계기가 만들어진 상태다.

### 끝으로 한 말씀?

“함께하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이번 성과공유문화 확산을 계기로 정부, 대기업, 협력기업이 함께 더불어 가는 문화가 꽃피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문화가 농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까지 널리 퍼졌으면 한다. 함께 노력해 다 같이 결실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정재민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jeongje4@korea.kr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는 국가경제 성장의 근간이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의 급속한 성장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부진으로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수혜자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은 더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모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기회 부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본적 원칙이 있어야

한다. 특정 집단에 편향된 정책은 기득권 유지와 경쟁력 퇴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와 '공정성(fairness)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기회(maximum practicable opportunity) 부여 및 '집단규모에 비례하는 결과(group proportional result)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대기업 지원으로 협력사가 원가절감에 성공할 경우 원가절감분을 공유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부품 국산화, 신기술 개발까지 모든 형태의 상호 협력활동에 적용되고 있다. 성과의 공유방법은 현금보상,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특허, 공동특허·마케팅·판로지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 도입된 이후 2011년 기준 104개 기업(성과공유제 도입 모기업 수 기준)에서 시행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함께 경쟁력을 높여가는 모델로서 중소기업에는 협업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주고, 대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기술을 공유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기업 문화의 정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성과공유제는 실행대상과 보상범위에 대한 산업계의 공감대 부족,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에 비해 미흡한 인센티브 등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동반성장모델로 '성과공유제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성과공유제 모델 정립, 측정·평가 가능한 제도로서의 위상 제고와 인센티브 설계, 체계적 추진 시스템 정비,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4대 추진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성과공유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인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최종목표는 이윤창출이며 이는 성과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원가절감 또는 새로 개발된 제품의 매출증대로 달성할 수 있다. 전체 공공 시장은 약 100조원 규모로 기업들에게는 안정적 판로와 수익을 보장해 주는 시장이다. 조달청은 성과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제품에 대해 각종 물품구매 입·낙찰 시 우대평가를 함으로써 공공 부문에서도 성과공유제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 조달기능 통해 대·중소 동반성장 적극 지원**

이와 함께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현실을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 판로와 계약이행이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사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34조원 정도로 전체 공공시장의 약 35% 수준이며 내자구매는 18조원, 공사계약은 15조4천억원, 외자구매는 6천억원 수준이다. 조달청이 구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달시장에서 195개 중소기업 경쟁제품 구매 시에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종 물품구매 입·낙찰심사 시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을 우대평가해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낙찰하한율을 설정해 적정 조달가격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소 IT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대형 공공 IT사업에서 대기업과 중소 IT업체 공동 참여를 의무화했고, 올해 7월부터는 중소 IT업체 공동참여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 4월부터는 과도한 인증 및 검사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달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조달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약 14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조달청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은 2009년 70%, 2011년 77.6%를 달성했다. 또한 생산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4시간 이내 대금지급(대금지급제도),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계약이행자금 지급(선금제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달계약서를 가지고 10여개 시중은행에서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저리로 대출(네트워크론), 기술우수 조달기업들은 4개 협약은행에서 R&D 자금 대출 우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포괄적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물품, 용역, 시설공사)를 직접 구매·계약하는 '조달'의 기능을 통해 실물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실행하고 책임지는 기관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 결과 전체적으로는 지원율이 80%에 근접하고 있어 향후 양적 지원보다 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IT 분야 등 지원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단절적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분할, 중소기업 안주, 공공시장 독과점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정당한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성과문화가 공유되는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앞당기고자 한다. 남궁민

# 성과공유 통해 개발된 제품, 공공입찰 시 우대



조달청은 중소 IT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중소 IT업체 공동 참여를 의무화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대전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발주 정보화(IT)사업 성공적 지원(PMO)을 위한 연구발표회

## 2·3차 중소기업으로 성과공유 선순환 이룬다



신기통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장  
krshin@smba.go.kr

◎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동반성장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이런 이유로 모든 산업군에 걸쳐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문화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성과공유 모델이 1차 협력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2·3차 협력기업과의 효과적인 성과공유제로 확산되려면 제품혁신과 신기술 개발로 확장, 전개되어야 한다.

### 애플 앱스토어, 공정한 분배 통해 혁신 일궈

성과공유제도는 1959년 도요타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 발전시켰다. 협력사들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위해 제안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성과를 통한

이익을 50:50으로 나누는 방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도입 후 3년간 30%의 원가절감을 실현했고 이후 도요타는 목표원가법, 공급업체 개발제도를 만들어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2004년 포스코의 도입으로 시작돼 104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부품 공정 개선과 국산화가 활동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 동반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협력업체들과의 원활한 파트너십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은 사회 공헌 및 정부의 정책 참여 차원에서만 동반성장의 문제를 바라보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높은 수준



현대모비스는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사 벤치마킹'과 세미나 등을 개최해 협력사들의 실질적 업무능력과 생산성 향상 등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현대모비스 1차 협력사인 성진피엔티가 '우수협력사 벤치마킹'에 참가한 2·3차 협력사 직원들에게 개선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영국의 브랜드 컨설팅 기업 '브랜드 파이낸스'에서는 매년 전 세계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치를 조사해 상위 500개 글로벌 브랜드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 중 혁신의 대명사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주목을 끈다. 2011년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도 20위에서 12계단 뛰어오른 8위에 선정됐다. 애플의 시장경쟁력은 직관적 운영체제(OS) 외에 50만개를 넘는 앱스토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애플의 수익구조 분배에서 기인한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개발자와 7:3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즉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판매됐을 때 그 판매비용의 30%를 애플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형태다. 이는 기존의 휴대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70%에 이르는 이익을 취하는 수익배분 구조를 깨뜨린 것이다. 이러한 애플의 정책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이 됐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연스러운 혁신모드가 조성되면서 신기술(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원가절감형 대·중소 공동사업을 2·3차 협력기업으로 확산

한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기업 네트워크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행동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는 많은 부분에 걸쳐 개선됐고 미래 경쟁력을 위한 노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 대상은 주로 대기업과 1차 협력 중소기업에 국한되는 형태였다. 2·3차 협력기업은 대기업과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공유에 있어 소외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차 협력기업도 성과공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거래의 핵심은 대기업과 1차 협력 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야 하며 점차 2차, 3차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원가절감의 성과를 나누는 형태로 정착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공유는 원가절감 활동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제품혁신과 같은 기술개발 분야의 기여도 측정이 어려운 활동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범위가 과거에는 부



지난 3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신제품발표회에서 애플 CEO 팀 쿡이 새 아이패드와 앱스토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애플은 앱개발자에게 매출액의 70%를 돌려주는 수익분배 정책을 통해 애플 생태계를 구축했다.

품 제조, 구매, 가공 조립 등에서 이뤄진 데 비해 이제는 신기술, 사업개발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확장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자생적 역량을 갖춰 대기업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야 한다.

그동안 1차 기업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 대상으로 역량이 많이 발전돼 왔으나 그간 정책에서 소외됐던 2·3차 기업은 자생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차 중소기업들의 취약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며 중소기업들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야 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이 돼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할 때에만 효과적인 2·3차 성과공유제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성과공유 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확대해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성과를 배분한다면 2·3차 협력사로의 성과공유 확산 모델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성과공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3차 협력사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제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1차 위주의 수탁기업협의회 지원사업을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이해하고 사업에 적극 동참해 기업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주길 기대한다. [박기현 기자]

## ‘공정한 납품단가 보장’ 왜 안되나?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  
goangs@kbiz.or.kr

○ 지난 2월 2일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고 대기업이 성과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등의 도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2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안한 이후 1년 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항의 합의점이 도출된 것이다.

### 성과공유의 본질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의 의미는 민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인식차를 좁히고 타협점을 발견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필자는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안타까움을 떨칠 수 없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에 대한 논쟁이 거듭될수록 중소기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본질은 점차 잊혀지고 초과이익공유제 용어 선택상의 문제, 두 제도의 실효성 비교 등 기술적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배분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생태계는 극소수 재벌그룹에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된 구조를 갖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2011년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은 1,13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172조원의 96.7%에 달한다고 한다. 더욱이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83.4%가 1개의 원사업자

와 거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지속 여부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재벌그룹에 편중된 과도한 경제력은 우리 경제를 수요 독점적 구조로 만들어 협력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분별한 원가절감 요구를 가능케 했다. 이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개발력과 품질 저하를 낳고 장기적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성찰에서 성과공유라는 대안이 파생됐다. 그 목적은 중소기업에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 기술투자 유인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3월 인천지역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년 9월 29일)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의 불공정한 관행이 조금이나마 개선됐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이내 대기업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성토했기 시작했다.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은 10%가 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협력 중소기업이 그 절반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에프티이(FTE) 공장에서 임직원들과 두산중공업 관계자들이 담수화 설비 진공 장치의 품질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인 5%만 넘어도 단가인하 대상 기업으로 낙인찍히고 만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지난해에는 전기료 12% 인상, 최저임금 6% 상승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런데 업계 관행상 이러한 비용의 납품단가 반영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신규계약 체결 시에나 가능하고, 이 기간은 통상 3년, 길게는 10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골병이 들어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올려줄 생각은 안한다. 오히려 성과가 좋게 나오면 납품단가 인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현실에서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눈치를 보느라 하소연도 못하는 실정이나 ‘대기업의 이익은 중소기업의 눈물’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이다.

###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민간의 철저한 감시 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성과공유는 경제학적 이론과 복잡한 수식이 들어간 거창한 내용이 아닌 ‘공정한 납품단가 보장’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할 힘이 없는 중소기업은 ‘당연한 권리조차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못한다. 이는 향후 성과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성과공유문화 확산은 법적 규제를 통한 접근만으로는 한계

가 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국내 여건상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공유정책의 추진은 우선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협약과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등이 대기업의 성과공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협력 중소기업과 진정성 있는 성과공유를 실천하기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대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 대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법적 제도화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견심견성(見心見性)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의미를 가진 이 말처럼 모든 것은 진정성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이 성과공유를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라는 생각을 갖고 동반성장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

# 제도 도입은 서구기업이, 시스템화는 일본에서



김경목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  
kgmook@  
duksung.ac.kr

○ 우리나라에 2004년 처음 도입됐던 성과공유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던 제도다. 미국의 영화 배급사들은 무성 영화 제작 시절부터 제작사와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할리우드의 영화 배급사들은 영화 제작사들의 자발적 노력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영화판매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성과공유 방법은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까지 확산됐다.

## 현대적 의미의 성과공유제는 도요타가 처음

그러나 20세기 초반 미국 기업들이 도입했던 성과공유제는 프로젝트 성격이 강한 사업에 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자동차, 기계, 전자, 통신 등과 같이 다년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오늘날의 성과공유제와 사뭇 다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사)들이 공동 혁신을 하고 혁신 이익을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 소위 현대적 의미의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도요타는 1959년에 처음으로 협력사 제안제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공동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요타는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안을 많이 받기 위해 이익이 날 경우 협력사와 50:50

으로 나눴다. 도요타의 뒤를 이어 마쓰다(1962년), 닛산(1964년), 미쓰비시(1964년) 등의 자동차회사들도 이 제도를 받 빠르게 도입했다. 이들 자동차회사들은 부품의 국산화와 품질 및 원가 개선 제안을 대상으로 공동 혁신 활동을 펼치고 그 결과를 기여도에 따라(통상 50:50) 1년간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자 목표원가를 설정하고 그 목표원가가 달성될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는 이른바 목표설정모형을 도입했다.

일본 전자회사들은 자동차회사들보다 약간 늦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쓰비시 전기는 1967년, 히타치 전기는 1968년에 도입했다. 이들 전자회사들도 50:50 배분율을 적용했는데, 전자산업의 짧은 제품수명 주기를 반영해 공유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

자동차, 전자 등의 순으로 시작된 일본의 성과공유제는 대부분의 산업으로 확산, 1980년대 말에는 전자, 기계, 운송장비, 정밀기계 산업에 속한 기업의 60% 이상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성과공유제는 이전 경로가 매우 독특하다.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앵글로색슨 국가 기업들은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다. 앵글로색슨 국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던 이 제도를 일본 기업들은 1950년대 후반에야 도입했는데 일본 기업들은 이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산업문화에 맞게 변형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일본의 독특한 협력 네트워크 관리 제도가 세계적인 이목을 끌게 되자 미국과 서유럽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던 성과공유모형들을 역수입했다. 일본형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표적 미국 기업으로는 존 디어(John Deere), 크라이슬러, 델파이, 인텔, 보잉 등을 들 수 있다.

## 美 연방정부·공공기관도 성과공유제 활발히 운용

미국에서 성과공유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세계 최고의 농기계 회사이면서 건설기계와 산림기계도 아울러 생산하고 있는 존 디어라고 할 수 있다. 존 디어는 'JD CROP'라는 제안모형과 협력사 개발모형으로 협력사와 성과공유를 하고 있다. JD CROP는 존 디어 협력사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성과가 날 경우 이를 기여도(보통 50:50)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바 있는 포스코는 바로 JD CROP를 벤치마킹했다. 협력사 개발모형은 존 디어가 엔지니어들을 파견해 협력사의 생산 공정을 개발해 주고 그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이러한 존 디어의 제안모형과 협력사 개발모형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델파이에 그대로 전수됐다.

크라이슬러는 'SCORE'(Supplier Cost Reduction Effort)라는 공급사 제안형 성과공유제도를 1989년에 처음 도입해 다임러-벤츠에 인수될 때까지 운영했다. 협력사가 크라이슬러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를 평가해 실행에 옮기고 성과가 나면 그 성과를 일정한 비율로 공유한다. 그런데

SCORE의 분배율은 시계열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크라이슬러는 1989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난 후 10여년 동안은 절감액 전체를 50:50으로 나눴다. 하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협력사에 대한 분배 금액을 크게 줄였다. 즉 2002년까지는 5%가 넘는 금액을 50:50으로, 2002년 이후에는 10%가 넘는 금액을 50:50으로 나눴다. 크라이슬러는 협력사의 성과공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협력사들의 아이디어 제안 정도를 협력사 평가에 반영해 재계약, 물량 및 사업 확대 등과 연계시켰다. 이에 따라 'SCORE'가 한창 무르익었던 1990년대 중반에 크라이슬러가 협력사로부터 받은 제안건수는 연간 1만개를 상회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성과공유제를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80년 초반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즉 미국 정부는 제안형, 목표설정형, 장려금 지급형 등의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해 기술 혁신, 품질 개선, 원가 절감, 탄력성 개선, 납기 단축 등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급사가 적절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공급사들은 아이디어 제안 주체, 실행 주체, 혁신의 화급성, 성과달성의 용이성, 실패 및 성공에 대한 책임 정도, 목표의 달성 정도 등의 분배 지표에 의거해 30~70%의 성과를 가져간다. 이러한 성과공유제도의 도입으로 미국 공공기관의 가치창출 수준(제품 및 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졌고 예산 또한 크게 절감됐다는 평가다. [14]



도요타는 성과공유제를 통해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대표적 글로벌 기업이다. 사진은 북미로 수출 예정인 아리스 콤팩트 세단을 도요타 직원들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

# “이제부터는 2~4차 협력기업까지 성과공유”

구헌록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 부장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기업, 포스코. 그동안 성과공유에 참여한 중소기업만 801개에 이르고 1,794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해 826억원을 보상했다. 지난 한 해만 살펴봐도 602건에 424억원을 성과·보상해 적어도 포스코에서는 성과공유문화가 활성화된 모습이다. 성과공유문화의 산실 포스코 구헌록 동반성장사무국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포스코 동반성장 경영의 기본철학은 무엇인가?

바로 중소기업과의 '신뢰'다.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포스코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신뢰를 우선시하라”는 것이 정준양 회장의 경영철학이다. 한마디로 신뢰는 포스코 동반성장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 포스코형 성과공유제 모델이란 무엇을 말하나?

중소기업의 주도적 참여 아래 다양한 개선 활동을 펼치고 그 결과에 대한 합리적 성과를 배분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포스코형 성과공유제 모델이다.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부품 개발,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합리적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포스코의 협조 아래 자율적으로 체질 개선과 기술 개발을, 포스코는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과제 발굴은 중소기업의 제안으로부터 출발한다. 제조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제품의 수명 향상 및 재질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또는 수입 품목의 국산화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된 개선과제는 포스코 구매부서, 제철소 현장부서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현장 적용 가능 여부, 경제성, 개선 목표치의 명확성, 수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특히 포스코는 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선의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성과는 어떠한 비율로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력 중소기업과 상호 협의한다. 성과 측정방법과 성과 배분율이 결정되면 측정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그 결과 도출된 성과의 50%를 3년간 현금보상하고 장기계약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2~4차 협력기업과의 성과공유제 운영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금도 2차 협력기업이 1차 협력기업과 함께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1차 협력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포스코는 2차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1차 협력기업에 공급사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적으로 성과공유제가 2차 협력기업까지 확산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포스코와 대원인물(주)의 관계가 대표적 성과공유 성공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대원인물과의 성과공유제는 포항제철소 전기강판 공장의 레이저 웰더(Laser Welder) 나이프의 '국산화 성공사례'다. 당시 포스코는 철강절단용 칼인 레이저 웰더 나이프를 독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물량조달 및 공급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대원인물이 국산화 개발을 제안했고 성과공유제에 참여해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 성공할 수 있었다. 포스코는 나이프 수입 대체로 약 5억원의 재무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원인물은 3년간의 장기공급권을 얻게 됐다. 이는 약 15억원의 신규매출 효과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성공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세 가지 면에서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개선 과제를 진행하기 전, 성과배분율을 미리 상호 협의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포스코와 중소기업 간에는 '신뢰'가 조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은 과제 성공을 위한 강한 '동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시혜성' 동반성장이 아닌 중소기업과 함께 '이익'을 만들어가는 동반성장을 추구했다. 오늘날 동반성장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오고가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 때문이다. 대기업이 단순히 중소기업에 베푸는 쪽으로 동반성장의 방향을 맞춘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포스코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다. 사실 성과공유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기업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대기업의 원가 절감으

로만 이어질 뿐 중소기업의 매출액 하락으로 귀결된다는 비상식적인 악순환 고리가 반복됐다. 이득의 절반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동반성장 방법이라고 본다.

## 성과공유제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옳은 지적이다. 동반성장의 근본 방향은 결국 중소기업의 자생력 향상이다. 자생력 없는 중소기업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으며 소위 '갑-을' 관계의 지속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또한 요원하게 만든다. 따라서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컨설팅 지원과 기술보호 활동을 펼쳐 중소기업 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세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가 절감과 효율적 생산체계 유지를 위한 분업 관계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이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 간 경쟁으로 전환됐다. 기업생태계라는 환경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파트너 관계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 회사 차원이든 개인 차원에서든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성과공유제,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최근 동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음을 동반성장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실감하고 있다. 방법론에서 논란도 있으나 동반성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자본주의가 그만큼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스코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67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더욱 내실 있는 동반성장 경영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형 성과공유 모델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대표 브랜드로 정립해 산업계 표준 모델로 정착시키고 주요 동반성장 활동의 모범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다. 동반성장이 우리 산업계 구석구석까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 대·중소기업 모두 이익되는 성과공유 모델 개발 절실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  
juhyeon@kiet.re.kr

○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논의되던 2005년에 제기되고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도화됐다. 당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성과공유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나 기업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성과공유제는 아직까지 우리 기업문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성과공유제가 다시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성과공유 확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을 발표해 성과공유 문화 확산에 발 벗고 나섰다. 전경련도 성과공유제 시행으로 '대기업은 경쟁력이 확보되고 협력사는 매출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과공유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하다.

## 공평한 배분 위해선 거래대금 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

성과공유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돼야 한다. 양극화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조류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를 해소 혹은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결정방식의 개

선이 핵심과제다. 성과공유제는 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을 꾀한다는 점에서 거래대금 결정방식의 개선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적 유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혁신 노력을 추동하고 대기업도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이미 저명한 생산요소가 아니라 혁신에 원천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과공유제는 지속 가능한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다.

성과공유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이해의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1차 협력사 간담회'에서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동반성장 확산과 정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편차는 여전히 크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성과공유제를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만으로는 실제 대·중소기업 간 협력 중에서 어디까지를 성과공유제로 봐야 할지 모호하다.

첫째, 공동 노력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대기업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거의 단독으로 노력한 경우에도 성과공유 대상으로 간주되곤 한다. 둘째, 성과의 공유방식이 불분명하다. 단순한 거래물량의 확대를 성과공유로 보기도 하는데 거래물량이 확대돼도 거래가격 인하가 지나치다면 성과공유의 취지에서 벗어난다.

## 성과공유제가 대기업의 단가인하 수단돼선 안돼

이렇듯 성과공유제 개념이 불분명하다 보니 정확한 성과공유제 실태 파악도 곤란한 실정이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위탁기업이 2011년 104개로 조사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은 그중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과공유제 개념의 외연이 과도하게 확장돼 성과공유제의 본질적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추진될 가능성이 큰 형편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성과공유제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와 공동노력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

야 한다. 수탁·위탁기업 각자가 기여할 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는데 수탁기업이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역할을, 위탁기업은 보조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최종 성과는 수탁·위탁기업이 사전에 합리적으로 정한 방식(배분 비율 등)에 의거해 공유돼야 한다. 셋째, 이와 같은 공동목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방식의 구체적 내용이 사전에 문서 형태로 체결된 계약에 포함돼야 한다.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성과공유의 방법인데 금전적 배분이 주된 성과공유 방법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장기계약이나 거래물량 확대가 성과공유로 간주된다면 성과공유제가 대기업에 의한 단가인하(소위 CR; Cost Reduction)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동의하지만 실제 활용 정도는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성과공유제가 자신보다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경제적 유인을 주는 성과공유제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다른 수단, 예컨대 거래처 변경, 지속적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거래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의 근시안적 경영태도가 성과공유제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로 인식하지만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 납품단가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적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 참여를 머뭇거리게 된다. 또한 대기업의 성과공유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소극적인 이유다. 따라서 성과공유제 활용이 대·중소기업 양자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성과공유 모델이 개발되고 확산돼야 한다.

성과공유제는 모든 기업 간 거래에서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협력모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의미 있는 성과공유제가 실시돼 기업의 혁신성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성과공유제에 접근해야 한다. 성과공유제와 일상적인 협력활동의 차별성이 희석됨으로써 성과공유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던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

## 한미 FTA 효과, 어떻게 나타날까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난 다음 날부터 벌써 효과가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홍보하던 효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 그 순간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기적 같은 일이 늘 생기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FTA라는 정책도 시장과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책의 실제 효과를 만들어 간다. 하지만 FTA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해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시그널이 보이기도 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볼 수 있는 직접적 효과나 시그널들을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으로 어떤 종합적 효과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 수출 증가? 소비자 후생 증가?

관세청은 지난 3월 대미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27.7% 증가한 59억3천만달러라고 밝히면서 한미 FTA 발효와 미국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자동차부품(13.9%), 일반기계(31.9%) 같은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자료 축적기간이 짧아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원산지와의 모든 기준을 만족시켜 FTA상의 특혜를 받은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어, 한미 FTA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짐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FTA의 효과가 어떻게 발현될지를 조심스럽게나마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널이라 할 만하다.

관세인하의 혜택이 크지만 아직까지 원산지 확인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한 섬유·의류 분야(폴리에스터 섬유사(4.3% 관세 즉시 철폐), 카메트(6.7% 관세 즉시 철폐), 양말(13.5% 관세 즉시 철폐) 등을 비롯해 많은 산업들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미 FTA가 여타 FTA보다 더 자율적인 원산지 증명체제(수입



최근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부 와인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백화점 와인 매장서 소비자들 와인 구입하는 모습

자의 자율 증명 및 수입자의 인지에 의한 증명 허용)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요건만 제대로 갖춘 물품이라면 더 간편한 절차로 한미 FTA의 혜택을 조기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미 FTA와 관련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증류이 전체 대미 수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한미 FTA 효과를 평가하는 데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휴대폰이나 전기전자 부품과 같은 대부분의 소위 ITA(정보통신협정) 품목들은 양국 모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미국 내 소비자 기호나 시장상황에 따라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관세가 없는 품목들도 한미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기준만 충족하면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세관에 납부하는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 가격은 크게 인하(약 25%)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두, 아몬드 등 일부 농산물 가격도 인하됐다. 하지만 많은 기대를 모았던 다른 품목들의 소비자 가격이 생각만큼 내려가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관세인하가 있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가격을 책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동하므로 비교적 경쟁이 있고 제품이 균질화돼 있는 품목이 우선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FTA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FTA를 통해 경쟁이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 가격이 싸졌는데 덩달아 독일차들도 가격인하 행사를 했다가, 와인과 같이 한·칠레 FTA나 한·EU FTA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나 궁금해 하던 품목들 모두 한미 FTA로 가격이 인하된 것이 그 예다. 또 한국산 자동차가 할인마케팅을 통해 외국산 자동차의 할인에 맞서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FTA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미 FTA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상품을 구매하던 사람들이 늘어난 면세한도(200달러)로 인해 직접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부 업체들은 면세한도에 맞추기 위해 가격을 더욱 인하했다고 하니 이것 또한 소비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 지난 4월 뉴욕 한국투자설명회 역대 최고실적 기록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대(對)한국 투자를 분석해 보면, 2011년 하반기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66.8%나 급증해 29억8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FTA는 단순한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증진 정책을 넘어 가장 강력한 투자유치 정책의 일환이 됐다. FTA를 통해 실제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것은 중장기적 프로젝트지만 투자에 대한 기대감 상승은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4일 뉴욕에서 열린 한국투자설명회는 당초 참석 예정 인원을 훨씬 넘어 성황리에 개최됐다. 뉴욕 행사의 경우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고 한다. 뉴욕 말고도 시카고 등에서 설명회가 개최됐는데 이를 통해 총 7개사가 4억7,900만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의사를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 채권의 인기가 높아져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사고 싶다고 하고, 한국 채권의 가산금리도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한국 투자 기대감 상승 현상은 한미 FTA와 다른 많은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한국이 명실상부 미국, 유럽, 아시아를 잇는 FTA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 투자환경을 갖게 됐다는 점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효과는 이미 경제학적으로 예상된 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앞서 서술한 관세 인하나 투자확대를 통한 직접적·간접적 효과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미 FTA로 국내 산업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단기·장기적 효과를 면밀히 관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를 활용할 기업과 소비자이며, 활용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더 이상 효과가 '좋은 것이다', '나쁠 것이다'라는 가능성 차원의 논의에 국력을 낭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선(善) 효과를 극대화할지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박준한**



**박준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jhpark97@mofat.go.kr

# 한중 FTA,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최고의 수단



때 \_ 2012년 4월 18일 오전 10시  
 곳 \_ KDI 경제정보센터 회의실  
 참석자 \_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소장  
 지만수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좌장 겸)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부장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소장

지만수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부장

**지만수** \_ 올해로 한중 수교 20년이 됐다. 그간 한중 관계는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고 중국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대외경제 변수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최근 중국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 속의 위상은 물론 발전전략에도 변화가 드러난다. 내수 지향적 성장모델로의 전환,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국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봐야 할 것인가. 중국경제의 현황부터 짚어보면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이치훈** \_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5분기 연속 GDP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내수가 안 좋으니 수출이야 둔화될 수 있지만 소비 중심의 내수와 기업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심스럽다. 수출도 5분기 연속 둔화됐고 증가율은 7.6%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입증가율도 7.1%를 기록했는데, 중국정부가 확대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나 1, 2월 기업이익증가율이 2009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적

자기업 수는 2011년 1월 1.8% 증가에서 올 2월 27.4%로 커졌다. 이는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

**이문형** \_ 미국발 재정위기는 2008년 4분기부터 중국에 영향을 미쳤지만 10대 산업진흥정책, 지방정부의 대규모 투자 등에 의해 1년 만에 회복됐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에겐 그렇지 못한데다 유럽 상황이 완전히 진화되지도 않았다. 그 결과 2011년 3분기 20%대에 육박하던 수출증가율이 10%대로 떨어졌고 급기야 올 3월 말엔 7.6%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8.1%로 전분기 8.9% 성장률에서 0.8%p 떨어졌다. 한 분기 만에 거의 1%p 가까이 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정부가 2분기 이후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2월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은 3.5%, 수입은 4.3%로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20%씩이던 증가세가 3%대로 떨어지고 있다.

**지만수** \_ 유럽발 금융위기가 등장하면서 중국경제가 고전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정책방향을 정부업무보

고에서 제시한 것 같다. 성장률 목표를 8%에서 7.5%로 낮추고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하나.

**이치훈** \_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살펴보면 기존 12차 5개년계획에서의 질적 성장 방침을 계승한 측면이 강하다. 수출주도에서 내수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저부가산업에서 고부가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층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긴 했지만 사실 지난해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물가목표를 느슨하게 잡았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정부억제 목표치가 4% 미만으로 예상되는데 4%로 잡았고, 재정적자 규모를 8천억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수출입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경기하강에 대한 유연한 통화정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물가억제를 제일 먼저 언급했는데 올해는 성장을 가장 먼저 언급해 우회적으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한다. 올 10월경 예정된 차세대 지도부 교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민생안정, 민족화합 등을 강조해 안정적

인 지도부 교체 의지도 보였다. 이는 정치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이문형** \_ 중국정부는 전통적으로 물가안정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2008년 이후의 긴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이란 말이기도 하다. 그럼 과연 중국정부가 그럴 여력이 있는가. 그렇다고 본다. 지난해 세수가 1조위안 더 걷히면서 재정적 여유가 있다. 지금 중국경제의 현안은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면 1% 성장할 때 100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11차 5개년계획 동안 11.2%씩 성장해 1,154만개 일자리가 나왔다. 그런데 성장률을 7.5%로 낮추면 750만개 일자리밖에 안 나온다. 매년 새롭게 고용시장에 들어오는 2천만명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업률이 중국정부가 제시한 4.6%보다 훨씬 높아져 정권 이양기에 사회적 불안요인이 된다. 중국정부는 이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해결하겠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현안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다. 전통 제조업의 첨단화,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중국의 현안 중 하나는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다. 전통 제조업의 첨단화,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피하겠다는 것이고, 신흥 분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인데 우리와 그대로 중복된다. 중국의 산업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다.



이문형 소장

피하겠다는 것이고, 신흥 분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와 중복된다.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지만수** 세계경기 둔화와 성장방식의 전환이라는 요인이 합쳐져 무역수지 동향이 달라졌다는 것도 중국의 변화 중 하나다. 2009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고 있는데 이것은 환율 문제와 연결된다. 그간 위안화 가치는 누적적으로 절상됐는데 향후에도 계속 절상이 될 것인지 그 속도와 방향에 의문이 든다.

**이치훈** 중국이 그동안 위안화 절상압력을 받은 원인은 무역수지 흑자를 중심으로 한 국제자금의 대중국 유입에 기인한다. 과거 무역수지 흑자가 전체 국제자금 유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가 근래 들어 핫머니나 국제투자자금 유입이 커지면서 대외자금의 유입통로가 다변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점에 위안화 역외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아져 예외적 절하압력을 받았고 최근엔 거의 균형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무역수지 흑자도 지난해 절반 이하로 내려가고 투자자본의 유출입 규모도 크게 줄어드는 등 자금유출입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다. 환율 급변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됐고 중국정부도 수입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절상압력은 향후에도 낮아질 것이다. 최근 위안화의 일일변동 허용폭을 0.5%에서 1%로 늘렸기 때문에 절상이라는 기존의 한 방향 변동에서 양방향 변동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장기적으로 위안화는 중국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견조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이므로 완만한 수준의 절상이 이뤄질 것이다.

**지만수** 상하 변동폭을 1%로 늘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기존엔 국제적 압력과 국내적 필요에 의해 부드럽게 절상을 관리하는 형태의 환율정책이었다. 이를 늘렸다는 건 기업 스스로 외환시장 변화에 적응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급격한 위안화 절상에 적응할 시간을 벌

어줬다면 이젠 스스로 단련하라는 정책선택 같다.

**이문형**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3천억달러에 이른다. 이를 유지하는 데 중국정부의 부담이 막대하다. 중국의 이자율은 3.65%, 대출금리는 6%대라 그 사이에서 국채가 발행될 것이다. 미국의 장기채권은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1%대에 불과한데 그 차익을 중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결제수단으로서 달러, 유로와 함께 위안화가 3대 기축통화가 되길 원한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을 듣고 싶다.

**지만수** 위안화의 국제화 여력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본다. 무역결제통화, 즉 경상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는 것이 있고, 자본시장 개방과 연결해 위안화의 태환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결제화폐로서의 활용도 측면은 기업의 구체적 수요가 있는가를 봤을 때 많지 않은 것 같다. 인민폐를 대금으로 받고 그것을 짧은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태환성 문제와도 연계된다. 결제통화로 받은 돈을 보유기간 동안에도 활용하려면 예금이든 채권 형태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인민폐가 자본계정의 자유화, 자본시장 개방과 연결돼 있지 않아 무역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 확대 노력에도 제약이 있다. 외부로 나타나는 움직임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치훈** 적절한 지적이다. 단, 이전에는 허가 받은 중국 기업만 수출을 하고 위안화로 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 진입에 가장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감소, 대만과의 경제협력 등 현 흐름에서도 한중 FTA가 필요하지만 실제 발효될 시점인 5년, 10년 뒤 더 필요할 것이다. 중국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금융 분야의 협력도 고려할 만하다.



이치훈 부장



지만수 교수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인식했으면 한다. 매년 국내에 7천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출된다. 이 같은 인적 인프라를 무기로 중국의 서비스산업을 개척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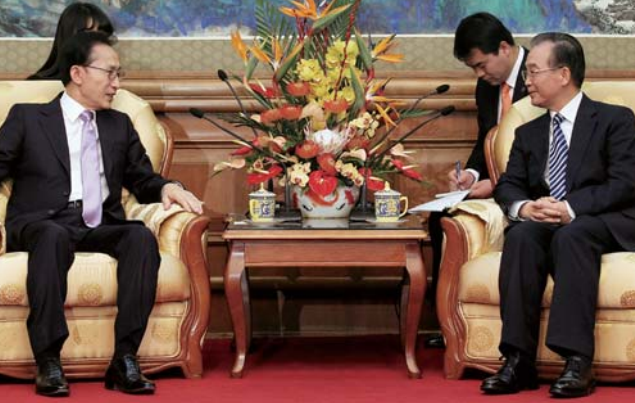
지난 3월 2일 중국 내 외환관리법에 의거한 규정들이 풀리면서 실물경제 부문의 길이 열렸다. 개별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위안화로 FDI(외국인직접투자)도 가능해졌다. 전면 실행은 5월 정도 돼야겠지만 위안화로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개방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위안으로 무역결제를 하게 되면 달러화-원화-위안화를 거치는 이중환전비용 등 거래비용이 줄어 상품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또 중국이 일정 부분 세노리지 효과(화폐주조 이익)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대외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대중 내수 시장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달러화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수도입 통화를 다변화해 환리스크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화폐통화정책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력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단점을 종합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 선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만수**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보면서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 전환에 한계를 느끼고 있

다고 판단했다. 생각처럼 소비가 늘지 않고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걸 경험하면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처럼 정부정책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걸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분 의견은 어떤가.

**이문형** 중국은 이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더 이상 추구하기 어렵게 됐다. 주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내수인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각각 애로요인이 존재한다. 공급 측면을 보면, 중국엔 국내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외자기업이 있다. 전체 기업 수의 20%가 외자기업이고 이들이 생산의 30%, 수출의 55%를 담당한다. 이들이 세계최고 수준의 제품을 중국에 쏟아부으니 중국계 후발주자들은 시장진입이 어렵다. 또 그간 OEM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브랜드 창출이 어렵고 R&D를 꺼린다는 점도 중국계 기업에는 불리한 요인이다. 수요 측면에서 소비 진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회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질병과 노후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니 저축률이 40%를 넘는다. 위기가 닥치면 소비를 해서 경기를 풀어야 하는데 저축을 해버리니 중국정부 의도대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루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지만수** 중국의 여러 이슈 중에 신규 지도부의 교체도 있다. 지난 정부의 평가에 기초해서 새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지난 1월 10일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간담회'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문형** 지난 정부는 충분히 성장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소수에게 특혜가 돌아가면서 다수의 균등한 발전 기회는 놓쳤다. 그 결과 지역 간,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상당히 크다. 지난 2004년 이후 중국은 아예 지니 계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사회과학원 발표자료를 보면 0.5가 넘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우리 0.3에 비해 꽤 높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위 소득 1%가 전 국민 자산의 42.4%를 갖고 있고, 상위 10%가 전 자산의 80%를 갖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에 위반됨은 물론 지방 간 갈등, 민중 간 갈등으로 번져 정권 교체기에 불안한 사회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젠 분배에도 신경 써야 할 때가 됐다.

**이치훈** 동의한다. 차세대 지도부의 방향을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도 얼추 짐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빈부 격차,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가장 큰 이슈이고 이를 위해 부동산 세수 및 금융시스템 개혁, 에너지 가격현실화, 정부 부패척결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만수** 중국경제에 대한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이젠 직면한 한중 관계에서의 전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마침 올해 한중 FTA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중 FTA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중 관계에 제한할 점을 말씀해 달라.

**이문형** 미국발·유럽발 재정위기가 중국에 알려준 것은 더 이상 수출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시그널이다. 이미 그 시그널은 각종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대중 수출증가율이 3%대로 떨어졌다. 과거 우리가 중국의 수출주도형 산업에 편승했다면 이젠 내수 중심 전략에 접근해야 하는데 여기에 FTA만 한 수단이 없다. 그간 우리는 한중 FTA를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 한미 FTA, 한-EU FTA를 계기로 개방도 할 만큼 했다.

중국이 워낙 거대한 시장이라 개방에 대한 충격은 대단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편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치훈** 옳은 말씀이다.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감소, 대만과의 경제협력, 산업 고도화 등 현 흐름에서도 한중 FTA가 필요하지만 실제 발효될 시점인 5년, 10년 뒤에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덧붙여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거다. 저축률이 40%에 육박하는 중국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해 중국 내 IPO(기업공개) 및 채권발행을 검토하거나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자본의 효율적 분배는 성장과 직결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력과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이 먼저 진출한 후 관련 중소기업이 나가는 선단형 진출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문형** 지난 10년간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전자, 석유화학, 정밀기기 이 세 가지 품목의 수출이 78.9%, HS코드 기준으로 상위 100개 품목의 집중도가 78.9%다. 지역별로도 광주, 산둥, 장쑤, 상하이 등 상위 4개성에 66.2%가 집중돼 있어 이를 다변화해야 한다. 중국은 31개 성시로 구성돼 있다. 그중엔 1인당 연간소득이 1만달러가 넘는 지역도 있고 3~4천달러에 불과한 지역도 있어 편차가 크다. 틈새를 찾아 접근해야 한다. 그간 우리가 수출형 성장전략에 편승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끼리 물리적 결합을 해왔다면 앞으로 중국기업과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촉매제로 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의 조립기업과 우리의 부품소재기업이 제품개발부터 함께해 판로개척, 유통 등 전 범위에서 협력하며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만수** 같은 생각이다. 덧붙여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인식했으면 한다. 중국에 있는 외국 유학생 중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학생이고, 전문인력도 매년 7천명 이상 배출된다. 이 같은 인적 인프라를 무기로 중국의 서비스산업을 개척하면 우리 청년들 일 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다. **남민**

●정리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 「피로사회」

## 한병철 지음, 문학과지성사



재독(在獨)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책 「피로사회」(문학과지성사)는 까닭 모를 현대인의 우울을 파고든다. 개인의 질병일까. 아니면 사회의 병리현상일까.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를 성과중심 사회로 규정한다. 그 속을 험겁게 헤엄치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성과주의 종교의 신도들이다.

과거의 사회는 금기(禁忌)의 사회였다. 한 개인의 주변을 온갖 터부(taboo)가 둘러싸고 있었다.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분명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볼 필요도 없었다. 지금 사회는 긍정의 사회다. 구성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터부는 없다. 과거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규약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처세였다면, 성과사회에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긍정사회는 흠집을 데 없는 이념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해 정상에 오르려면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가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긍정의 정신, '할 수 있다'는 가치가 현대인을 옥죄는 병리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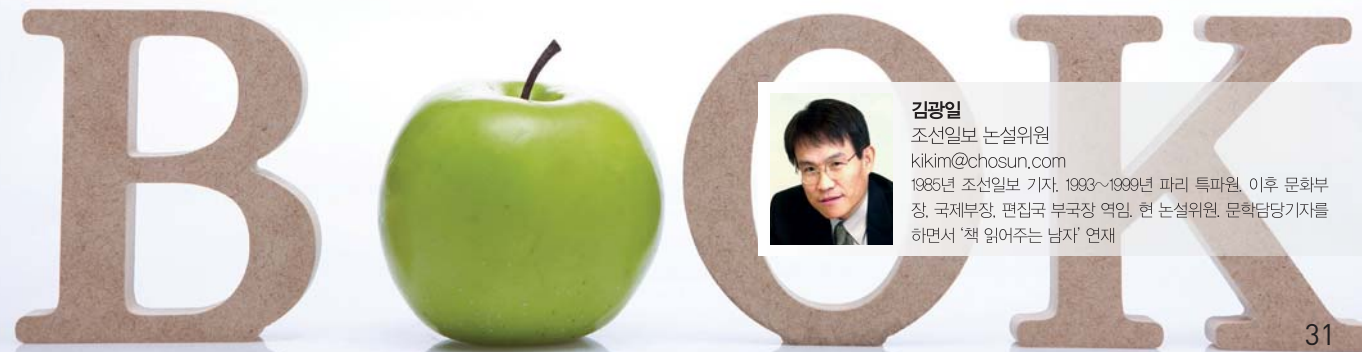
한 교수는 '자본주의에 예속된 인간은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다소 과격한 메시지로 이 책의 주장을 요약한다. 일반기업이나 정부 조직, 심지어 가정과 학교에서도 '해야만 한다' 혹은 '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긍정주의의 가면 쓴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이 시대 지구 위에는 생산과 성과와 효율에 집착하는 인간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은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성취해낼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본

인 스스로에게도 억박지른다. 이러한 부담감이 사회 구성원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고통이 심한데도 짐짓 성공과 성장을 위해 당연한 절차로 여긴다.

이 책은 2010년 독일에서 출간됐을 때도 언론과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사회와 국가는 변성하는데 왜 그 구성원들은 '변아웃신드롬'(탈진상태)에 허덕이고 있는가에 대해 시원한 대담과 위로를 줬던 것이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적대성 내지 부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를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그러한 부정성이 제거된 사회, 부정성 대신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순간, 현대인들은 그 긍정성에 압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저자는 긍정성이 과잉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못할까. 우리의 인사를 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고객에게, 젊은이에게, 유권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높이고 그렇게 긍정 주체, 성공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확인하려는 자아는 결국 피로해진다. 그러한 구성원들이 많은 사회가 피로사회다. 피로사회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자 좌절감과 우울증에 휩싸이게 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피로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약이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시대병(時代病)을 자각조차 못하고 있다. **남민**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kikim@chosun.com  
1985년 조선일보 기자, 1993~1999년 파리 특파원, 이후 문화부장, 국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역임, 현 논설위원, 문학담당기자를 하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연재



## 슬로 이코노미, 줄여야 팔린다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즐기고 더 잘라라

이것이 최근 시장을 뜨겁게 데우고 있는 '슬로 이코노미'(Solo Economy)의 핵심이다. 막강한 소비력을 갖춘 싱글족들이 의식주 시장부터 정서산업까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것. 하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층과 고독한 독거노인들은 불안하고 쓸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2012년 대한민국의 경제지형을 바꾸고 있는 '슬로 이코노미', 『나라경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 ●도입

## 넷 중 하나가 1인가구... 증가 추세 지속될 것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9.0%(102만 1천가구)였으나 2000년에는 15.5%(222만 4천 가구), 2010년에는 23.9%(414만 2천가구를) 차지했다. 재미있게도 2007년 통계청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1인 가구의 비중을 23.7%로 예상한 바 있다. '25년 후'로 예측했던 것이 5년 만에 현실이 돼버린 것이다. 이 잘못된 추계는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1인 가구 가구의 연령구성도 다양하다.

가족 중심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는 1인 가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거 가족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부조차도 취업이나 교육을 위해 잠시 떨어져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들도 노년을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2007년 사회통계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 중 60%는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다양한 혼인 상태도 주요 원인이다. 결혼을 의무나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면서 미혼이 크게 늘었다. 2005~2010년 미혼율을 살펴보면 25~30세는 70.6%에서 77.5%로, 31~34세는 30.2%에서 39.8%로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생활용품 기획전에서 모델들이 2인용 밥솥과 1인용 프라이팬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다. 또 많은 기혼자들이 불만스러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참지 않게 됐다. 2005~2010년 이혼율을 보면 40~44세는 5.8%에서 6.9%로, 45~49세는 5.8%에서 6.9%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배우자를 떠나 보낸 노인들도 많다.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39.7%는 사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이·비혼 집단은 아무래도 혼자 살 확률이 높다.

이처럼 1인 가구의 구성원들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다. 그렇지만 거주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지역 1인 가구는 주로 미혼인 젊은 층이다. 이들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독립된 거처를 선호한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2010년

전체 23만여가구 중 65.2%인 15만여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혼자 사는 젊은이들은 취업률이 높고 보살필 가족이 없다. 따라서 안정된 수입을 취미개발이나 여가선용 등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

반면 농촌지역 1인 가구는 사별한 노년층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주로 단독주택에 산다. 1995~2010년 단독주택 거주 가구는 86만가구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1인 가구는 119만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읍·면 지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인구를 반영한다.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많은 경우 만성 성인병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부산 중구(39.6%), 경남 의령군(39.5%), 서울 관악구(38.8%), 전남 신안군(37.7%), 경남 함천군(37.0%)이다. 대도시와 농촌지역 모두에 분포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전체 1인 가구 중 78.3%인 324만 4천가구는 도시지역에, 21.7%인 89만 8천가구는 읍·면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개인 중심적 가치관은 더 강화될 것이고 미혼, 이혼, 사별 인구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다. 미국은 26.7%가, 일본은 31.2%가 1인 가구다. 노르웨이는 39.7%에 달한다. 가까운 시일에 한국도 1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큰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yslee@uos.ac.kr



● 인터뷰

김영철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1~2인 빈곤가구 대책 시급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4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독거층의 높은 소비력이 ‘슬로 이코노미’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족의 울타리 없이 혼자 사는 이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이 거세고 빈곤율도 높다.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가구규모 축소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재조정」 등 관련 연구를 해온 김영철 KDI 연구위원을 만나 1인 가구의 그늘, 빈곤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분  
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만혼, 이혼,  
저출산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해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이러한 변  
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청년층, 장년층, 고  
령층으로 나뉘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청년층  
의 경우 싱글족이 크게 늘면서 소비시장 패러  
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기  
업의 마케팅이 부모와 자녀가 있는 전통적 형  
태의 핵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젠  
1~2인 가구의 소비패턴, 니즈에 맞추게 됐다.  
소비 형태를 보면 소비품의 소형화·간편화,  
사치재에 대한 과감한 소비, 핵가족에서 등한  
시됐던 미용·여가·오락산업, 정서산업이라  
고 할 수 있는 애견, 카페 등이 새로운 수으로  
등장했다. 장년층 1인 가구는 40~50대 인구  
의 10%를 차지하는데 다소 암울한 양상을 띤  
다. 이 연령대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상당한  
고독을 동반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만족감을 못 느낄 경우 사회불만에 따른 범죄  
가 증가하는 등 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  
용할 수 있다. 고령층 1인 가구도 빠르게 증가

하는 추세다. 과거 가정에 맡겨졌던 보호  
기능의 상당 부분이 사회로 이전되면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  
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언급하신 대로 구매력 있는 싱글족을 타  
깃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 중이지만 1~2  
인 가구의 빈곤율도 높은 것으로 보도됐  
다. 빈곤율은 어느 정도인가?

가구소득을 균등화지수를 활용해 1인  
당 소득으로 환산한 뒤, 이것이 중위소  
득의 50% 미만이면 빈곤층으로 분류된  
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70만원 안  
팍이거나 그 이하이면 빈곤층이다. 2006  
년 40.6%였던 1인 가구의 빈곤율이 2010  
년 45.5%로 상승했다. 혼자 사는 인구 2  
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2인 가구의 경우엔 가구소득이 대략 월  
100만원 미만이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데, 같은 기간 빈곤율이 26.3%에서 28.2%  
까지 상승했다. 2인 가구 중 세 집 건너  
한 집이 빈곤가구라는 뜻이다. 또 하나 흥  
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전체 빈곤인구 중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0년 기  
준 53.9%에 달한다. 즉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  
이 1~2인 가구에 속해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  
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2인 가구 빈곤 문제의 주된 원인은 무엇으  
로 분석되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취업 문제로, 가구 내  
취업자가 있느냐 여부다. 통계를 보면 1인 가  
구의 46.0%, 2인 가구의 29.3%가 미취업 상  
태다. 3~4인 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소득이 빈약하  
고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소득도 약하기 때  
문에 소득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에서 나온다.  
그래서 미취업 문제가 더 심각한 거다. 60대  
이상의 노령층은 정년 후 재취업 기회가 한정  
돼 있고, 청년층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  
로 인해 ‘빈곤독신’인 경우가 많다. 또한 높은  
이혼율로 한부모가구가 빠르게 증가한 점도  
 꼽을 수 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  
정의 경우 취업을 통한 소득 확보가 쉽지 않으  
며 이혼 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비  
율도 13% 정도로 굉장히 낮아 빈곤의 늪에 쉽  
게 빠지게 된다. 50대 1인 가구는 조기정년제  
로 일찍 일터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  
로 든든한 기반이 없을 경우 자영업으로 성공  
하기도 어려워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1인 가구가 확산되는 흐름은 전 세계적 현상  
인 것으로 보인다. 각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인가?

OECD 회원국들의 1인 가구 비중을 보면  
1980년대에 이미 전체 가구의 20~30%를  
차지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약 4.8% 수준이  
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15.5%, 2010년 약  
24%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다른 나라에  
서도 1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정책도 변화해야  
할 텐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거에는 미혼,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사  
는 사람들이 사회의 특수한 집단으로 여겨졌  
다. 하지만 사회가 고도화되고 개인주의화되  
면서 1~2인 가구의 증가는 전 연령대에서 나  
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이에 대  
한 사회적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 1  
인 가구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까지는 정부정책 측면에서도 이와 관련해 충  
분히 예견하지 못했던 점이 분명히 있고 변화  
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띠어  
야 하는가?

우리는 소위 유럽 국가들을 복지국가라 하  
면서 부러워하고,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유럽 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1~2인 가구화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를 겪어 왔다. 수십년에 걸쳐 문제  
가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이에 필요한 정책들  
을 마련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온 것이  
다. 예를 들어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에선 혼  
자 사는 가구들의 공동생활공간을 많이 만들  
어놓았다. 여러 명이 모여 같이 생활하면서 정  
서적 결핍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둔  
것이다. 이처럼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지금 우  
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취약계층의 요구에 귀  
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 온 결과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논쟁은 이런 실질적 부분을 결여하고 단



우리나라 전체 빈곤인구 중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은 2010년 기준 53.9%이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  
화될 전망이다.

지 “만들자”고 주장하는 데 머물러 있다. 특히  
최근 선거를 끼고 정당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놓는 등 정부재정의 규모를 늘  
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가구  
형태의 변화 흐름에서 등장하는 빈곤층·취  
약계층을 정확히 포착해 이들을 중심으로 복  
지정책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  
다. 동시에 기존에 4인 가구 위주로 꾸려졌던  
정책들도 다시 검토하고 현재 흐름에 맞게 재  
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새삼 가정이란 무엇인  
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앞으로는 1인 가  
구뿐만 아니라 재혼가정, 동거형태 가정, 비혼  
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톨레랑스, 즉 관  
용이나 포용성이 우리 사회에 있는가 하는 점  
이다. “가족이니까 함께 산다”가 아니라 “함께  
사니까 가족이다”로 바뀌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정  
책,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전환 등이 뒤따라야  
건강한 가정에 기반을 둔 건강한 시민국가를  
건설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 소비시장①(식품·외식)

# 싱글족 천국 '편의점'이 뜬다

서울 마포구의 30대 중반 직장인 최경호(가명) 씨는 '자발적' 싱글이다. 결혼에 별 뜻이 없는 그는 혼자 편히 살겠다는 주의다. 그런데 식사가 큰 고민거리다. 대부분 회사에서 끼니를 때우지만, 일찍 퇴근하는 날이나 주말이 되면 골치가 아프다. 요리가 서툰 편인데 그렇다고 혼자 쓸쓸히 식당에 가긴 싫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집 앞 편의점 도시락이다. 최 씨는 "예전엔 담배나 간식을 사러 편의점에 갔지만 요샌 '도시락 마니아'가 됐다"며 "식당 절반 값에 24시간 아무 때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4인 가구를 앞질렀다. '싱글족 전성시대'를 맞아 편의점 업계가 트렌드 변화에 가장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싱글족 전성시대'를 맞아 국내 편의점들은 '국 도시락', '컵밥' 등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다. 편의점들이 요새 가장 많이 집중하는 품목은 바로 도시락. 보광훼미리마트에 따르면 올 1~3월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나 신장했다. 특히 독신자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매출이 10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40대 남성이 주 마케팅 타겟이다. 이미 '도시락 선진국' 일본에선 외식과 가정식의 중간인 '벤도'로 대표되는 나카소쿠(中食) 시장 규모가 연간 150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편의점 업계도 도시락 전쟁이 뜨겁다. 훼미리마트는 최근 편의점에서 직접 밥을 지어주는 '즉석밥 특화점'을 역삼역에 새로 열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즉석에서 밥과 국을 퍼주며 반찬은 미리 진열돼 있는 1인용 소포장 반찬을 골라 세트로 사 먹을 수 있다. 가격은 단돈 3천원. 일반 식당 메뉴의 '반값'으로 부담도 적다.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하루 50인분의 즉석밥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며 "테이크아웃까지 가능해 인기가 많다"고 했다. 이 코너 덕분에 점포 매출이 20%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앞으로 훼미리마트는 즉석밥 특화점을 싱글이 많은 대학가 인근뿐 아니라 원룸 밀집지역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븐일레븐도 올해 들어 국과 도시락이 함께 들어 있는 '국 도시락'을 출시하는 한편, 최근 20~30대 여성층을 겨냥한 '스파게티 도시

락'을 내놓았다. GS25는 노량진 학원가 등에서 고시생들 사이에 인기를 끈 '컵밥'을 업계 최초로 상품화해 화제다.

한편 싱글족은 집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경제성을 이유로 대용량보다는 한두 끼 정도의 식재료만 찾는 경우가 많다. 3~4인 가구가 주말에 마트에서 한번에 대용량 구매를 하는 소비 스타일과는 대비된다.

GS25는 일반적으로 100~150g 용량인 참치·닭가슴살 통조림의 경우 1인이 먹으면 남는다고 보고, 혼자서도 먹기 적당한 90g 용량의 별도 상품을 도입·판매할 계획이다. 또 싱글족이 일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멸치볶음·콩자반 등의 '소형 반찬 통조림' 상품을 대폭 강화해 마트까지 가지 않아도 원하는 양의 반찬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세븐일레븐은 싱글족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특성을 감안해 인터넷몰에서 구입한 제품을 원하는 편의점에서 받아가는 픽업서비스도 추가했다.

가끔 외식에 나서고픈 싱글족은 강남·신촌·노량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1인 전용 식당'을 찾으면 된다. 대개 좌우가 막힌 독서실 책상이나 바(bar) 스타일의 1인 공간을 마련해 주위 시선의 부담을 덜어준 게 특징이다. 이런 식당의 경우 일본식 우동·라멘에서부터 사브사브·고기 등 업소별로 메뉴가 다변화되는 추세다. 주로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온 경우가 많다. 1인 전문 식당은 회전율이 높고 인건비도 적게 드는 편이어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

**장시복**  
머니투데이 산업2부 기자  
sibokism@mt.co.kr



● 소비시장②(주택·생활)

# 기름기 쏙 뺀 소형주택에서 담백하게 살아요

"내 몸에 꼭 맞다."  
옷이 아니라 집 얘기다. 집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주택업계가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한 묘안 짜내기에 바쁘다. 롯데건설의 '캐슬루미니'를 필두로 '쁘띠메종(금호건설)', '플래티넘S(쌍용건설)', '비발디 스튜디오(한라건설)', '쁘띠리'(우미건설), '자이엘라(GS건설)' 등이 바로 그 예다. 이들 주택은 모두 30㎡를 넘지 않는 소규모다. 하지만 답답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 한결같이 천장 높이를 올렸다. 또 철저한 보안과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넉넉한 수납공간이다. 플래티넘S의 경우 침실, 현관, 욕실에 수납공간을 마련했고 무인택배보관함까지 설치해 1인 가구를 배려했다. 뷔띠리은 기존 오피스텔보다 천장을 40cm나 높였다. 높아진 천장만큼 수납시스템을 적용하기 쉬움은 물론이다. 일부 주택은 '세대별 창고'라는 기발한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신촌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 6개 층에 걸쳐 창고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각 세대당 주어진 창고는 가로 80cm, 세로 240cm 크기다. '은평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에도 약 100개의 창고가 설치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 창고를 제공하는 소형주택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사가 잦는데, 거듭되는 이사의 굴레에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을 위한 주거형태도 있다. 바로 '코쿤하우스'다. 내부에 필요한 집기를 모두 구비해 놓아 짐 들일 필요를 줄였다. 월세는 보증금 없이 45만~50만원 정도다. 고종욱 코쿤하우스 대표는 "소득 200만원 이하의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은 20%대다. 월수입이 200만원일 경우 40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뜻으로 꽤 높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시장이 활황을 띠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이 작아졌으니 그 속을 채우는 물품들 또한 몸집을 줄이는 게 당연하다. 삼성전자의 1도어 미니 냉장고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벽걸이 세탁기가 좋은 예다. 한샘의 '샘(SAM) 시리즈는 TV, PC, 화장품 수납을 한번에 해결하는 멀티형 가구로 싱글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하다. 뽀스는 마치 옷장처럼 보이는 일체형 주방을 선보였다. 문을 열면 싱크대와 전자렌지가 탑재돼 있다. 가족이 해주던 '보살핌'도 서비스 상품으로 등장했다. 원룸 청소 전문 업체, 각종 심부름 대행 서비스가 그것이다. 대행 서비스의 경우 성격에 따라 5천원~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 밖에도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로봇청소기와 같은 자동화기기도



뽀스가 선보인 일체형 주방

인기다.

시장에서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혼자임을 최대한 즐기려는 '싱글족'들의 사고방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모든 1인 가구가 '줄길' 만한 상황에 있지는 않다. 1인 가구 중 사회초년생이거나 미취업자인 20~30대의 비율이 절반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60대 이상 노년층 비율은 21.4%다. 1인 가구의 80%가 사실상 저소득층인 셈이다. 앞서 언급한 소형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약 8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고, 일체형 가구 및 가전제품 또한 저렴한 편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 중점을 둔 1인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말 그대로 '기름기 쏙 뺀' 소형주택과 '담백한' 생활용품이 상용화되길 기대한다. ■

**박지현**  
주간아시아경제 이코노미리뷰 기자  
disguisedgem@gmail.com



● 정책

# 건설 · 공급기준 완화로 도시형 생활주택 늘린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1,757만4천가구로 2005년(1,598만8천가구)에 비해 158만6천가구(9.9%) 증가했다. 특징적인 현상은 4인 이상 가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2인 가구와 같은 소형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1~2인 가구의 비중은 42.2%였으나 2010년에는 48.2%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의 공급은 크게 확대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소형주택이 선호되고 있지만, 2000년 초반에는 중·대형주택이 선호됐고, 평당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전용 60㎡ 이하의 주택건설비율은 2000년 30.4%에서 2009년 24.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해 소형주택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부는 2009년 5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유형을 도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부담 가

능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도심 내 소형주택이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필요한 곳에 신속·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공급절차를 단순화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는 원룸형, 단지형(다세대, 연립)이 있으며,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12~50㎡의 규모로 건설돼 직장인, 대학생, 독신자 등의 1~2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기준과 공급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은 전용 60㎡당 1대만 설치하도록 법정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도심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설할 수 있는 세대수 제한을 당초 15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했다. 사업승인 대상도 당초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해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켰다.

민간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건설기금에서 저리(2%)로 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당 80만원 내에서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건설기준 완화와 기금지원에 힘입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초로 도입된 2009년에는 1,688세대, 2010년에는 2만5,299세대, 2011년에는 8만3,859세대가 인허가를 받는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2년 2월 현재 총 3만2,394호가 준공됐으며, 사업기간이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성상 입주 가능한 준공물량도 대폭 늘어나 도심 내 전월세난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다양화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과 거주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러 유형과 규모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공동거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원룸형 주택과 2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30~50㎡ 규모의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개선하고, 기금지원제도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지역의 1~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구분화, 고령화 현상 등을 감안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현황(2009~2012년 2월)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월
전국	120,551	1,688	20,529	83,859	14,475
수도권	70,309	1,313	11,978	49,066	7,952

**권혁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hjkwon@korea.kr



● 현장

심태현 싱글 전문 가사서비스 업체 '싱글메이트' 대표

# 싱글의, 싱글에 의한, 싱글을 위한!

야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들어왔는데 쌓여 있는 설거지에 한숨만 나온다면? 세탁기 버튼을 누를 수는 있지만 빨래를 널 시간은 없다면? 게다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싱글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봤을 '우렁각시'가 나타났다. 엉망진창인 집구석에도 "답은 있다"고 말해주는 싱글 전문 가사서비스 업체 '싱글메이트'다. 싱글생활 15년차, 대표를 맡고 있는 심태현(35세) 씨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창업을 했다. 몇 해 전 논술강사로 바쁘게 지내던 때였다. 도저히 집 치울 시간이 없어 가사도우미를 구

했는데, 노하우를 집대성한 수업자료를 쓰려고 오인한 아주머니가 자료를 모두 내다 버렸던 것.

"그 일 덕에 싱글의 생활을 잘 이해하는 전용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게 됐고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1년의 준비 끝에 두 달 전 서비스를 열었다. 싱글메이트의 주력 사업은 '룸서비스 우렁이'라고 불리는 가사서비스다. 주 고객도 원룸 등에 거주하는 싱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렁이'도 젊은 싱글이라는 점이 색다르다. 한 달 반 만에 서비스 신청건수는 300건이 넘었다. 그의 예감이 적중했다.

기존 청소업체와 또 다른 차별점은 건적을 뽑아 액수를 정하지 않고, '정액제'만을 고집한다는 것. 그는 업체의 방문을 여러 번 받고 조율하는 과정 자체도 싱글에겐 '일'이요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살던 그대로 집만 잠시 비우면 되도록 시스템을 짰다. 대신 우렁이와 고객 사이를 조율하는 매니저를 따로 뒀다.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뒤 결제를 하면 매니저는 문자서비스 등으로 발 빠르게 고객과 접촉해 일정을 짜고 고객의 부탁사항을 우렁이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정액제는 고객들의 부담은 덜어줬지만 심 대표에겐 또 다른 고민을 안겨줬다. "고객들은 한 번의 서비스에 '러브

하우스' 수준의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세요. 처음 서비스 받는 분들은 인건비에 대한 감도 없으시구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작업내용을 사진과 문자로 보고해 고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렁이 서비스의 정체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설거지, 빨래, 청소와 같은 가사를 비롯해 구석구석 정리정돈을 해준다. 또 처치 곤란한 쓰레기를 버려주거나 시간이 맞으면 택배도 받아준다. 그 밖의 사항은 매니저와 조율해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이 모든 게 1회에 3만5천원. 그 밖에 월 회원제나 긴급출동서비스도 있다.

우려도 없지 않다.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일, 귀중품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지, 서비스를 신청해놓고도 걱정이 될 수밖에. 심 대표는 "오히려 정리를 통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귀중품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 음식배달, 택배, A/S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받는 방문서비스에 비하면 우렁이는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저희 소개업체가 아니니까요. 회사에 소속된 직원과 매니저가 방문하고,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의 성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었지만 그의 계획은 장대하다.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하는 24시간 싱글 밥집, 싱글남성 전용 피부관리 서비스 등 관련 구상을 하나씩 실현시킬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서비스의 비용을 우렁이 서비스처럼 부담 없이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싱글이기에 싱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싱글을 위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싱글메이트. 그들이 대한민국 모든 싱글에게 전한다.

"싱글이라도 괜찮아!" ■

●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 제언

# 정책 초점, 4인 가구에만? 1인가구도!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의 23.9%를 차지해 5년 전에 비해 30%가 증가했다. 생애기간 중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보내는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어 정책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정책은 주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은 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85㎡(25.7평) 위주로 공급하며,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해 계속한다. 또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등) 부과기준, 통계·비용 산출의 근거 등도 4인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규모에 맞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인 가구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1인 가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미혼이 가장 많고 사별, 이혼, 유배우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도시는 미혼, 저연령, 낮은 자가점유율을 보이고 농촌은 기혼, 고연령, 높은 자가점유율을 보인다. 이처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져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를 적극 고려한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다음으로 주거정책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월

세 거주 비율이 높고 비거주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1인 가구의 불안정한 거주 점유형태를 고려해 저렴한 주택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가주택이 지역적으로 집중되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분산돼야 하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동화될 수 있는 주택유형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고급형 주택유형 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나이가 연령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해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내부가 갖춰지고, 사생활 보호와 안전성 확보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전반적 강화가 요구된다. 갈수록 독거노인의 복지 욕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현대인의 속성인 단절감, 고독감, 소외감 등도 1인 가구원에게는 심화될 수 있다. 젊은 층은 온라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1인 가구원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구주이므로 비취업 1인 가구원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노인독신 가구원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대비하고 가사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지역사회 단위로 구축돼야 하며, 이러한 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1인 가구원의 정서적·심리적 안정화 정책을 강화해 우울증, 자살충동, 컴퓨터 중독



지난 3월 12일 인제군보건소는 인제읍 합강2리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관리 및 운동 교육 등을 실시했다. 사진은 노인들이 볼링을 즐기는 모습

등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1인 가구원에 대한 일자리 우선 제공과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지급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혼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가사의 어려움은 물론이요 소득에 비해 생활비가 과다 지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가사지원 서비스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될 필요도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산업과 연계해 저렴하게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에 유용한 소포장 식품 및 소형 생활용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지원도 기대해본다. ■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sk@khisasa.re.kr



5월로 접어들면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 따뜻한 기운이 안정권으로 접어들어 한낮에는 20℃를 넘나든다. 이때 텃밭을 차지할 작물은 응당 더위를 좋아하는 것들로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등 흔히 먹는 열매채소다.

처음 시작하는 텃밭농부들이라면 열매채소까지 길러먹을 엄두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열매채소 농사는 모종 몇 가지를 사다 심는 것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일단 심어만 두면 길러먹는 재미가 각별하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텃밭은 곧 열매를 달 예쁜 꽃들로 가득해지고, 꽃이 진 자리에 달린 작은 방울은 며칠 만에 쑥쑥 커지며 길쭉한 오이로, 고추로, 토마토로, 가지로 변신해 간다. 텃밭의 열매채소들은 사 먹는 것에는 달 수 없는 신선한 맛까지 안겨주니 실로 경이로운 선물이다. 주로 열매채소는 모종으로 많이 심는데 고추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 바로 뿌릴 수도 있다. 모종으로 심을 때는 잔뿌리가 많이 나오지만 씨앗으로 바로 뿌리면 잔뿌리가 튼튼히 뻗는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흔들리듯 곧뿌림한 작물도 버티는 힘이 세다.

### 5월 상순, 열매채소 모종 심기

잎채소와 달리 열매채소는 줄기를 크게 뻗는다. 작물의 키가 적어도 1m 안팎으로 자라고, 오이나 호박은 사방 몇 m까지 넝쿨을 뻗다 보니 충분히 자랄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모종을 심을 때 주의할 것은 사방 간격을 40~50cm 이상 충분히 줘야 한다는 점. 특히 토마토와 고추는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폭 60cm, 높이 30cm 이상으로 두둑을 올려주고 나서 구덩이를 파서 심는다. 구덩이에 물을 충분히 주고 물이 스며들고 난 뒤 모종을 똑바로 세워 심는다.

오이나 호박은 평이랑에 심되 간격을 50~60cm 이상 넉넉히 벌려 심는다.

### 웃거름 주고, 결순 따고 버팀목 세워야

열매채소는 밭에서 4개월 이상 자란다. 처음 밭을 만들 때 넣는 밑거름도 충분해야(평당 10kg 안팎) 하지만, 웃거름도 필요하다. 심고 두 달 후부터 한 달 간격으로 작물 주위에 구덩이를 파고 퇴비를 한두 주먹 넣어준다.

또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인산 거름 효과가 있는 쌀뜨물 발효액을 뿌려주는 것도 좋다(1.8ℓ 페트병에 쌀뜨물을 넣고 설탕을 한 수저 듬뿍 넣어 밀봉해 1주일 이상 두면 발효된다. 시큼한 듯 향긋한 냄새가 나면 제대로 발효된 것이다).

고추나 토마토, 가지 등은 꽃과 열매 쪽으로 영양분이 더 갈 수 있도록 원가지 사이에 올라온 결순을 잘라준다. 또 열매를 달면서 가지가 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세워주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토마토와 고추는 두둑을 높이 올려 심어 물빠짐이 좋도록 한다. ■



**김지숙**  
jisskim@naver.com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에서 펴내는 「텃밭신문」 편집장. 텃밭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오심견도 고치고 복잡한 머릿속도 많이 맑아졌다고 한다.

수확의 기쁨이  
듬뿍한  
열매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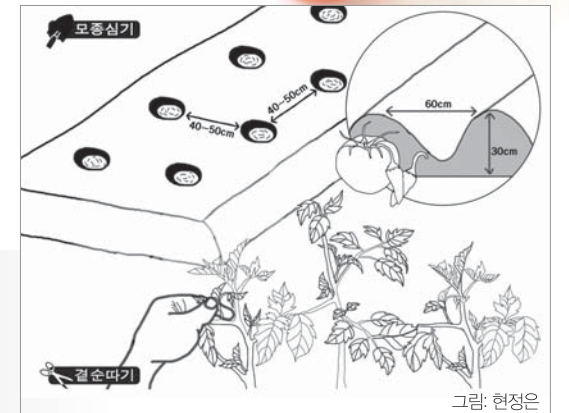


그림: 현정은

1953년 부산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1979년 행정고시 합격(23회)  
 1995년 재정경제원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총괄반장·부동산반장  
 1998년 ~ 1999년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증권제도과장  
 1999년 ~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과장, 조정총괄담당관, 감독정책국장  
 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2005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차관보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2007년 재정경제부 제1차관  
 2008년 (주)농협경제연구소 대표이사  
 2011년 1월 ~ 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석동



때 \_ 2012년 4월 13일 오후 3시  
 곳 \_ 위원장 집무실(여의도)  
 대담 \_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금융행정 설 자리 없어”

지난해 취임 이후 벌써 1년4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취임하  
 자마자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기억하  
 는데…

지난해 취임 당시 임명장은 1월 3일에 받았지만 사실상  
 근무는 1일 현충탑 다녀오면서부터 시작했다. 오자마자 한  
 것은 시장안정 조치였다. 저축은행 문제가 당면한 현안이  
 있는데, 취임 이후 한 3주 정도 만에 삼화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2월 중순에 부실이 현재화된 대형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됐다. 그렇게 부실이 완전히 노출된 저축은행들  
 을 구조조정했다. 일단 급한 불을 끈 거라 할 수 있겠다. 하  
 반기 들어서서는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문제되는 은행들을 정리했다. 지난해 정리한 것이 16개 저  
 축은행이며, 자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저축은행의 3분의 1  
 에 해당된다.

그러나 문제는, 예전에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때는 공  
 적자금을 대규모로 조성한 후 투입을 선언하고 구조조정  
 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번  
 은 달랐다는 점이다. 이번엔 사전적인 공적자금 조성 없이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기에 시장원리에  
 따라 정리됐고, 그러다 보니 마치 마취하지 않은 환자를 수  
 술한 것 같은 형국으로 보인 것이다. 결국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여러 소리도 나오게 됐다.  
 그렇지만 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훨씬 더 부실이 심화되고  
 심지어 전체 저축은행으로 뱅크런(bank run)이 확산될 우  
 려가 있었던 만큼 제가 신속하게 정리에 나선 것이다. 1998

년 직후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준하는 속도로 긴급조치  
 를 한 거다. 그러나 이제 일괄 정리는 없다. 시장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즉 자기자본비율(BIS)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  
 아지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2011년 초 당시를 생각해보면 대외적  
 으론 유럽의 재정위기와 주요국 성장둔화 등 대외 리스크, 국  
 내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누적,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대내외  
 불안요인이 많았다.**

물론이다. 그러기에 지난 1년여 동안은 무엇보다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금  
 융시장 안정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연착  
 록 추진, 은행권 외화유동성 확보를 통해 대내외 불안요인  
 에 선제 대응하고자 했다.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한국  
 형 헤지펀드, 투자은행·대체거래시스템·중앙청산소 제  
 도 도입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도 힘을 기울였다. 올해 들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중  
 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선,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서  
 민금융 1박2일을 통해 알게 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  
 년층 금융애로 해소와 미소금융과 같은 서민금융의 내실  
 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정책적 노  
 려를 하고 있다.

**최근 관심을 많이 모은 '서민금융 1박2일 현장방문'의 취지는  
 무엇이며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지?**

앞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틀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새로운 축을 건설하고자 한다. 수요자 중심의 금융행정을 세우는 것이다. 금융정책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를 도외시키고는 더 이상 금융행정이 설 자리가 없다. 금융행정의 틀을 올해를 계기로 완전히 바꿔보려 한다.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다녀왔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동안 대전, 광주, 대구, 원주 등 전국 5개 지역의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했다. 물론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관계자도 동참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서민금융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서민금융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느꼈다. 청년 학자금, 창업자금과 같은 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 미소금융 전통시장 대출의 1인당 지원한도가 소액(500만원)이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민들이 오히려 서민금융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등 홍보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 심지어 어떤 분은 “사기꾼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바뀐드립론을 알려줬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민금융의 지원조건이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적용돼 필요한 곳에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피해가 나타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기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현상방문은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계속할 생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는 어떻게 추진되나?**

우선 청년·대학생들에게 고금리 채무에 대한 전환대출(6월), 소액생활자금 대출(5월), 창업자금(5월)을 지원하고,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을 현재 지원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기관 및 금융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서민금융협의체를 운영하려 한다. 새희망네트웍도 개편해 수혜자 관점의 서민금융 홍보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피해도 적극 방지할 것이다. 대학생의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사태 등 금융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금감원, 검·경찰 등과 함께 2분기 중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할 것이다. 아울러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우대금융 3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햇살론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소금융은 출범 초기 대출실적이 부진했으나, 2010년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이다. 새희망홀씨는 지난

해 실적(1조4천억원)이 목표치(1조2천억원)를 크게 상회하는 등 은행권의 저신용층 대출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햇살론은 초기엔 대출이 급증했으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 이에 미소금융의 경우는 기존의 창업자금 이외에 청년층 및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새희망홀씨도 대출 확대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신용층 대출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햇살론의 경우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이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서민대출 및 정책자금은 제외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를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 한다.

**중소기업 살리기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려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재창업 등을 통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채무조정 및 재창업 자금 지원을 실시할 것이다. 면책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신용대출도 활성화할 것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정당한 심사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후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 중소·중견 금융 통합정보시스템, 이른바 ‘기업금융 나들목’ 사이트도 개설했다. 기업인이 필요한 지원제도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제공하고 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벤처·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가칭 KONEX)도 올해 내 신설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여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세계경제에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 여건에 대한 견해는?**

올해 중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불안 리스크가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약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경우 위기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스페인을 중심으로 불안이 재확산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고용 부문 부진과 저금리·재정악화에 따른 정책대응

능력 약화 등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유가도 걱정이다.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상승으로 세계 경기둔화를 심화시키고, 각국의 재정정책 등 대응 여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우리 경제도 수출부진 등 실물 부문의 둔화를 겪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경기둔화, 실업증가 등에 따라 서민층 가계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면서 특히 실물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해 올해 우리 경제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이 궁금하다.**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향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해 금융정책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도 세웠다.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실물경제 성장과 균형되게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확대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개선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컸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건전성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원회로서는 앞으로 부문별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소득·연령 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가계대출 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금융위의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개정안의 통과 전망은 어떠한가?**

18대 국회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어서 통과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총선공약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18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담아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5월 국회 중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에 가지는 의**

**미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은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먹고 살거리를 해외에서 개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도울 수 있다. 이런 만큼 투자는 행과 헤지펀드 산업을 활성화하고 대체거래소(ATS)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을 개혁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더군다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은 오히려 금융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해외 금융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자국 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개정은 이러한 국제적 공백상태를 우리 금융기관이 채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면서도 정부 역할을 언급해왔다. 자유경쟁시장과 정부 관여에 대한 위원장의 철학은?**

제가 우리나라 금리자유화를 완성시킨 사람이다. 원래부터 시장경제 신봉자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관치주의자로 알려져 있다(웃음). 사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 역할은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등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연히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시장질서가 흐트러지게 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소명이자 책무라고 본다.

**대책반장으로 강성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 언론 사진을 보면 부드럽게 미소짓는 모습도 보인다. 위원장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지난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1997년 외환위기 등 수많은 위기 극복의 중심에 있었다. 또 2003년 카드사태 등 굵직굵직한 금융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책반장’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고 강성으로 비춰졌다고 생각한다. 위기관리나 파급효과가 큰 금융현안을 처리하는 것은 수



지난 3월 19~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전, 광주, 창원, 대구, 원주를 순회하는 ‘서민금융 1박2일 투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서민금융 지원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고 시장과 참가자들의 반응을 다각도로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되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참으로 힘겹고 책임이 무거운 일이다. 때로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강하다’는 이미지가 생겨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우리 것(한국 고대사)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참고로 집안에선 제가 “제일 유하다”고 평가받고 있음을 밝혀드린다. 식사메뉴에는 절대 개입 안 한다(웃음). 다시 말해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갈 때는 가장 나약한 사나이가 된다. 책 보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그냥 그걸로 만족한다. 그러나 일단 비상상황이 왔다 하면 그때는 움직이는 DNA가 따로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금융을 책임진 분으로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동안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축으로 운용돼 왔다. 그러다 보니 법과 규제를 만드는 톱다운(top down) 방식의 행정이 주였다. 그러나 월가 점령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은 금융소비자, 즉 예금자, 투자자, 펀드구매자 등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다. 저는 앞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틀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새로운 축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는 그야말로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수요자 중심의 금융행정을 세우는 것이다. 금융정책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를 도외시키고는 더 이상 금융행정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금융행정의 틀을 올해를 계기로 완전히 바꿔보려 한다. **■**

# 배롱나무가 가르쳐주는 느림의 미학

봄꽃에 취해 몸과 마음이 덩달아 달뜨다 보니 어느새 ‘봄날은 간다’ 노랫말이 가슴을 칩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은 배롱나무였지요. 백일홍이라 부르는 이 나무는 덩달아 달뜨 나에게 진정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화꽃이며 산수유꽃이며 진달래꽃이 여전히 ‘미완의 혁명’으로 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각성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분히 꽃잎이 날리고 잎이 나고 ‘진달래 산천’이 되어도 백일홍나무는 묵묵부답이었지요. 봄꽃들의 잔치가 끝난 뒤에 밤나무며 모과나무가 술술 연초록의 어린 입술을 내밀어도 이 나무만은 마치 죽은 듯이 죽은 듯이 동면의 겨울나무로 서 있었습니다.

맨살의 온몸으로 혹독한 겨울을 냈지만 봄이 와도 아직은 봄이 아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봄에 가장 늦게 잎을 내밀지만 여름 한낮의 뒤흔벌 아래 백일 동안 꽃을 뿜어내는 그 저력, 이것이야말로 마치 독학의 만학도처럼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결기가 아닐까요.

전설이 참으로 슬픈 백일홍나무 아래 서서야 시인이자 통일운동가였던 문익환 목사가 스스로 호를 ‘늦봄’이라 지은 것을 알 것도 같습니다. 원가 환하지만 ‘잔인한 사월’을 묵묵히 응시하며, 마침내 백일 동안 꽃을 피우는 저력이야말로 화려꽃을 피우고 지는 저 봄꽃들의 청출여람이 아니겠는지요. 화려한 작심삼일이 아니라 담배를 끊어도 석달 열흘은 끊어야 그 가능성이 보이고, 기도를 해도 백일기도는 해야 뭔가 깨닫지 않겠는지요.

백일홍나무 아래 서서 민족시인 신동엽 선생을 생각합니다. 김수영 시인을 떠올립니다. 두 시인 모두 불운하게도 나이 마흔의 경계에서 봄꽃처럼 화려 죽어갔지만, 그들의 정신은 백일홍의 끈질긴 결기를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서두르기만 한다고 될 일은 없겠지요. 향기도 없이 화사하게 피었다가 화려 지고 마는 벚꽃도 아름답기야 하지만, 그것만을 꿈꾼다면 일종의 도박이 아니겠는지요.

화사한 벚꽃나무 아래서 봄을 만끽하다가도 문득 묵묵부답의 백일홍나무 아래 서보는 것, 바로 그곳에 진정한 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 문단 등 세상을 둘러보아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뛰어난 문재들이 안타깝게도 일찍 꽃을 피웠다가 화려 지는 일장춘몽의 벚꽃이 되기도 하고, 백일홍처럼 늦게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지만 화무십일홍을 넘어 오래오래 명작의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일명 간지럼나무라 부르기도 하는데, 잎과 꽃이 무성한 이 나무의 밑동을 손가락으로 간질이면 가지 끝의 이파리들이 파르르 떨기 때문이지요. 묵묵부답의 나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나무인 것이지요. 스스로 욕망의 짐을 벗어버리듯 나무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며 언제나 맨살의 알몸으로 서서 세상과의 교신, 그 예감이라는 안테나의 주파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러보면 곳곳에 마치 죽은 듯이 죽은 듯이 제일 늦게 봄을 맞이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온몸의 세포들을 일깨우며 때를 기다리는 배롱나무가 서 있습니다. **■**



**이원규 시인**  
jirisanpoem@daum.net  
1984년 「월간문학」, 1989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강물도 목이 마르다」, 「옛 애인의 집」, 등 시집과 「멀리 나는 새는 집이 따로 없다」 「지리산 편지」 등 산문집이 있다.



피고 지는  
한 송이  
백합처럼  
사람도 문명도

...

페루의 마추픽추는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게다가 '태양의 신전'이란 이름에 걸맞게 태양이 정수리에 튼튼한 직사광선을 쏟아냈는데, 피할 수 있는 그들은 거의 없었다. 열 살 아들과 나는 모자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성 없는 엄마라니. 몇몇 구역을 돌아보고 주저앉았을 때 아이는 그대로 드러눕고 싶은 모양이었다.

구세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소희! 어서 이리 와!”

어제 기차에서 만났던 페루의 멋쟁이 아줌마들, 줄리아나와 리아나였다. 그들의 일행이었던 이스라엘 남성 예런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아내 데비가 있었다. 그곳이 마추픽추의 옆 산인 와이나픽추로 입장하는 철문이라는 건 그제야 알았다. 데비가 아들에게 쿠키와 주스를 내밀었다. 아들은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이럴 때 녀석에겐 꼬리가 솟아난다!) 데비에게 달려갔다.

“빨리 여기 들어와 줄을 서.”

우리가 합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우리는 다 함

새벽의 마추픽추.  
마추픽추 관람은 아침 6시부터 시작된다.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고스란히 느끼기 위해.

» 좁은 돌담길과 계단으로 연결된 구역들. 잉카인들은 바위를 가위로 종이 다루듯 했다.



## » Peru

나는 페루 역사상 최초로 (정복자가 퍼뜨린 스페인어가 아닌)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대통령 톨레도가 당선된 2001년, 저 아래 마추픽추에서 화려한 취임식이 거행되던 장면을 상상해보았다. 톨레도의 닉네임은 '파차쿠티'였다. 바로 잉카인들이 마추픽추를 건설해 바친 황제의 이름으로 '지구를 흔드는 사람'이란 뜻이다. 오늘날 가장 위대한 아메리카 원주민 중 하나로 추앙받는 황제 파차쿠티는 서남미를 모조리 정복하는 잉카 최전성시대의 문을 열었다. 아마도 그 시절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페루인들의 염원이 톨레도 대통령을 파차쿠티로 명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페루의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했고 곧 그의 인기도 덧없이 사라졌다.

*뜰에 핀 한 송이 백합처럼 나는 태어났고  
한 송이 백합처럼 나는 자라났네  
세월은 흘러 나는 늙어갔고  
이제 시들어 죽어가네*

황제 파차쿠티가 죽음을 기다릴 때, 당대의 시인 페드로가 차분하게 읊었다는 시다. 와이나픽추에서 내려다보는 마추픽추는 이 시에 가장 걸맞은 모습이었다. 인생이 나고 자라고 늙고 죽듯, 문명도 그러하다.

내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인 에런이 전망대에 나타났다.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괜찮냐고 묻자, 그다운 답을 한다.

"이스라엘 군생활을 하면 이 정돈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곳에서 조금 더 이동해 정상에 이르렀다. 에

런이 이스라엘 버전으로 소감을 피력했다.

"내 군대 동기들에게 와이나픽추 정상에 왔다는 말을 해주면 믿지 않을 거야."

아들은 열 살 사내아이 버전으로 군인 출신의 소감에 경의를 표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기합을 받으려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야 할까요? 총을 자기 엉덩이에 쓰는 것?"

줄리아나와 리아나는 멋쟁이 아줌마 버전으로 감동을 표현했다.

"소희! 네 좋은 카메라로 우리를 좀 찍어 줘!"

그리고 내가 한 컷 찍을 때마다 반드시 화면을 확인하며 외쳤다.

"노, 노, 더 색시하게!"

신기하게도 리아나는 슈퍼모델처럼 섹시한 포즈를 잘 취하다가 셔터소리만 멈추면 곧바로 친식환자가 돼 드러누웠다. 데비만이 무난하고 고요하게 주변을 감상하고 있었다. 때때로 아들에게 초콜릿을 권하면서,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들과 함께 있자니 이곳이 세계적으로 대단한 문화유산임을 자꾸 잊게 된다. 오히려 어느 일요일 일가친척들과 관악산에 오른 기분이다. 해변대를 나온 삼촌은 모든 걸 군인정신에 갖다 붙이고, 어린 조카는 되도 않는 소릴 지껄여대고, 깍쟁이 이모는 계속 화장을 고치며 투덜대지만 끝끝내 따라오고, 온화한 엄마는 조용히 싸 온 도시락 뚜껑을 여는... 그런 서민적이고 복닥거리는 분위기 속에 감싸인 기분.

하산할 때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줄리아나의 7cm 힐 때문이었을 것이다. 힐은 경사진 곳을 오를 땐 편하지만 내려갈 땐 몹시 불편하니까. 아들이 제일 앞서 뛰어 내려갔다. 마추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올라올 때 받았던 응원을 되돌려 주면서,

"안녕하세요? 오 분 남았어요.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십 분 남았답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었다.

"하하, 잉카 보이로군!!"

"오, 메신저 보이!"



01



02

01 안데스의 가장 흔하고도 귀중한 가족 라마 02 마추픽추를 느끼는 여행자 03 와이나픽추 정상에서 줄리아나와 리아나



03

>>

>>

>>

계 와이나픽추를 오르기 시작했다. 아들이 "몸 좀 풀어야겠어!"라며 앞장섰지만, 부동의 일등은 줄리아나였다. 그녀는 취미가 사이클링인데 선수급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7cm 힐을 신고도 산신령처럼 스프르르 와이나픽추를 올랐다. 데비와 나는 그럭저럭 그 두 사람 뒤를 따랐다. 문제는 리아나였다. 몇 걸음 딛다 말고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때마다 곧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했다. 천식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커다란 가죽 토트백을 받아들었다. 재미있는 친구들이다. 힐을 신고 토트백을 든 채 산에 오르는 아줌마들이라니.

'짧은 봉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와이나픽추는 가팔랐다. 정상이 나타날 듯 나타날 듯 나타나지 않았다. 내려오는 등산객들이 올라오는 등산객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는 응원이 힘이 되었다.

"십 분 남았어요. 힘내세요!"

"오 분 남았어요. 힘내세요!"

한 시간 남짓, 드디어 와이나픽추의 전망대에 이르렀다. 마추픽추가 한눈에 펼쳐졌다. 나아가, 마추픽추를 감싸고 있는 계곡, 다시 그 계곡을 감싸고 있는 계곡, 그 아래 유장하게 흐르는 우루밤바 강, 저 멀리 안데스의 설산 한 자락까지 파노라마하게 펼쳐졌다. 누구라도 카메라를 꺼내들게 만드는 풍경이었다. 리아나는 천식을 견뎌 보람을 느끼며 거기서 한참 숨을 골랐다.

문자가 없던 잉카인들에게는 우체부 대신 '차스키'라는 전령들이 있었다. 청년들이 다음 초소까지 1km씩 달려가 외워둔 소식을 전하는 잉카식 연락망이었다. 전령들은 단어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다. 숲을 지날 땐 곤봉으로 야생동물의 공격도 물리쳐야 했다. 이런 식으로 차스키들은 하루 240km까지 소식을 전달했다고 한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황제가 있으면 해산물도 '싱싱하게' 배달했다고 한다. 퀵서비스가 따로 없는 것이다.

내가 아들 뒤에 조금 떨어져 내려가노라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친숙한 얼굴을 하고 "당신 아들이 방금 내려갔어요" 하고 알려주었다. 나는 웃으며 농을 건넸다.

"하하, 절 언제 봤다고 제 아들을 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하하" 웃으며 말했다.

"당신 아들 잘 알죠. 그 유명한 메신저 보이잖아요!"

내려올 때까지 그런 유쾌한 대화가 몇 번이나 계속됐다. **남매**



**오소희** 여행작가  
endofpacific@naver.com  
'사람' 여행가. 세상의 변방을 거닐며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소통, 연대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 저서로는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주겠지, 「사랑바보」 등이 있다.

# 외환보유액, 많을수록 좋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계에 따르면 세계 전체의 외환보유액은 1995년 1조3천억달러에서 2011년 6월 말에는 10조804억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지난 15년 사이에 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세계 외환보유액의 변화 추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신흥국가(emerging markets;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는 브라질,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태국, 터키 등을 신흥시장으로 분류)의 외환보유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2월 말 현재 10대 외환보유국에 중국(1위), 러시아(3위), 브라질(5위), 한국(7위), 인도(8위)가 포함돼 있다. 외환보유액 변화 추세의 또 다른 특징은 외환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2012년 2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무려 3조2천억달러에 근접하고 있으며 일본은 1조3천억달러, 대만은 4천억달러이다.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에선 소득의 증가에 따라 대외거래 규모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입대금이나 단기외채의 규모도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외환보유액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들 신흥국가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 국민소득, 월별 수입대금을 기준으로 한 적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까?

### '외환보유액' 외환위기에 대비한 유용한 방화벽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국가들이 IMF나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국내경제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은 금융위기에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더욱이 경제의 기초가 튼실한 경우에도 금융위기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한 많은 국가들은 건전한 거시정책만으로는 금융위기에서 피해 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됐다. 이에 외환위기의 피해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외환보유액의 축적을 선택했다. 즉 외환보유액 증대는 투기자본의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자본의 역류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을 가진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부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방화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외환보유액이 많은 국가는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다. 설령 투기공격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기초경제여건이나 금융시장이 한국보다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외환보유고가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다수의 신흥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외환이 국내로 유입됐다. 국내로 유입된 외환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을 늘린다. 자유변동환율제도 아래에서 외환공급의 증대는 환율의 하락(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일부 신흥국가에선 외화자산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

대신 외환보유액이 급증했다. 중국의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이 환율 하락을 억제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들이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을 촉진시켰다. 수출촉진을 위해 자국 통화를 저평가시키고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는 현상은 마치 초기의 중상주의와 흡사하다.

중상주의 정책의 핵심은 국가가 무역 상인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과 식민지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면세와 길드(guild; 중세 유럽의 동업자 조합) 규정의 적용을 완화해주는 등의 정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국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국 통화의 저평가를 통한 수출촉진 성장 전략은 과거 중상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몇몇 학자들은 최근 몇몇 신흥국가들의 외환보유고가 급증하는 현상을 금융 중상주의(monetary mercantilism)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 韓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 GDP의 1.16 ~ 3.7%

환율의 인위적인 저평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금

외환보유액 증대는 투기자본의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자본의 역류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을 가진 유동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외부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방화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외환보유액이 많은 국가는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다. 설령 투기공격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용 중상주의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우선 경제의 과열과 물가상승 그리고 보유한 외국자산과 국내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재정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 개발도상국가의 민간 부문이 해외에서 자본을 차입할 때 지불하는 단기이자율과 보유한 외환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자율 사이의 차액을 5%로 설정했을 경우, 2000년대 이후 개도국 보유액 외환의 사회적 손실은 GDP의 1% 수준으로 추산했다.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추산된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은 로드릭 교수의 추산보다 높다.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중국의 사회적 비용은 GDP의 1.9%와 5.9% 사이인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경우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은 GDP의 1.16~3.7%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막대하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기차입의 감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의 특별인출권)의 증액 및 IMF 포지션 쿼터의 증액을 통한 유동성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아시아 지역통화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부족한 외환 유동성의 공급도 가능할 것이다. **박**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철환**  
이주대 명예교수  
chkim@ajou.ac.kr

# 자산거품 붕괴,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과 실물의 제반 불안요인이 상호 인과 관계를 지니고 전이되면서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나라경제』 2012년 4월호 「한국경제의 복병,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붕괴」 참조). 부동산 등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는 가계부채 부담을 증폭시키고 유동성시장을 경색시켜 원화가치를 급락시킬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금융 부문의 불안요인은 내수와 수출의 동시 침체, 성장-물가-고용의 딜레마 상황을 심화시키며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원화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지 않는 것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가 환율요인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장-물가-고용의 딜레마란 성장정책이 고용증가로 연결되지 못한 채 물가만을 올려 중산·서민층의 생활고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거품 붕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면서 장기침체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 통화정책보단 LTV·DTI 등 규제대상의 선별·미세조정 필요

거품 붕괴 대책의 기본방향은 자산가격 급락의 피해를 최소화해 시장과 경제를 연착륙(soft-landing)시키는 데 있다. 연착륙이 중요한 까닭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현재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회복의 모멘텀 역시 작아져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콜금리 등 통화정책 대신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규제,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 규제대상을 '선별'하고 '미세조정'하는 수단을 통



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을 전매차익 추구를 위한 재테크의 장으로부터 건전한 실물투자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향후 부동산시장은 서민 임대주택의 확대 보급,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과 같은 개발사업을 통해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장으로 바뀌 나가야 한다.

주식시장 역시 기업공개(IPO), 부실채권 유통화, 기업구조조정 등 본연의 목적인 기업의 장기자금조달 및 생태계 혁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인식도 '보유'에서 '이용'으로 바꾸며 자산가치 평가 방법도 이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의 주택소유를 보장하면

## 거품 붕괴 대책의 기본방향은

자산가격 급락의 피해를 최소화해 시장과 경제를

연착륙(soft-landing)시키는 데에 있다.

콜금리 등 통화정책 대신 LTV 및 DTI 규제,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

규제대상을 '선별'하고 '미세조정'하는 수단을 통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침체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차입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다수의 가계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되거나 주택을 상실할 우려에 사로잡혀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개인채무자의 부담경감, 주택가격의 폭락방지를 통한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담보채권의 분해(strip-down)를 허용하는 「연방도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참고로 담보채권의 분해는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계속 소유하도록 하면서 담보채권의 가치를 담보물의 시장가치와 차입액 중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때 부동산경기가 주저앉아 담보물의 시장가치가 차입액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그 차액만큼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담보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경기침체기에는 담보물을 처분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가계의 주택소유를 보장하면서 경제를 안정화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채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담보권 신탁(security trust)을 활용하는 것이다. 담보권 신탁은 위탁자(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만을 수탁자(신탁회사 등)에게 설정해 주고 은행 등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계약을 말하는데,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유보되고 수탁자는 담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당하면 같은 금액만큼 가계부채를 감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업의 과잉취업 인구를 제조업으로 유도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과 금융의 동시 안정을 추구하는 광의의 금융안정망 구

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나라경제』 2012년 3월호 「금융안정망, 틀을 다시 짜자를 참조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장기침체 진입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공급곡선의 우측이동을 통해 물가를 하향안정화하면서 생산을 늘리되, 생산의 증가가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해외 천연자원의 개발 및 투자, 대체에너지원 등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유발형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 과잉취업자의 전직(outplacement)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공급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취지는 미래 먹거리 산업 및 고용 창출에 있다. 하지만 신성장동력산업은 조립·가공산업, 대형 장치산업 등 구성장동력산업에 비해 생산유발효과가 작고 투자 회임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지원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다.

이와 같은 제약을 감안할 때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선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범정부·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산업의 과잉취업 인구를 제조업으로 돌리는 등 산업 간 구인·구직의 미스매치(mismatch)와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전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역시 중장기적 시야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산업에 걸쳐 장기 인력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며 취업정보를 생산·홍보할 수 있는 허브(hub)로서 '직무능력개발센터'(가칭)와 개발된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개별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할 '재취업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직무능력개발센터'와 '재취업지원센터'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것이 범정부·국가 차원의 전직지원 시스템에 해당한다. 김동환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dhkim@kif.re.kr

# 창의성으로 돌파하라

## 창의성

### 물구나무를 서서 거꾸로 보자

‘물구나무’나 ‘뒤로 걷기’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한다(물구나무가 안압을 올리기 때문에 녹내장에는 좋지 않다는 의사들의 견해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와 유사하게 잘 알려진 상식에 반하는 생각은 창의성에 좋다. 잭 포스터(Jack Foster)는 “아이디어는 반대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주어진 과제에 대해 일단 반대해 보면 아이디어가 충돌하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 때문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와 싸우면서 생겨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면 과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창의성의 대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메모를 작성할 때도 거울로 비춰봐야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울글씨’ 기법으로 글씨를 거꾸로 썼다. KT의 올레(Olleh)도 Hello를 거꾸로 읽은 것이다. 일본 교토의 호리바제작소 소개 팸플릿 ‘아비로(Abiroh)도 ‘호리바(Horiba)를 거꾸로 읽은 것이다.

### 발상을 바꾸자

강창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재임 시절 모든 직원에게 ‘발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거꾸로 된 한국지도를 나눠 준 적이 있다. 지도에서 북쪽이 위쪽이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특히 남반구에선 그렇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도는 북반구, 남반구를 가리지 않고 북쪽이 위쪽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한 ‘물구나무’로 백아서(McArthur)는 남쪽이 위로 가는 세계지도 제작을 판매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쪽을 위로 가게 만든 거꾸로 된 지도가 제작돼 판매되고 있다.

사진작가나 광고기획자들은 아름다운 것을 찍거나 만들어 전시를 하고 광고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1930년대 안드레 케르테츠(Andre Kertesz)는 시든 툴립을 찍었다. 아름다운 툴립보다 시든 툴립 사진이 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후에는 사진이나 광고에서 충격을 주기 위해 이런 발상을 많이 적용했다. 사



거꾸로 된 세계지도

거꾸로 된 한국지도

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면 빨리 편지가 배달될 수 있도록 할까’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지만, 베이징 ‘798 예술구’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지정한 날에 도착하도록 하는 ‘느림보 우체국’이라는 가게가 인기를 끌고 있다.

모기지론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장기로 자금을 빌리면, 금융기관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기관에 양도해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 자기 집을 담보로 연금과 같이 생활비 등을 용자받아 사용하고 사망 시에 은행이 그 집을 처분해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역저당제도(Reverse mortgage)라는 금융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현미경과 망원경도 뒤집기 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두 기구의 발명자가 유사한 것도 그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두 안경사 리페르세이(Hans Lippershey)와 안센(Hans Janssen)은 1590년 현미경을 만들었고, 얼마 후 1608년 리페르세이, 한스의 아들 안센(Zacharias Janssen), 메티어스(Jacob Metius)는 망원경을 발명했다.

위기는 기회다. 위험한 기회. ‘High Risk, High Return’(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크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한미 FTA도, 유가 상승도 생각하기에 따라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내 상황을 뒤집어 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 해를 만들자. **한글**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  
kwrho@mest.go.kr  
경제학 박사. ‘두뇌 개발’, ‘창의성’에 관심이 많으며, 생각을 꽃피우는 방법을 소개한 책 ‘생각 3.0’을 펴냈다.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는다. 마트에서, 병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등 내 개인정보는 공공정보가 된 지 오래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원하지 않으면 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제정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정책해설 Plus에서 꼼꼼히 짚어봤다.



새 정책을 말한다

# 민감 정보와 주민번호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나면 스팸메일, 홍보 문자·전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우리가 제공한 개인정보들이 제공할 때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마케팅 용도로 무단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업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최근에는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 외에도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해킹기술로 대형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내외에서 판매되기도 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2008년에는 유명 정유사와 온라인경매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고, 2010년에는 백화점,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출된 7천만건

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거래되기도 했다. 2011년에도 주요 포털 및 금융사 등에서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더구나 인터넷 동호회 가입이나 대형마트의 경품응모에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은 개인정보 유출 시 명의도용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이 만연하고 중요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온 것은 그동안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처리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사업자·비영리단체·헌법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전 처리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립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

〈표〉「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업종	현행	법 본격 시행
은행·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집항목, 목적, 제3자 제공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li> <li>수집된 정보를 홍보목적으로 임의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선택정보(기념일, 취미 등)를 구분 동의</li> <li>보험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별도 동의 필요</li> <li>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별도 동의 불필요</li> <li>홍보목적 수집, 제3자 제공에 대해 별도 동의 필요(거부 가능)</li> </ul>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집)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목적에만 사용 시 변경 없음</li> <li>의료법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 홍보에 진료정보 사용</li> <li>CCTV 임의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목적 사용 시 별도 동의 필요</li> <li>처리방침 공개, CCTV 안내판 설치</li> </ul>
소매점(마트) ※마일리지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집) 동의 없이 수집·이용</li> <li>주민등록번호 관행적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필요</li> <li>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 개인정보를 보험사, TM회사에 임의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li> </ul>
쇼핑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품이벤트)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에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집목적, 항목,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li> </ul>

터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조치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필수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수집한 개인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내판도 설치해야 한다. 넷째,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백신, 방화벽, 접근통제 등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실천문화 조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새롭게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은 이런 의무 조치사항들을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직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할 역량도 미흡해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6개월간(2011년 9월 30일~2012년 3월 29일)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교육·홍보·컨설팅을 통해 사업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계도기간 동안 총 5차례의 권역별 순회교육과 특별교육을 통해 사업자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1만 6천명을 교육했고, 사업자 필수 조치사항을 담은 진단지 38만부를 사업자협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포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홍보 및 조치사항 전파를 위해 사업자협회·단체의 임원들과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우수사례 공모·퀴즈대회와 같은 온라인 홍보와 SNS홍보단 운영, 주요 일간지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병

행 추진했다.

2011년 10월부터는 기술지원센터를 개설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보안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병원·학원 등 생활밀착형 27개 업종 255개 업체에 대한 찾아가는 컨설팅과 사례 전파로 법 이행을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와 지원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착시키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갈 수는 없다.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자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소홀히 다뤄온 사업자들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이미지 손실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는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고객에 대한 필수 의무다.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사업자협회·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업자협회·단체가 나서서 소속 회원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안내·전파하고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사업자협회·단체와 협력해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무료백신 보급,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CCTV 제조업체와 같은 중간 매개업체와의 협조를 통한 계도 등 다각적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9일 정부와 주요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사업자협회·단체들의 자율적 선도, 사업자들의 적극적 이행노력, 정부의 지원 등 범국민적 실천문화 조성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1]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cool@korea.kr

개인정보 유출, 왜 문제인가

# 내 삶을 누군가 훑치고 있다

지난 3월 개봉해 화제를 모은 영화 '화차'(火車)는 동명의 일본 소설이 원작이다.

「화차」는 이름도 나이도 주소도 모든 것이 가짜인 여인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 소설이다.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원작에서 흥미를 끌었던 장면은 그녀가 남의 신분을 위장하는 부분이다. 통신판매업체에 근무하던 여주인공은 아버지가 남긴 빚에 시달리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완벽히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비슷한 연령대의 고아이거나 가족이 거의 없는 여성을 찾아 살해하고 이름을 훑치려 한다. 여주인공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것이 바로 통신판매업체의 고객명단이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그녀로서는 해킹으로 고객명단을 손에 넣기 힘들다.

여주인공이 노린 것은 전산처리를 하고 난 뒤 고객들이 적어 낸 종이 쪽지다. 폐기처리를 위해 창고에 쌓여 있던 개인정보를 뒤져 최근 홀어머니가 죽고 고아가 된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을 찾아내 살해하고 그녀의 삶을 훑쳐낸다.

소설의 상황이지만 만일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인 것은 현실에선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30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그간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이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됐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던 병원·학원·

서비스업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입력 없이 회원가입도 가능하다. 공공기관 및 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1만명 이상인 사이트에선 반드시 주민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해킹으로 인한 옥션 회원 1,8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GS칼텍스 내부 직원에 의한 1,150만명 정보 유출, 2010년 중국발 해킹으로 신세계 백화점·아이러브스쿨 등 2천만건, 2011년 현대캐피탈 43만건 및 싸이월드·네이트 3,500만건까지 대한민국은 설 새 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시달려 왔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심지어 혈액형에 이르기까지 나의 개인정보는 공공정보가 된 지 오래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해킹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국내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는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거래 아이템이다.

하지만 이미 유출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내 정보는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화차」와 같은 소설 속의 피해 사례가 바로 나의 현실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필**



**장윤정**  
전자신문 기자  
linda@etnews.com

법 시행 후 달라진 점

#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별도의 동의 얻어야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분리·운영돼 왔다.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규율하고, 민간 부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서 규율해 왔다.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보편화됐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처리기준이 없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던 정보주체가 통합적인 일반법의 규율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형태와 상관없이 본인의 정보가 침해됐을 경우 부여받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 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특징은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들(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동시에 규율하는 다중규율체계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 시행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적용대상의 확대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법원 등 헌법기관, 각종 단체, 오프라인 사업자를 포함한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또한 적용범위는 전자파일 형태 외에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 이벤트 응모권 등 수기문서를 포함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 보호기준의 확립이다. 이 법은 정보주체

의 동의, 법령 근거 등에 의해서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허용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권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처리를 허용했다. 셋째, 개인정보 피해구제 절차의 강화다. 정보주체의 피해·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분쟁조정 범위를 민간에서 공공 부문까지 확대했다.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까지 논의된 관련 쟁점들을 잘 추려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적용의 혼선과 다수의 규제기구에 의한 중첩규제 등이 현재 문제되고 있으므로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일반법)에 맞춰 기존 개별(특별)법을 재정비하는 등의 후속적 입법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필**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lhwan@skku.edu

개인정보 침해 대응 어떻게?

#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처리방침 꼭 읽어보세요”

박희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팀장



개인정보를 침해 당했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희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팀장을 만나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고 내 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들어봤다.

### 주로 어떤 침해신고가 많은가?

주민번호와 명의 도용으로 가입하지 않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돼 있어 탈퇴를 하고 싶다는 유형이 가장 많다. 또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허술하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사업자가 최초에 수집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많이 접수된다.

### 주민번호 유출이 가장 많은 것 같다. 확인할 방법은 없나?

신용평가사(나이스신평, 서울신평, KCB 등)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핑몰, 포털 등이 나의 주민번호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진흥원의 ‘주민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통해서도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알 수 있다. 클린센터는 이용자들을 대신해 회원탈퇴 접수도 해준다. 혹시라도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됐다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정기적으로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피해구제 절차는?

우선 피신고인(사업자 또는 기관)에게 신고된 내용과 관련해 소명자료를 받고, 피신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신고인이 주장하는 신고내용 등을 검토해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안부,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법 위반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는 침해신고센터에서 상담 또는 고충처리 등으로 종결한다. 또 신고인이 개인정보 침해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도록 한다.

### 신고할 때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상관없지만 신고를 하려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문자나 메일을 받았다면 받은 시간, 발신자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이 있는 문자나 메일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선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는 해킹 등에 의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이 다수에 게 동일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단체소송제도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정보 관리, 잘 하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관심’이다.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처리방침만 읽어봐도 사업자가 내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http 뒤에 ‘s’가 붙은 것이나 브라우저 하단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 밖에 더 자세한 것은 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박희운

●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새 정책에 바란다

# 개인정보 ‘통합’ 관련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개인정보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제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민간 부문으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법제들을 단일화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존재했던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구글의 개인정보 사례처럼 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한계가 벌써 일부 드러나고 있다. 구글 사례에서 이슈가 된 문제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통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개인정보 통합을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측면에서 목적과의 부합성, 구체적 동의 여부 등을 가지고 위법성을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뿐, 개인정보 통합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부재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정보 통합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통합에 있어 명확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글에 ‘권고’했을 뿐 개인정보 통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글이 국내에 서버가 없는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식별된다 하더라도 해외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한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은 단순히 정책상 문서의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개인정보 통합과 통합된 데이터의 분석이 연계되기 때문에 구글이 빅브라더로서 개인의 프

라이버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한다. 특히 구글이 내세우는 이용자 편의성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기존 각 서비스에만 존재했던 개인정보들 간 서로 연결성을 제공해 개인정보의 침해를 더욱 쉽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구글의 광고 사업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구글은 개인정보의 통합이 자사의 서비스 간 동의를 통해 이뤄지고 차후 개인정보의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통합에서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 통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통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구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빅 데이터 시대에 새롭게 대두될 이슈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개인정보의 통합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연결성과 관련된 정보 통합에 대한 규제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구글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도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관리감독 기관과의 국제적 분쟁 및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에 관해 협력과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김종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jilim@korea.ac.kr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것만은 꼭!



- 1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용 금지
-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 5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
- 6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 7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
- 8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02-2131-0111,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경제정책해설

- 66 **농식품,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먹는다**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 69 **고용창출 목표 달성 못하면 기업보조금 환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  
지식경제부
- 71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터넷 벤처 키운다**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 농식품,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먹는다

##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

◎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 소비안전행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농림수산물부는 2009년 4월 농식품 소비안전정책 총괄부서인 소비안전정책관실을 신설한 이후 소비자정책과 식품안전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간 추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큰 틀의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소명을 반영해 소비안전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개선과제를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2012년 2월)으로 구체화했다.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식품안전 여건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안전행정 선진화를 위한 협력체계와 추진전략

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진 일류국가 수준의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행정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① 농식품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②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망 구축, ③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④ 소비자 참여 및 소통 강화, ⑤ 과학적 위험평가 기능 강화, ⑥ 식품안전 추진체계 강화 등 6대 전략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 GAP 등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활성화

첫째, 생산에서 소비까지 투명하고 일관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식품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현장 맞춤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을 활성화해 20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장-판매 모든 과정에서 HACCP(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적용체제를 구축해 안전축산물의 공급도 넓혀 나갈 것이다. 사전예방 관리대상도 농식품의 잔류물질 외에 생산환경(농지, 용수, 축사, 생산해역 등) 및 투입요소의 안전관리로

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안전생산 기반을 조성해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생산자용 '농식품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한다. 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농어가 및 업체 등 생산주체의 교육과 지원 등을 통한 역량강화 및 예방적 방제활동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변화하는 식품안전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망 구축이다. 위해요소의 관리대상이 다양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위생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 위해성이 높은 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학교급식 및 인증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생물 오염 예방 조치를 위한 영업자 규범을 마련하고 시설·관리기준 정비 및 관리 감독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도축장 위생관리를 실현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확대해 가고, 농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 가상훈련(CPX)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셋째, 멜라민·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출 사례 증가에 따른 수입 농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가축질병 위주의 수입위험



농림수산물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식품 관리 체계를 제시했다.

평가제에서 탈피해 상대국의 축산물 위생관련 제도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사전 위생평가 시스템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적정 수준의 동물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허용 후 일정기간(5년) 경과 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검사 및 통관 이후 원산지 단속 등 수입 농식품의 유통단계 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 식품 인증·표시제 정착시켜 운영기준 합리화

넷째,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소비자 참여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한다. 소통 대상을 기존의 소비자단체에서 생산자, 전문가, 언론, 식품업체가 참여하는 농식품안전 6자 협력체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평가 전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향식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소비자협력협의회' 및 소비자정책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인증·표시제를 정착시켜 운영기준을 합리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중적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교육도 넓혀 나갈 것이다.

다섯째, 신종 유해물질의 선제적 예방과 과학적 평가를 위한 위험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부처 내 분산돼 있는 농식품 위험평가 기능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본부 내 위험평가팀을 구성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평가기술 등 연구 강화(연구 네트워크)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및 검사 등을 위한 연구(R&D) 기반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것이다.

끝으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위해 식품안전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효과적인 식품안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국내외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과 업무협력을 긴밀히 하고 식품업계 및 생산자협회 등 이해당사자 간의 정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하고 영세 농가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기술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 김응본 농림수산물부 소비안전정책과장 ebkim@korea.kr



좀 더 알아보기

인증제는 통합하고

원산지표시는 표준화·체계화

오늘도 시장과 마트에서는 각종 상품들이 사고 팔린다. 소비자들은 가격을 비교하고 품질을 살펴보고 기능을 꼼꼼히 따져 물건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농수축산물 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소비자들의 선택은 '안전성'이었다. 전기제품이나 위험한 물건이 아닌 농수축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라니, 무슨 이유일까?

2009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식생활 불만족 요인으로 식품 안전성(64.4%), 식품 구입비용(14.5%), 가족의 건강(7.7%), 불규칙한 식사(7.6%) 등이 손꼽혔으며, 2010년 5월에 실시한 '식품 구매 시 고려사항' 설문조사에서는 안전성이 41%를 차지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신선도 35%, 가격 7.8% 순서다. 또한 지난해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11대 주요 관심과제에는 '안심 먹거리'가 선정됐을 만큼 안전을 중시하는 안심 소비 확대가 국민들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기술발전에 따른 신식품의 출현 및 생산, 유통 과정상 유해물질의 혼입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수급이 가는 대목이다. 수입식품에서 2009년 멜라민, 2011년 방사능 등 신종 위해요소들이 발견됐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함께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국의 식품안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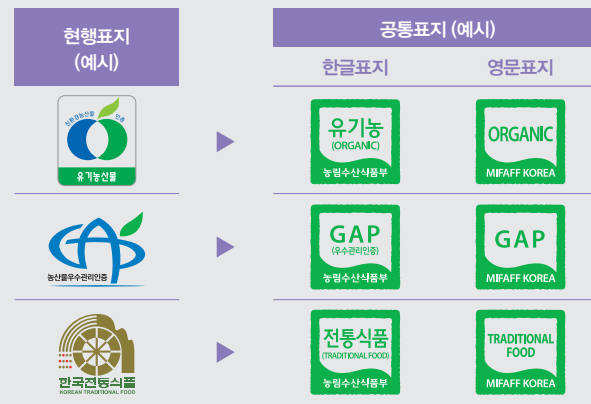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에 대한 주요 선진국들의 식품안전 정책은 어떨까?

미국은 식품안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예방 통제 기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EU 역시 식품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원칙을 설정하고 행동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사전예방원칙의 위험관리 행정을 강조하고, 생산자(운영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과토록 조치한 상태다. 일본은 식품안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농림수산물 내 소비안전국을 주무 선임국으로 개편하는 등 역할 확대에 힘쓰고 있다.

한국 농식품 표준제도 도입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7일 농림수산물부와 소비자단체의 상호 협력을 통한 소비안전정책의 새로운 기틀이 될 '농식품 소비 안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인증체계를 정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하는 '한국 농식품 표준제도'(KAS; Korean Agro-Foods Standards)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며, 인증제별 다양한 로고 사용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 농식품 인증 통합로고를 도입했다. <그림>처럼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 모양과 초록색을 기본색상으로써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했다.

<그림> 농식품 인증 통합로고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원산지표시제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발 벗고 나섰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원산지 제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 추진 기반을 구축한 상태. 그러나 지난해 '농식품 안전관리 인식 국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 70% 이상이 수입 농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농식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수요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는 그래서 더욱 반갑다. 또한 원산지표시 기재 시 글자 크기 및 표시 위치 등의 표준화·체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두 눈 크게 뜨고 메뉴판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 고용창출 목표 달성 못하면 기업보조금 환수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

○ 과거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에는 기업의 투자와 더불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국민들은 폭넓은 취업기회를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일자리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 됐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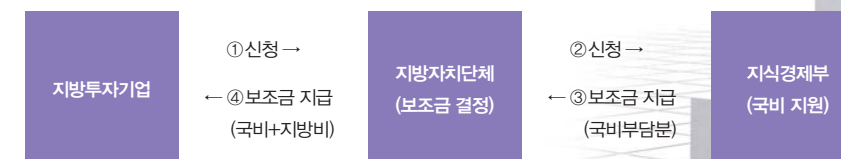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기업투자 지원

문제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다. 각계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결국 일자리 창출의 궁극적 주체는 기업이므로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쏟

을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FTA 등을 통한 신시장 개척,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유지한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비·지방비 매칭(matching)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지방에 신·중설 투자를 하거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산업용지 임대료나 매입비, 설비투자비의 일부 또는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의 실비를 지원한다. 그간 '지방이전 보조금'의 형태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했으나 2011년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개편하고 지방

<그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과정



〈표〉 보조금 지원기준

분류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이전기업 지원			신·중설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70:30)	입지(-) 투자(5%) 교육훈련	입지(20%) 투자(7%) 교육훈련	입지(40%) 투자(10%) 교육훈련	투자(7%) 교육훈련	투자(10%) 교육훈련
수도권 인접지역 <sup>1)</sup>	(50:50)	입지(-) 투자(3%) 교육훈련	입지(-) 투자(5%) 교육훈련	입지(15%) 투자(7%) 교육훈련	투자(5%) 교육훈련	투자(7%) 교육훈련
지원실적 저조지역 <sup>2)</sup>	(80:20)	입지(-) 투자(7%) 교육훈련	입지(30%) 투자(10%) 교육훈련	입지(45%) 투자(15%) 교육훈련	투자(10%) 교육훈련	투자(15%) 교육훈련

주: \* 입지보조: 기업이 지출한 부지매입비 또는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 투자보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의 일부를 보조, 교육훈련 보조: 기업이 신규고용인력을 교육할 경우 실비 보조

1) 수도권 인접지역: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된 기초지자체

2) 지원실적 저조지역: 최근 3년간 동 보조금 지원실적이 5% 미만인 광역지자체

신·중설기업도 지원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지방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는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업유치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자체는 146개 기업에 지원한 금액의 23.6배에 달하는 9조7천억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지방이전 결정 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지방투자 이후 경영성과가 개선됐고 생산시설 및 고용 확대와 지역소득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창출 기여도에 따라 보조금 차등 뒤

다만 정부는 올해 초 그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가능 강화다. 기업의 투자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등 투자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일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에 보조금을 지원해 투자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

업이 사전에 '투자액'을 제시하고 이것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투자액' 외에도 '고용창출 규모'를 함께 제시해 이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했다. 따라서 투자액과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미달성 비율만큼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시부터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한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더라도 보조금액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큰 기업은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지역편중 완화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고 국비 매칭비율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입장에서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비율이 늘어나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여러 지역에 골고루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견기업 지원 강화다.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중견기업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앞

으로 투자유치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방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지원비율을 적용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 부담은 대폭 제거해 나가되 기업이 고용·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는 철저히 실시해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투자 공동설명회 등을 개최해 지방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지역의 투자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투자 이후에도 기업이 해당 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정승희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장 chungsh23@hanmail.net

#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터넷 벤처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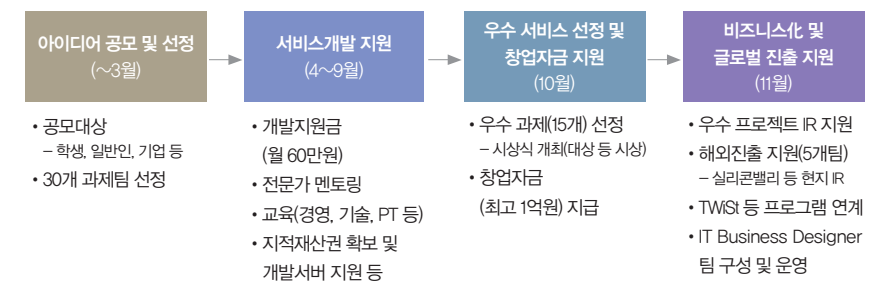
##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추진

◎ 2009년 후반 스마트폰에 의해 촉발된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 SNS 확산 등은 스마트 모바일 시대로의 패러다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앱과 관련한 부품사업이 벤처창업의 주요 아이템이 됐으며, 소셜커머스 등 SNS 관련 창업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007년 1만4천개에 불과했던 벤처기업이 2011년 약 2만6천개에 달하며 제2의 벤처 불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0년 1조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으며, 정보통신 분야는 98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0.1%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벤처투자는 매출 실적이 있는 벤처기업에 집중돼 있어 투자위험이 높으나 벤처의 토양이 되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설립 후 7년이 지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44.1%로, 설립 3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29.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T 분야는 혁신적인 벤처가 많이 탄생할 수

〈그림〉 글로벌 K-스타트업 육성과정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야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꽃피울 수 있고 유망 벤처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를 선도할 벤처의 요람, IT

방통위는 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2011년 12월 21일)에서 인터넷 중소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여기서 인터넷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유망 중소벤처의 청년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째로,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혁신적인 인터넷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국내외 벤처 캐피탈, 구글 등 포털사 벤처투자 프로그램과 연계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15일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학생·일반인·중소벤처기업(7인 이하)을 대상으로 31일간(2월 20일~3월 21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고,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의 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난 4월 9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올레스퀘어에서 '글로벌 K-스타트업' 출범식이 열렸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발된 30개 프로젝트팀은 4월부터 6개월간 기술 및 멘토링,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며, 개발기간을 갖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거쳐 최종 3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지난 4월 9일 개최한 '글로벌 K-스타트업' 출범식에는 선정된 30개의 우수 아이디어팀 외에도 2011년 우수 프로젝트팀으로 선정된 선배팀이 함께 참여해 창업과정에서 몸소 겪었던 역경과 극복과정, 창업에 대한 조언 및 성공담을 전해 30개 참가팀의 창업에 대한 도전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글로벌 K-스타트업' 출범식에 참석한 30개 우수 아이디어팀은 4월부터 6개월간 주요 포털사 및 이통사, 학계 등 전문가의 기술 및 비즈니스 멘토링, 개발·경영 교육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으며, 개발기간을 갖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독창성, 글로벌, 실현성 등을 평가해 시상 및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구글의 벤처프로그램과 연계해 실리콘밸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IT 스타트업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This Weekend in Startup(TWiSt) 프로그램'을 서울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글로벌 무대에서의 홍보와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IT 전문가,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비즈니스에 관한 컨설팅·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유망 모바일 중소벤처 업계

의 청년인재를 확보하고 개발자 지원을 위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주요 이통사들과 함께 각 지역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SMAC; Smart Mobile App Center)를 5개 광역 경제권별(부산, 광주, 대전, 대구, 원주)로 확대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SMAC 지역 거점 센터에는 앱 개발 및 테스트에 필요한 국내외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최신 단말 100여대 및 데이터 통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테스트용 서버를 구축하는 한편, 자체적인 앱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각 지역별 SMAC는 올해 중 개소식을 갖고 지역 개발자 양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모바일 취업박람회 개최로 전문인력 확보 계획

또한 차세대 모바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생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취업박람회(Mobile Job Fair)를 모바일 분야 중소기업들과 합동으로 개최한다.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인사(HR) 전문가들의 취업 컨설팅, 교육 및 상담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모바일 서비스 현업 개발자와의 멘토링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개발자를 선정·육성토록 지원하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청년개발자 인턴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IT 교

육기관의 3개월 이상 과정 수료 이수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무 프로젝트를 6개월간 수행하면서 육성할 방침이다.

이처럼 인터넷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운영 중이다. 방통위의 추진정책을 통해 혁신적 벤처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과 상상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토양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jrkim@kcc.go.kr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나만의 새로운 직업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창직(創職)이다. 『나라경제』가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청년들의 창직사례'를 소개한다.

세상에 없던 직업 ●●

# 創職

## 디자인 유통 중개인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나만의 제품'을 제작

창직의 성공 요인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9세기 카네기는 산업혁명 이후의 공업화 시대를 바탕으로 철강 왕으로 군림했고, 20세기 빌 게이츠는 PC가 보편화되는 시대 흐름을 타고 소프트웨어 시장을 평정했다. 21세기,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사업가는 단연 스티브 잡스다. 그가 고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성공신화의 중심에는 디자인이 있다. 사람들은 대량생산 체제 아래 규격화된 상품보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품을 소비하려 한다. 디자인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는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여기 자신을 '디자인 유통 중개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다. 국내 최초의 디자인 오픈마켓 '바이미닷컴'(http://www.vaimi.com)의 서정민 대표(30세)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학 재학시절, 운 좋게도 대기업에서 단기로 근무할 기회가 찾아왔다. 혈기왕성한 나이로 의욕이 넘쳤지만, 사회 초년생인 그에게 주어진 일은 제한돼 있었다. 회사 안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음을 느낀 그는 자연스럽게 창업을 생각하게 됐다. 창업 커뮤니티에 가입해 스터디를 하고 강연회를 다니는 동안 마음 맞는 창업멤버도 만났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여성이 운전하고 여성 탑승객만 태우는 '여성전용 택시'를 아이템으로 1년간 공을 들였지만, 허기를 받지 못해 허무하게 끝이 났다. 택시사업이 인허가 사업이라는 것을 몰랐던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아이디어만 믿고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서정민은 자신의 역량에 맞고 사업화가 용이한 아이템을 찾는 데 골몰했다. "대중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폈어요. 당시 스킨(미니홈피 배경화면)의 판매량이 급증하던 시기였는데, 거기서 개성 표현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트렌드를 읽으니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본 아이템이 정해지자 그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100명 이상의 디자이너를 직접 만났다. 국내에서 매년 3만6천여명의 디자이너가 배출되지만 이들 중 현업에 종사하게 되는 사람은 7%에 불과하며, 공모전 외에는 디자인 콘텐츠를 유통할 경로가 없음을 알게 됐다. 수요와 공급 면에서 모두 사업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는 지체 없이 '디자인 유통 중개인'으로 나섰다.

"디자인을 판매하려는 디자이너와 개성 있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이미닷컴'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나만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어요. 티셔츠를 비롯한 각종 의류, 휴대전화 스킨, 머그컵 등에 자신이 선택한 디자인을 입혀 달라고 구매신청을 하는 거죠."

최근 개인의 개성 표현을 중시하고 이를 존중하는 경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맞춤형 작 서비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바이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2011년 16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는 말한다. "창직을 위해선 어떤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할지, 공급은 가능한지를 의도적으로 찾아내야 해요."

바이미가 2007년에 오픈했고 준비기간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서 대표의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이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 김룡형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연구원 mulpure3001@daum.net

▼ 서정민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바이미닷컴'



## 총선과 한미 FTA

Reuters, "South Korea's unloved chaebol" (2012. 4. 6)  
Wall Street Journal, "Korea and the politics of innovation" (2012. 4. 10)  
Wall Street Journal, "South Korea's ruling party stages surprise election comeback" (2012. 4. 12) 등

올해는 미국·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와 관련된 뉴스가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도 올해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면서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11일에 치러진 총선에 대해 외신들은 당초 민주통합당의 압승으로 점쳐지다가 예상 밖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새누리당의 선진을 현직의원을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등 쇄신을 단행한 결과로 분석하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한미 FTA 폐기 주장 등이 유권자들의 반감을 산 것이 패인이었다고 진단했다.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은 4월 12일자 기사에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무역이 중요한데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에 일관적이지 못한 입장을 보이면서 보수진영의 유권자들이 더욱 결집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닛케이도 12일자 기사에서 한미 FTA 재검토 등의 급진적인 정책 때문에 유권자들이 민주통합당에 경계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민주통합당은 대선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Reuters는 총선을 앞두고 고조된 정치권의 재벌 분위기를 다룬 4월 6일자 기사에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재벌들의 부도덕성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재벌 개혁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10일자 기사에서 한미 FTA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대조적인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의 경제정책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는 올해 총선과 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날인 지난 4월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에 마련된 한투표소에서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

선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된 이래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FTA로 인한 시장 개방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책 환경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한국경제의 정책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총선 직전인 4월 10일자 칼럼을 통해 새누리당이 진재벌 성향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입증해보이고자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정치권에 난립하는 복지공약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과도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 약속하는 복지국가가 현재 한국경제를 위한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WSJ의 주장이다. **박영**

● 정리 이지연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 미국 국적의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가 마지막일까?

Economist, "Hats off to Ngozi" (2012. 3. 31)  
Financial Times, "The right leader for the World Bank" (2012. 3. 28)  
Le Monde, "Jim Kim, celui qui ne perd pas le nord" (2012. 3. 28)  
Le Monde, "Jim Yong Kim ou la mondialisation à reculons" (2012. 4. 18) 등

세계은행 차기 총재직에 김용 美 다투머스대 총장이 선임됐다. 이번 세계은행 총재 선임은 김용 총장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외신들도 그 어느 때보다 총재 선임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70년에 가까운 세계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의 후보가 총재직을 두고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이, IMF 총재는 유럽이 독점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으나 최근 선진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에서 영향력이 커진 신흥국들 사이에 이러한 독점 관행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도국 진영의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콜롬비아 전 재무장관(중도 후보 사퇴)이 나와 미국 정부가 후보로 지명한 김용 총재와 세계은행 총재직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

Financial Times(이하 FT) 등 유럽 언론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외신들은 이웨알라 재무장관이 경력이나 능력 면에서 후보들 중 세계은행 총재로 가장 적합하며 이웨알라 장관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보건 전문가로 저개발국 빈곤 퇴치 등의 경험은 많지만 경제·금융 분야의 경력이 없어 세계은행 총재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언론은 김 후보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이웨알라 장관을 제치고 총재가 된다면 세계질서가 바뀌고 있음에도 자국의 총재직 독점 관행을 고집하려는 미국에 세계가 휘둘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월 31일판 英 Economist는 경력과 경제 사상 등의

면에서 세계은행 총재로 부적합한 김 총장이 후보로 지명된 것은 서구의 오만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결국 16일 세계은행 이사회가 김 총장을 세계은행 총재로 확정하자 佛 Le Monde는 4월 18일자 1면 사설을 통해 미국은 세계화가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세계화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꼬집었으며 단일 후보에 대한 지지로 뜻을 모으지 못한 신흥국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FT 등 미국의 총재직 독식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웨알라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한 외신들조차 이번에 미국의 독점 관행이 바뀔 것으로 전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외신들은 세계은행 총재 선출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결구도가 형성된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Le Monde는 4월 18일자 사설에서 선진국의 총재직 독점 관행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3월 28일자 칼럼에서는 김용 총장이 미국 출신으로는 마지막 세계은행 총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 세계은행 신임 총재는 7월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총재에게 수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총재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신흥국들의 영향력 확대 열망과 선진국들의 기존 입지 고수 의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박영**

● 정리 강지은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 초경쟁 시대, '의미 있는 불균형을 더 불균형'하게

요즘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주유소들은 어쩔 수 없는 가격상승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러나 더 이상 SK주유소의 경쟁기업은 동종업체인 GS칼텍스나 S-Oil만이 아니다. 이제 주유소가 경계해야 하는 기업은 타 업종의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업체인 베타 플레이스를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화석연료로 차가 움직였지만 친환경적 대체연료인 전기로 가동하는 차가 등장하자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앞다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며 이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켰다. 또한 소비자들을 더욱 현혹시키기 위해 베타 플레이스는 일반 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듯 손쉽게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전기충전소를 상업화했다. 이제 주유소들이 전기충전소와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 무경계의 시대, 속도의 시대, 승자독식의 시대

이 같은 현상을 '초경쟁 시대'(hyper-competition)라 한다. 초경쟁 시대의 특징은 크게 무경계의 시대, 속도의 시대, 승자독식의 시대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무경계의 시대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타 업종과 활발하게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종업 경쟁자라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경쟁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며, 연관돼 있을 것 같지 않은 타 업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속도의 시대다. 초경쟁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빠르게 진행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신제품 교체 주기는 날

이 갈수록 빨라져 현재는 2~3개월로 단축됐다. 최신 스마트폰이 어서 샀는데 어느 정도 휴대폰에 적응이 된 순간 이미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경쟁 시대에는 승자독식이 만연한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면 이윤도 모두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 20대80의 시장점유율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1대99까지 변화하는 극단적인 롱테일 현상도 가능해졌다.

초경쟁 시대는 경쟁이 가열됐다는 의미를 넘어 예전에는 동종업으로 한정됐던 경쟁대상을 규정짓는 것이 불가해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경쟁의 승패에 따른 결과가 보다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새 시대의 도래가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에겐 경쟁이 상당히 피곤해졌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승자독식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 즉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특화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 도요코인 호텔

그럼 초경쟁 시대에 기업들은 모두 경쟁의 제물이 돼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도태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그 하나의 방법이 '불균형한 것을 더욱 불균형'하게 만드



일본 도요코인 호텔의 객실 내부. 도요코인 호텔은 다른 호텔들처럼 연회장, 피트니스 클럽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숙박과 확실한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는 전략을 통해 일본 내 객실 가동률 1위를 달성했다.

는 것이다.

일본 호텔업계 최강자가 된 도요코인 호텔은 일본 내 객실 가동률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성공한 호텔기업으로 꼽힌다. 현재 일본 내 208개에 달하는 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이 5천명을 넘는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률이 무려 95%에 육박하는 도요코인 호텔에 손님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고객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 이상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도요코인의 성공 비결은 다른 호텔에 비해 뒤처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 대신, 자신들의 특화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 전략을 택한 것에 있다. 주 고객인 비즈니스맨들을 고려해 IT 인프라를 구축, 방마다 무선 랜을 설치하고 로비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노트북과 프린터를 설치했다. 또한 업무 공간과 수면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세심한 공간 구분과 개인적인 세탁·다림질 기구를 구비하고 정통 가정식을 제공함으로써 감성을 자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도요코인은 대형 고급호텔인 힐튼재팬, 기존 비즈니스 호텔인 히카다 호텔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서비스, 높은 품격, 타깃 마케팅, 객실 품질 등의 부문에서는 크게 경쟁력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한 경험, 가격 합리성, 접근성 또는 고객 특화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 경쟁자보다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속성을 강조하라

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동서식품의 맥심을 생각할 수 있

다. 동서식품은 커피 제조를 수입에 의존하던 1970년, 국내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시장에 도입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품군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네슬레가 유독 한국 커피 시장에서 좀처럼 맥을 못 춘 이유는 동서식품의 불균형 전략 때문이었다. 동서식품은 어느 일반 식품기업처럼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다각화 전략을 버리고 커피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금까지도 커피 시장에서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던 동서식품은 커피 믹스의 진하고 부드러운 맛이 아닌 오직 커피향만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 프림 없이 커피만 들어 있는 '아라비카 100'을 출시하면서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자신이 강하게 부각되는 경쟁력을 더욱 발전·특화시킴으로써 20년 동안 커피 시장에서 독점이 아닌 절대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불균형 전략은 "우리가 경쟁사보다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가 경쟁사보다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속성을 강조하라"에 성공의 포인트가 있다. 물론 경쟁 시대에도 차별화 전략은 중요했다. 하지만 초경쟁 시대에는 일차적인 단계를 넘어 '차별화 전략' 자체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과연 초경쟁 시대의 차별화 전략은 어때야 할까. 먼저 제공되던 가치를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경쟁사보다 고객에게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속성을 강조해야 한다. 단, 이때 속성은 기존의 경쟁자가 중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전의 차별화 전략이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초경쟁 시대에는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우수한 것보다는 한 가지 특정한 면에서 확실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남들과 '다르고, 동시에 새로운 것'이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초경쟁 시대가 요구하는 차별화이며 한 가지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는 고객이 두꺼운 마니아층을 이루게 된다.

자신만의 색깔을 갖는 것,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는 것, 그것으로 고객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의미 있는 불균형을 더 불균형하게 하는 것이 초경쟁 시대의 해답인 것이다. ■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kimsoo2@snu.ac.kr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원 박사, 생산전략, 공급사슬관리(SCM), 서비스운영관리를 전공했으며, 서울대 경영대학 부학장 및 서울대 경영정보연구소를 맡고 있다.

# ‘수준높은 교사’ 어떻게 만들어지나?



교육이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의 동인이며, 학생들이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 높은 교사에 의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OECD, 미국 교육부, 국제교원단체연합은 공동으로 각국의 교육장관과 교육행정 관료, 교원단체 의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교원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인 ‘교직에 관한 국제정상회의’를 매년 3월 뉴욕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교직에 관한 국제 정상회의’(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에서는 교사양성 및 임용, 현직 교원 연수, 교원평가 및 보상 등 교원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각국의 우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이 회의의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원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필자 주: 이 글은 2011년 회의의 백그라운드 페이퍼 ‘Building a High-Quality Teaching Profession’, 2012년 회의 ‘Preparing Teachers and Developing School Leaders for the 21st Century’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 교사는 끊임없이 갈고닦아야 하는 고차원의 지식노동자

30년 전만 해도 교사는 본인이 가르친 지식을 학생이 평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지만 오늘날엔 상황이 달라졌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해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과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직업세계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평생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복잡한 사고와 일하는 방식을 습득해 컴퓨터로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 및 교육방식, 학습의 개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엔 교육을 제공하는 쪽에 초점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과거에는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오늘날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맞는 지혜를 생산해내야 하며, 과거에는 표준화와 순응이 교육의 목표였다면, 오늘날에는 독창성, 개별화된 교육적 경험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야 하는 고차원의 지식노동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만성적 교원인력 부족과 우수 인력이 교직에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우수 신규



싱가포르 국가교육연구소(NIE)에서 대학 4학년 학생들이 과학 수업을 듣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교육부가 예비 교사들을 고용한 뒤 NIE에서 1인당 연간 7만 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하며 교사로 양성한다.

교사 채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0년부터 교원채용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 예비 교사들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 교사 인력 풀을 넓히기 위해 교원자격 획득 경로를 다양화한 결과 2006년 현재, 교사자격 획득 경로가 32가지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우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들에게 타 직종의 대졸자 임금과 맞먹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는 교사 자격기준을 높이고 교실수업 및 근무조건에 대해 교사가 갖는 자율성을 대폭 높여 교직이 더욱 선망의 직업이 되도록 했다.

타 직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위치 및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해 우수 인력이 대거 교직에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정책은 아마도 다양한 인력(직업현장 교사, 남성 교사, 다문화 인력 등)을 교직으로 입문시키는 방안과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일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사범대학 이외의 전공자들에게 교직을 개방하고 타 직종 경력을 교사봉급 산정 시 인정하며, 교원자격증 취득 전이라도 사범대 학생이 교사로 일할 수 있게 하고, 파트타임이나 원격교육 또는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교원자격에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교사가 1~2년간 수업은 적게 하면서 멘토교사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수습기간을 두는 국가가 많은데, 이러한 수습기간은 교사 자신 및 학교 당국이 해당 교사에게 교직 적성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OECD 교육지표 조사에 참가한 26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신규교사에 대한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OECD ‘교수-학습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에 의하면 90%가량의 교사가 조사시점 대비 지난 18개월 기간 중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평균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전문적 자기개발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과목 내용 자체에 대한 연수보다는 ‘특별한 교육 수요를 갖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정보통신 활용 교육’,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서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콜로라도, 미주리, 뉴저지, 버몬트주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함께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들 주정부 교원정책의 특징은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정, 신규교사에 대한 수습 및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교원자격·교육방식에 대한 기준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주 차원의 기구 또는 전문 위원회 설치,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들 수 있다.

보수가 교직에 우수 인력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OECD 연구인 ‘교사가 중요하다’(Teachers Matter)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생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교장의 허용적 분위기, 근무여건, 자기개발 기회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교직과 관련한 임무 제공,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교사 멘토, 교사 연수 코디네이터, 학교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등과 같이



지난 1월 25일 국내 교육 대학의 구조개혁 및 교원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교 발전 위원회가 출범했다. 발전 위는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교원 글로벌화 추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 세계는 지금

《세계는 지금》은 OECD·WTO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루지는 정책이슈나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WTO 가입협상, 잘만 활용하면 시장빛장 풀 '열쇠'

다양한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퀘벡주와 같은 곳에서는 멘토교사, 특수업무 교사, 수석교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직경로를 개발해 이들 교사에게는 보수를 더 주거나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교사의 80%, “교원평가를 통한 피드백 정당해”**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들을 관리·감독하는데 교원평가를 활용했으나 최근엔 교원평가가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효과적 교원평가는 개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교사의 능력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성과 향상이라는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해야 하며, 정상회의에서도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교원평가 방식은 정부 주도(싱가포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부터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바탕으로 한 학교 주도 평가(핀란드, 노르웨이, 일본)까지 다양하며, 표준화된 학생평가, 교실 관찰, 학생설문, 동료평가, 교장 및 관리자 평가, 자기평가, 교사면접 및 포트폴리오, 학부모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실시방식도 여러 가지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안식년 제공, 학교 관련 연구 수행, 대학원 과정 지원, 연수기회 제공 등 다양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교수-학습국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교사의 80%가 교원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해 ‘위협’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정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수록 나중에 이 분야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

가에 대한 학교 문화가 건설적·협동적·조장적이라면, 교원평가에 대한 사전 우려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교원평가 결과와 보수의 연계에 대해선 항상 논란이 있어 왔다.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일률적으로 책정해 왔으나 최근 많은 국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웨덴에서 실시하는 교장과 개별교사와의 임금협상 정책일 것이다. 스웨덴 연방 정부는 교원보수의 최저 수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매년 학교장과 개별교사가 책정하고 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교원의 보수를 전문성 개발 목표달성을 통해 도달한 교원의 지식과 기술, 교원평가 결과, 취약지역 학교 근무 또는 특수 과목 담당, 학생의 성취수준 향상 등과 같은 요소와 결부시키고 있다.

교육이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교사의 질은 교사가 일하는 조직의 질, 교원 양성 및 임용의 질, 교원 연수 및 교원평가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교원의 양성에서부터 임용 및 경력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이 아닌 단편적 정책만으로는 21세기에 필요한 교원을 유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번 두 차례의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실은 재차 확인됐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 전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들 하던데, 그렇다면 요즘 WTO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주네네바대표부가 관장하고 있는 경제통상업무의 상당부분이 WTO와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미국, EU 같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로 부상한 데 반해 WTO 차원의 추가 교역자유화 협상은 장기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음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은 아니다. 그러나 WTO의 기능은 DDA 협상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교역자유화 협상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새로운 규범 정립이라는 WTO의 ‘입법 기능’일 뿐이다. 각종 정례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존하는 다자통상규범을 운용하기 위한 ‘행정 기능’, 다자통상규범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법 기능’ 역시 DDA 협상 못지않게 중요한 WTO의 기능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통해 WTO는 규범에 기초한 다자통상체제로서 국제교역 흐름을 원활히 하고 회원국의 교역제도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 중 어느 쪽에도 분류하기 어려우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WTO의 기능 중 하나는 회원국 확대에 관한 것이다. 1995년 1월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WTO는 그간 중국(2001년 12월), 대만(2002년 1월), 캄보디아(2004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2005년 12월), 베트남(2007년 1월), 우크라이나(2008년

5월) 등 25개국이 추가로 가입해 2012년 4월 현재 총 153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카보베르데(Cape Verde, 아프리카 대륙 서안의 섬나라)가 2008년 7월 WTO에 가입한 후 새로 가입한 회원국이 없으므로, 153개 WTO 회원국은 약 3년 반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가운데 러시아, 몬테네그로, 사모아, 바누아투 등 4개국에 대해 지난해 WTO 회원국들이 가입패키지를 최종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가입을 초청했다. 이들 4개국이 국내 기준을 마치고 그 사실을 WTO 사무국에 통보하면 회원국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WTO 회원국은 157개국이 된다.

**현재 26개국이 WTO 가입 위해 협상 중**

현재 WTO 가입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벨라루스,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모로스,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라오스, 레바논, 라

1995년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WTO는 그간 중국, 대만, 캄보디아 등 25개국이 추가로 가입해 2012년 4월 현재 총 153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중국의 WTO 가입 10주년 기념행사 모습.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했다.



이베리아, 리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예멘 등 26개국이다. 이 중 상당수는 10년 이상 가입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알제리, 벨라루스, 부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은 WTO 출범 이전인 GATT(WTO의 전신) 체제하에서 가입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한편 라오스, 예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세르비아 등 5개국은 가입작업반 보고서가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시장접근 분야 양자협상도 상당부분 타결돼 올해 말까지 WTO 가입협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WTO 가입절차는 가입국(acceding country)과 기존 WTO 회원국 간의 협상을 통해 가입국의 가입의정서(accession protocol)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2조는 '국가 또는 자신의 대외 무역관계 및 이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독자적 관세영역은 자신과 WTO 사이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라케쉬협정에 의해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WTO와 가입국 간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이뤄지므로 가입국과 WTO 회원국 전체 간의 협상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특정 국가가 WTO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특정 국가가 WTO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WTO 일반이사회(각 회원국의 주재네바대표부 대사급이 참석하는 WTO의 의사결정기구)에서 해당국의 WTO 가입작업반을 설치하기로 의결한다. 둘째, 가입작업반 의장(통상적으로 회원국의 주재네바대표부 대사급이 수임) 선임 이후, 가입국은 자국의 무역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대외무역정책 보고서(memorandum on foreign trade regime)를 WTO 사무

국을 통해 각 회원국에 배포한다. 셋째, 가입작업반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가입국의 외환제도, 수출입절차, 관세 및 통관제도, 비관세제도, 투자제도, 지적재산권 등 각종 무역 관련 제도에 대해 질문을 제출하고, 가입국은 이에 답변을 제출한다.

#### 가입신청국이 시장개방 요구 수용해야 하는 '일방적 협상'

넷째, WTO 사무국은 쟁점요약서(factual summary of issues raised)를 작성·회람하고, 각 이슈별로 논의가 구체화되면 WTO 사무국이 가입작업반 보고서 초안(또는 보고서 초안 주요 요소)을 작성·회람한다.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질의와 가입국의 답변을 통해 보고서 문안이 수정되는데 이 과정이 가입작업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반복되며 최종안이 확정된다. 가입작업반 보고서는 회원국 대표와 가입국 협상대표와의 대화형식으로 구성되는데, 실제로 보고서에 기술된 가입국 협상대표의 약속은 최종적으로 가입의정서의 일부를 구성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같은 다자간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 track)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입국은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과 관련해 양허안을 작성, 시장접근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는 개별국과 양자협상(bilateral market access negotiation)을 진행하고 타결되면 합의 사항을 WTO 사무국에 송부한다. 양자 간의 합의사항은 MFN(most-favoured nation) 원칙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끝으로, 가입작업반 보고서, 양자협상 결과를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접근 관련 양허표 등이 가입의정서 일부를 구성하며 이들의 총합, 즉 가입패키지가 가입작업반 최종회의를 거쳐 WTO 일반이사회(또는 각료회의)에서 승인되면 WTO 차원에

서의 가입절차는 종료된다.

가입협상은 대체로 1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며 작성해야 하는 서류만도 수천 페이지에 이를 만큼 방대하므로 가입국 정부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상품양허협상은 기본적으로 1만여개로 상세히 분류된 품목별로 관세감축 일정을 다수 회원국과 협의하는 작업이고, 서비스양허협상도 155개로 분류된 분야별로 국내 제도를 감안해 시장개방의 범위와 내용을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과정으로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시장접근 외에도 수출입제도, 투자제도,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권 제도 등을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양자협상과 다자협상 모두 국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여러 회원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타결점을 찾아야 하므로 때로는 가입국 최고위급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가입협상에 참여하는 회원국 담당관에게도 WTO 규범 전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가입국의 다양한 무역 관련 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가입작업반 회의는 153개 WTO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하는데 가입국의 시장규모, 경제관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3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TO 가입협상은 일방적 협상이다. 가입국은 다른 WTO 회원국에 시장개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가입작업반 회의에 참여하는 WTO 회원국의 입장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접근과 관련해 단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반대하거나, 국내 제도 정비와 관련해 단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가입작업반 보고서상 새로운 약속을 요구할 경우 가입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작업반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해당국의 주재네바대표부 참사관 또는 서기관급 담당관이 단독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가입국의 가입협상단은 대체로 주무부처 차관보급 이상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실제로 지난 3월 개최된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에티오피아 산업부 장관, 라오스 상공부 장관, 타지키스탄 경제개발무역부 장관, 세르비아 경제지역개발부 차관보 등이 해당 국가 가입작업반 회의에 가입협상단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 해외진출 원하는 기업, 가입협상 최대한 활용해야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가입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가 그 요구를 상당부분 관철시킬 여지가 있다. 예컨대 우리 가전업체가 알제리 시장에 수출하려는 품목의 관세가 너무 높아 관세인하를 요구한다면 알제리 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 현지 투자와 관련해 애로가 있더라도 양자협상이나 다자협상 계기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WTO 규범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요구가 가입절차를 지연시켜 가입국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WTO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자협상의 특성상 주요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합의한 이슈를 최종 단계에서 우리만 단독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협상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적절한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올해 안에 WTO 가입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라오스와 예멘의 경우 시장접근 분야 양자협상이 모두 타결됐으나, 우크라이나와는 장기간 타결이 지연되고 있어 지난 3월 개최된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다수 회원국 대사급이 회의에 직접 참여해 이구동성으로 우크라이나에 조속한 양자협상 타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3년 반 동안 WTO에 가입한 신규 회원국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 올해 안에 5개국의 WTO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이는 다자통상체제의 영역 확대 측면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현재 WTO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26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이 있다면 WTO 가입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기업의 관심을 기대한다. **홍승인**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재네바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홍승인  
주재네바대표부 WTO 총괄 참사관  
sihong95@mofat.go.kr

# CAP(공동농업정책) 개혁,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EU에서는 2014년 이후에 적용될 공동농업정책 개혁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 도입 방안(greening the CAP)이 논의 중이다.

최근 벨기에 브뤼셀의 중심가에 있는 스퀘어 컨퍼런스 홀에서 'Forum for the Future of Agriculture'이라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회의는 농업·농촌·식품 분야의 국제회의로서 농업인, 식품 유통 관련 업계, 환경 관련 단체,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회원국 등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 한 농업인이 패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유럽의 농업·농촌정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던 필자는 패널의 답변이 궁금했다. 공동농업정책은 올해로 태동 50년째를 맞고 있는 EU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복잡한 정책이다. 수년째 CAP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회원국별로, 농가 규모별로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등으로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개혁을 정의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이 바로 답변이 궁금했던 이유다.

### 가장 오래된 EU 공동정책 ... 전체 예산의 40% 차지

EU 공동정책으로서의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이하 CAP)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2년에 태동했다.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유럽의 6개국으로 구성된 것이 1957년이니, CAP는 유럽의 공동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책인 셈이다. 역사만 오래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중기재정계획(2007~2013년)에 따르면 EU 예산의 약 40%를 CAP가 차지하고 있다. 농업정책은 EU의 공동정책 중 가장 통합이 진전된, 즉 회원국 정부 예산보다는 EU 공동예산 사용 비중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5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CAP는 유럽 농업·농촌의 다양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그 모습을 변화시켜 왔다. 그 변화의 과정은 다음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온 과정이었다.

- ① 농산물 시장의 본질적인 가격 변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농업 경제와 농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 ② 농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가.
- ③ 환경보존과 농촌유지에 관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

세계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선 전후 경제회복을 위해 안



지난 1월 23일 벨기에 유럽연합본부에서 열린 공동농업정책 50주년 기념식에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은 공동농업정책이 유럽 농업을 현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적 식량생산이 중요한 과제였다. 1957년 EEC를 탄생시킨 로마조약에서는 농산물 생산 증대, 농업인 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이 중요시됐다. 이에 따라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수준을 정부가 보장하고, 역내 시장에 과잉 공급된 농산물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등의 농업보호정책이 시행됐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유럽의 식량생산은 증대했고, 안정적 식량 안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됐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CAP는 농산물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계속 진화됐고, 이를 위해 농업 예산이 과다지출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당시 유럽에서는 정부가 수매해 비축한 농산물로 와인이 호수를 이루고 버터가 산을 이룬다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였다.

1990년대 초부터 이러한 비정상적인 농산물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됐다. 개혁의 큰 방향은 농산물에 대한 지원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을 지지해 간접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던 정책에서, 정부가 (농산물 가격기구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정책)으로의 변화다. 이러한 시장 지향적인 개혁 방향의 기초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CAP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농업'

다시 서두의 회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당시 패널 중 한 사람이었던 파올로 디 카스트로 유럽의회 농업농촌 위원회 의장은 현재 진행되는 CAP 개혁의 핵심 키워드

는 'Greening'이라고 단언했다. 미래의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아래에서는 디 카스트로 의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Greening 정책'(이하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개혁을 위해 최근 EU에서 논의되는 친환경적 정책 제안을 'Greening 정책'으로 약칭)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기술해 보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CAP 개혁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U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정책이니만큼 EU 중기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2014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CAP를 논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다. 주요한 대외 변수는 현재 유럽경제의 위기상황이다. 그리스, 스페인 등 다수의 유럽 회원국들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유럽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EU 예산 편성도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절약해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CAP 예산의 절감이다. 영국, 네덜란드 등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회원국들이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CAP 예산 절감 주장에 대해 CAP의 중요성을 강변하는 측 논거의 중심에 'Greening 정책'이 있다. 미래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CAP가 중요하며, 더욱 환경친화적인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Greening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농가 직접지불금의 30%에 대해서는 농업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의무

KOTRA

## 본격화되는 지진복구 사업으로 일본경기 회복 조짐 보여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 사태 등으로 쇼크에 빠졌던 일본경제가 최근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사업의 본격화다. 복구사업에 약 19조엔의 돈이 풀렸는데 주로 주택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건설관련 업체에는 동북지역에서의 특수를 기대하며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택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실제로 센다이 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모자라고 건설현장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경기회복의 또 하나의 호재는 엔화의 약세 기조다.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엔화의 강세 기조가 미국경기의 회복과 유럽 금융위기의 진정으로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당 80엔대가 유지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예측으로는 달러당 엔화환율이 85엔까지 진행될 경우, 올해 상장기업의 수익은 6% 이상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호재로 일본은행의 3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설비투자계획은 전년 대비 0.9%p 상승한 3.6%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를 재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유지해 지난 4월 2일 닛케이지수가 1년 만에 10,200선을 회복하는 등 일본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원유가격의 상승, 전력수급의 불안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

지만 일본국민과 기업들은 모처럼 찾아든 경기회복 청신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 지속되는 전력난, 울여름이 고비

이러한 일본 경제회복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전력 문제다. 지난 1월 동경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을 17% 인상했고 다른 전력회사들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에너지정책을 백지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올해 안으로 새로운 '장기 에너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은 지난 2010년 6월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총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다(지진 이전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약 30%). 이미 일본 내 54기의 원전 중 53기가 정지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정성이 확보된 원전의 경우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와 국민 여론이 원전 재가동 찬성

를 부가하겠다고 제안한다. ①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② 영구적인 초지를 유지하며 ③ 생태학적 목적으로 7%의 경지를 유보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중 다양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며,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EU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 유럽 농업계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3년 CAP 개혁을 통해 유럽 농업인은 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환경보존, 동물복지, 식품안전 등 'cross compliance'라고 불리는 기준을 준수해 오고 있다. 이번 집행위의 제안은 기존의 'cross compliance' 외에 새로운 생태보존 의무를 유럽 농업인들에게 추가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보존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느끼는 유럽 농업계가 집행위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EU 회원국들도 일련의 Greening 조치들이 향후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증대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EU 집행위의 개혁 제안의 배경에는 세계식량안보를 바라보는 EU의 시각이 들어 있다. UN 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2030년에는 세계 곡물수요가 5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늘어나는 식량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공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생산면적이 증가하거나 동일한 면적하에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OECD 2011~2020 농업 전망」은 2011~2020년 세계 농업생산성이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이전 10년간의 2.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EU 집행위는 미래의 농업은 보다 적은 자연 자원을 활용해 보다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농업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Greening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물을 덜 사용하고 농약을 덜 쓰며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농업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세기의 녹색혁명에 기초를 둔 집약적 농업생산 확대가 향후 세계인구 90억명 시대에 까지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농업의 미래 해법을 R&D에서 찾는 EU

지금까지 EU의 CAP 개혁 동향 중 핵심 키워드인 Greening에 대해 주로 기술했으나, 이외에도 시장 교란 요인 발생 시 시장개입정책 도입 방안, 농가 직접지불금 제도 개선 방안(현행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회원국 간 단가의 형평성 제고방안, 지급액 상한 설정 방안 등), 실제 활동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래의 CAP 개혁과 관련,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EU 집행위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농식품 관련 R&D 강화다. EU 집행위는 차기(2014~2020년) 중기재정계획상의 농식품 분야 R&D 예산(안)에 45억유로를 배정했다. 이는 전 기간의 동일한 예산이 20억유로 이하였던 점과 최근의 EU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농업·농촌의 미래 해법을 R&D 정책에서 찾으려는 EU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도 올해 초 EU는 중요한 R&D 과제를 집중 관리하는 EIP(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s) 프로그램의 대상 과제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선정했다. 이는 우리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준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CAP 개혁 방안에 대해 각 회원국, 유럽의회, 농업계 등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안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개혁안의 발효 시점을 2015년으로 1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의사결정을 빨리하는 장점을 가진 우리나라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중한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유럽으로부터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박민**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만**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참사관  
foodlove@korea.kr

과 반대로 양분돼 있어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재가동을 한다고 해도 원전수명이 약 40년인 것과 현재 원전의 시설노후도를 감안할 때 증설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2040년엔 원자력발전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주요 전력회사들은 화력발전을 불가피하게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가 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지역을 커버하는 5대 전력회사(동경전력, 관서전력, 중부전력, 동북전력, 규슈전력)들이 2011년 결산결과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들 적자의 합이 1조엔을 초과했다. 모두 주된 원인은 화력발전 비용 증가에 따른 원료비 상승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전력공급이 최대 고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은 '15% 절전'을 목표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전력을 기울여 위기를 넘겼지만, 정작 문제는 올해라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산업계의 전반적 침체로 기업용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올해 경기가 회복할 경우 치솟는 산업용 전력수요를 원전 없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의 절전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그래서인지 원전 재가동을 위한 일본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후쿠이현의 400만kw급 오오이 원전을 가능한 다음 주 중 재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지자체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오오이 원전의 재가동은 향후 다른 원전 재가동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 될 전망이다.

#### 소비세 인상과 노다 정권의 운명

일본 경기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은 소비세 인상이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지난 고이즈미 정권 때도 추진된 바 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소비세 인상은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노인복지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야당인 자민당뿐 아니라 집권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정부의 부채는 1천조엔으로 GDP의 200%를 넘긴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해 6월엔 IMF로부터 일본이 소비세를 지금의 3배인 15%로까지 올려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올 정도였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동일본 대지진에 복구예산이 소요되자 다급해진 노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소비

세를 묶는 '일본재정 일체 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닛케이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일본국민의 인식은 찬성 45%, 반대 47%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합의가 요원해 보인다. 특히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반발이 크다. 다이나믹생명경제연구소는 현재 계획대로 2013년 소비세를 8%로 인상하고 2015년 10%로 인상한다면 최종적으로 일본의 GDP가 약 3.0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노다 정권이 과연 소비세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세 인상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중의원 해산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노다 정권의 향후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 하시모토와 손정의, 난세의 영웅인가?

지진 복구수요로 경기가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20년이 지속될 것인가. 2012년은 일본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기엔 항상 영웅들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고이즈미 총리 이후 일본에서는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리더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력을 하나로 모아줄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는 일본국민들 앞에 최근 부쩍 눈에 띄는 두 인물이 있다. 차세대 젊은 정치의 주역 하시모토 오사가 시장과 일본 IT산업의 황제 손정의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인기 변호사 출신으로 2008년 39세에 오사카부 지사에 당선된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해 오사카시와 오사카부의 통합을 외치며 오사가 시장이 됐다. 공공개혁, 정치혁신, 교육제도 개선 등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 보자는 하시모토에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압도적 지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얼마 전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노다 내각의 지지율이 30% 정도였던 반면, 하시모토에 대한 지지율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중의원 선거엔 본인이 만든 '오사카 유신' 소속 정치인들을 대거 출마시켜 관서지역을 넘어 중앙정치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오사카 유신회에서 발표한 정책집 '유신파책'에는 현재의 복잡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고, 전후 헌법을 개정해 총리를 국민이 뽑게 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들이



대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된 일본 북부 이와테현에서 복구대원이 건축용 재목을 운반하고 있다.

포함돼 있었다. 거침없는 발언과 추진력 등 기존 정치인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일본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시즘(하시모토+파시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독재적이고, 미디어를 이용한 여론정치를 즐기는 하시모토에 대해 경계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편향적이고 공격적인 정치스타일이 일본국민의 단합을 이끌어낼 순 있겠지만, 중앙정치와 외교 무대에서 얼마만큼 타협과 협상을 끌어낼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원전 재가동 문제로 노다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기존 정치세력과 갈등이 계속돼 일본사회에 오히려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하튼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하시모토당이 현실화돼 그에게 더욱 힘이 실린다면 향후 일본엔 지금까지와 다른 혁명적 변화의 소용돌이가 칠 것이다.

하시모토와 함께 그 행보가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손정의다. 재일교포 3세인 손정의는 일본 최고의 부자기업 소프트웨어의 회장으로서 그동안 일본 IT의 성공 신화였다. 그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해 9월 사재 10억엔을 투자한 자연에너지 재단을 설립했다. 일본의 지방에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정부가 일괄 구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일본 전역에 2천km 직류 송전망을 깔고 장기적으로는 해저 등을 통해 한국, 중국, 러시아 송전망을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구상도 내놓았다.

황당해 보일 수도 있는 손 회장의 구상이 지진과 경제 불황으로 침체된 일본국민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닛케이신문 여론조사 '가장 존경하는 역대 일본 지도자' 순위에서 손 회장은 7위를 기록했다. 1위에서 4위까지가 토요토미, 도쿠가와 등 역사 속 인물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순위다. 하지만 손 회장에 대한 일본국민의 관심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대지진 이후 위기에 빠진 일본 에너지시장을 이용해 돈을 벌 구상이란 비판이다. 손 회장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충분한 가격에 정부가 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인으로서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손 회장의 진정성과 일련의 행보가 향후 정치진출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정의 회장이 미래의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시모토와 손정의, 과연 이 두 사람이 일본정치와 경제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위기에 빠진 일본을 구하는 난세의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일본의 장래가 이들의 어깨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박원**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KOTRA 및 KDI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진**  
KOTRA 일본 오사카 무역관 과장  
sangjin2@kotra.or.kr

2012년 『나라경제』는 연중기획으로 '함께 사는 세상\_다문화'를 진단해본다. 2011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140만명을 넘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특성, 외국인 이주자들의 고충, 다문화 사회의 국민의식, 이주민 정책 과제 등을 집중 조명해본다.

‘침밀밀’ 부른 다문화 가수 헤라의 한국생활 이야기

# 받은 만큼 베풀어야 진짜 한국사람 되죠

중국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게 없었던 그녀. 영화 '침밀밀'의 동명주제곡을 불렀던 그녀('침밀밀'은 대만 영화로 주제곡은 원래 등려군이 불렀지만 중국에서 개봉될 땐 그녀가 불렀다). 중국 국립가무단 출신으로 중국에선 국민가수로 인기를 누렸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중국인이 아니다. 한국인이다. 귀화한 지 벌써 12년째. 다문화 가수로 불리는 헤라는 귀화 전 '목포의 눈물' 작곡가故손목민 선생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가요 창법을 지도받기도 했다. 2007년 1집을 시작으로 올해 3월 3집 앨범 '가리베가스'를 발표했다.



**서울의 야경에 반해 귀화했다는데 정말 그 이유가 다인가?**

(웃음)한국이 좋아서 귀화한 건 맞다. 1992년에 처음으로 CF를 찍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발전이 안 된 상태였다. 손님으로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 이후 한국과 중국을 계속 오고갔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아버지가 서울에 오셔서 한강과 63빌딩을 보시곤 “나도 젊었다면 이곳에서 일하고 싶었을 것 같다”며 용기를 주셨다. 물론 어머니는 반대를 많이 하셨다(웃음). 또 중국인은 딱딱하고 일본인은 너무 친절한데 한국인은 딱 중간이다. 이런 한국인의 특성이 참 맘에 들었다. 중국인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항상 뒤로 숨기는데 한국인은 열정적이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함께 울어주더라.

**귀화 후 한국인으로 살아 보니 어떤가?**

17살 때 중국 국립가무단에 들어갔다. 여기 소속된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로 연예계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중국인으로서는 손님일 때는 한국에 와 대접을 받지만 했는데 한국인이 되니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했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다. 수많은 한국의 가수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했다. 당장 외국인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니 무대에 설 기회도 적어졌다. 차비가 없어서 몇 시간씩 걸어 다녔고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다. 일단은 노래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구해

야겠다는 생각에 전단지들 보고 여러 군데 전화를 했다. 그런데 “재수 없게 외국인이 전화했다”며 화를 내고 끊더라. 우여곡절 끝에 식당에서 일을 얻었지만 경험이 없다며 홀에서 서빙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나름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 설거지를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결국 어머니께서 오빠를 한국에 급하게 보내셨다. 요리사였던 오빠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동안 나를 뒷바라지했다. 어머니는 오빠도 고생하니까 결국 내가 중국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셨지만 난 끝까지 버텼다. 열심히 노력하니 길이 보이더라. 지금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어떤 노력을 했다? 귀화 후 첫 음반이 나오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다.**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상황이 절박하니 맘을 독하게 먹게 되더라.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박대홍 헤라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만났다. 이 분은 다른 분야에서 사업하던 분인데 나의 가능성을 보고 음악에 처음으로 투자를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발음에 있었다. 노래할 때 발음이 부정확해 소통이 안 된다는 거다. 교정하기 위해 부단히 연습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고, 너무 답답해 구강점검을 받으러 갔다. 충격적이게도 혀 구조 자체가 한국인과 달라 한국어 발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칫솔로 혀를 문지르고 하루에 5시간씩 교정을 받았다. 이때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8kg이 빠지기도 했다. 결국 세 번이나 녹음을 한 후 1집 ‘침밀밀’을 발표했다. 발음은 지금도 계속 노력 중이다.

**가수뿐 아니라 (사)한국다문화예술원 원장, 세계다문화예술단 예술감독, 여성가족부 사이버멘토링 대표멘토(장관 위촉), 한국멘토링협회·세계멘토링협회 홍보대사 등 다양한 직책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과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나?**

스케줄이 많아 피곤하고 힘들지만 같이 일하면서 웃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희망을 찾는 모습에 행복을 느낀다. 나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일하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인들에게 “우리가 취약계층이니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은 만큼 선물을 나눠라”라고 강조한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 하지만 받기만 하는 수동적 입장에

서 나눌 줄 아는 능동의 마음가짐으로 바뀌는 순간 진정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내가 하는 봉사도 거창한 것이 아니다. 텃밭을 가꿔서 다문화 가정이나 양로원에 채소 등을 기부하는 정도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해 더 힘이 난다(웃음).

**2010년에는 독거노인 300명을 초대해 효도잔치를 벌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때 CF를 찍어서 목돈이 들어왔다. 사실 중국에 계신 어머니께 드릴까도 생각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냥 독거노인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고, 크게 기대 않고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런데 “내 자식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손을 꼭 붙잡고 우시는 어르신들 모습에 오히려 내가 더 감동받았다.

**3집 타이틀곡 제목이 재미있다. ‘가리베가스’가 어떤 뜻인지 궁금하다.**

‘가리베가스’는 해외 근로자들이 밀집한 서울 가리봉동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합성어다. 사막의 땅에서 화려하게 번신한 라스베이거스처럼 140만 다문화인들도 어려운 경계를 희망차게 이겨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장운정의 ‘어머니’와 이루의 ‘까만안경’을 작곡한 윤명선 작곡가의 곡이다. 이번 음반 작업엔 함춘호 기타리스트 등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앞으로의 꿈은?**

중국에서 국민가수로 불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국민가수로 불리고 싶다. 롤 모델은 패티김 선생님이다. 귀화 전에는 철이 너무 없었는데 귀화 후 인생이 바뀌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노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

그녀는 뭐든 열심히 한다. 지난달에는 해양수상훈련 국제자격증(SS)을 취득했다.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든 해양구조 활동이 가능한 자격증이다. 일본 쓰나미 때 충격을 받아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1년 넘게 훈련을 받았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다문화인을 격려하기 위해 사비로 차비까지 챙겨 준다. 그녀의 섬세한 마음에 감동한 다문화인들이 늘면서 다문화인 봉사단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넘어 협력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처럼 다문화 가수 헤라도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의 대표 국민가수가 되기를 응원한다. [이]

●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 사회 · 문화적 통합 넘어 노동시장의 통합 이뤄야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중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합인 결혼 이민자 가정이다. 결혼이민자는 2006년 9만4천명에서 2012년 2월 말 현재 14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서울 가리봉동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중요한 과제이나, 배우자의 취업능력이나 결혼이민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소득향상이 획기적으로 이뤄지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남편과의 연령 차이(2009년 기준 11.1세)를 고려하면 이들 가정의 소득안정 및 향후 가계생계에 대한 책임에서 결혼이민자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향후 10년 후와 60대에 이르렀을 때 걱정거리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도 확인된다. 10년 후 걱정거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46.3%)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 및 취업 문제(35.5%)를 지적하고 있다. 향후 60대 전후에서의 걱정거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또한 경제적 문제(59.4%)로 10년 후의 걱정거리에 비해 비중이 더 높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시장 통합의 선제적 해결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 자녀 세대의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의 소득안정을 위한 취업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규용**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leeky@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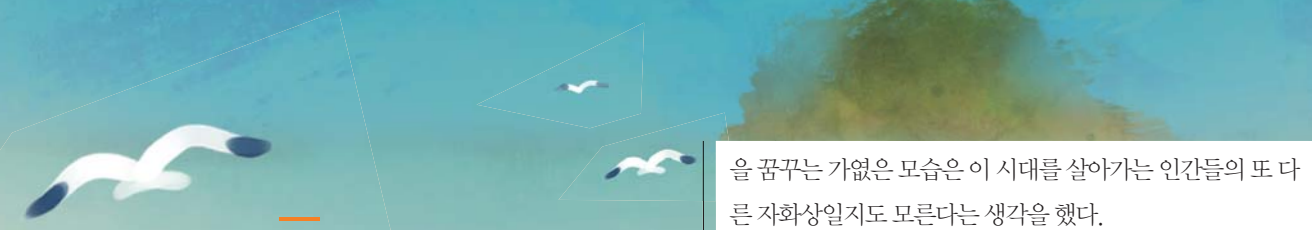
## 그동안 이주자의 통합(Integration)

은 주로 사회 · 문화적 관점에서 강조돼 왔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 가정의 노동시장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들 계층의 지원을 위한 경제 ·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부부 간 연령 격차가 크고 저소득층이 많으며 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이 낮고 빈곤 경험률이 30~40%에 이르는 현실은 이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 실태조사(표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중 현재 일하고 있는 비중은 32.6%다. 이들이 일하는 주된 이유는 '가계 도움', '생활비 부족 해소', '가족 생계 책임' 등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소득분위 중 대략 2~3분위에 걸친 하위수준에 머물러 저소득층에 속해 있다.

생활수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나 배우자 모두 현재의 생활에 대해 다소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이하이다. 특히 결혼기간이 길수록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가난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하락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는 매우



# 소매물도 연가

바다에서 눈으로 보이는 섬은 외로움과 단절로 존재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이는 섬은 소통과 일상의 도피처로 흐르기도 한다. 바다는 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단절을 이으며 섬은 소통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바다의 무료(無聊)를 완화(緩和)한다. 가끔은 누구나 일상에서 탈출을 꿈꾸기도 한다. 탈출의 의미 속에는 공간과 시간이 맞물려 있다.

지난 이른 봄, 그 마음이 바람결에 전해졌는지 섬에 한번 다녀가라는 기별이 왔었다. 발신지는 '소매물도'라는 남쪽의 섬이었고 우표 대신 붉은 동백꽃 한 잎이 붙어 있었다. 기별처럼 담긴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비릿한 바닷내음이 배어나고 조개껍질 안에 쓰인 작은 글씨들이 소라게처럼 나와 기어다니고 있었다.

밤차를 탔다. 밤차를 타면서 일탈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것에는 감미롭거나 허무하거나 삶의 누추함도 엉겨 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비겁함은 온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비겁함 속에서 영화 속의 주인공 뼈빠용이 떠오르기도 했다. 섬의 벼랑 속 감옥에서 벌레를 잡아 허기를 채우며 그가 꿈꿨던 탈출은 어떤 의미였을까 잠시 고민했다. 역시 감미롭거나 허무하거나 처절함이 배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온전히 타의가 아님에도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에서 일탈이나 탈출을 꿈꾸는 모습,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탈출

을 꿈꾸는 가엾은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또 다른 자화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네가 아무리 이 섬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거야.”

뼈빠용의 탈출제의를 거부한 드가가 따라나서지 못하며 독백처럼 중얼거리던 말이었다.

드가의 말처럼 내 마음의 감옥은 어떤 것인가.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자신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의 단절감이 견고한 감옥으로 응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른 아침, 거제의 남쪽으로 저구항을 출발한 여객선은 파도를 헤치고 바다로 나아간다. 돛으로 바람을 받아 흐르는 것이 아닌 동력으로 흐르는 배는 거부하는 바다의 몸짓을 거칠게 갈랐다. 아침 햇살은 바다에 부서져 물비늘처럼 번들거리며 들쭉거리고 차가우며 비릿한 해풍은 일탈의 감미로움으로 축축하게 몸으로 젖어들었다. 출발하면서 검은 빛이었던 바다는 화사한 봄 햇살에 깨어나 푸른빛으로 변하고 여객선은 선착장에 몸을 기대고 잠시 머물렀다.

물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한갓진 섬이었을 것이다. 물을 그리워하기도 하였겠지만 그리고 고단하고 척박한 삶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물사람들이 꿈꾸는 일탈의 여유로움을 즐기기도 하였을 것이다. 세상에 알려지면 서 이제는 장삿속의 숙박업소들이 비탈에 들어서고 그네들이 가지거나 즐겼던 시간과 물질적인 여유로움도 이제 비탈에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작은 마을을 벗어나 섬의 돌레를 도는 길로 들어선다. 바다는 봄바람에 깨어나 뒤척이고 있었다. 길을 벗어나 바닷가로 나아갔다.

흐르고 흘러온 바다는 강물처럼 아득한 먼 길을 달려와서는 애타게 소리치며 섬에게로 달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섬은 태고의 긴 외로움으로 치저 바위처럼 견고하게 바다를 밀쳐내고 있었다. 그래서 바다는 설운 눈물처럼 하얀 포말로 부서져 멍든 몸을 펴렇게 풀어내 물들었다.

우리는 그림을 겉모습으로 파악한다. 색깔이 어둡고 형태가 어둡고 입방아를 찧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다. 화가는 은연중 혹은 의도적으로 캔버스라는 사각의 뒷밭에 자신의 속내를 심어놓는다. 그 속내를 파헤치는 즐거운 놀이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그랬다. 섬은 바다가 될 수 없고 바다는 섬이 될 수 없음이었다. 역시 너도 내가 될 수 없고 나도 네가 될 수 없음이었다. 그리움은 외로움이 될 수 없고 외로움은 그리움이 될 수 없음이었다.

내가 너에게 바다처럼 달겨들었을 때 너는 늘 나를 밀쳐냈고 내가 나에게 달겨들었을 때 나도 너를 밀쳐냈던 슬픈 비애를 생각했다.

그러나 바다가 있어 섬이 되고 섬이 있어 바다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았다. 섬 그리고 바다처럼 너와 내가 그렇듯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일탈의 여유로움은 바다와 섬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상념으로 녹아들었다. 그리고 단 두 줄로 지어진 시를 떠올렸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정현중, 섬)*

인간은 누구나 존재성을 가진다. 존재성은 자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 고독과 단절의 의미가 크다. 모든 갈등과 다툼은 철저한 단절의 존재성에서 기인한다.

다시 길을 찾아와 봄바람에 설렘처럼 흔들리는 짙은 상록수림과 나란히 섰다. 그 나무들처럼 나도 잠시 섬의 일부로 존재했다.

다시 능선으로 이어진 길을 오르고 숲으로 난 길을 지났을 때 분지처럼 너른 공간이 나타났다. 돌담과 동백나무숲 옆으로 작은 건물이 있었다. 낡은 교문은 잠겨 있었고 교적비가 그 건물의 유래를 말해주고 있었다.

소매물도 분교, 지난 61년 개교해 96년 폐교했다는, 졸업생은 131명이었다고 새겨져 있다. 돌담 사이를 지나 운동장을 지나고 세월의 이끼처럼 퇴색된 작은 창문을 통해 교실 안

을 들여다 봤다.

환청에 착시처럼 풍금소리에 맞춰 동요를 부르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그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은 대부분 섬을 떠났을 것이다. 이 모양 저 모양 세상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이 교실에서 공부하던 시간들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다시 돌아가고픈 날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섬으로 오면서 이국적인 모습의 등대섬을 떠올리겠지만 교문이 잠긴 학교에서 바라본 이 섬은 너무나 아리고 그리워 내겐 슬픈 연가처럼 마음속에 다가들었다.

그래도 등대섬에는 다녀와야 했다. 하루에 두 번만 바다가 길을 열어줄 때 건널 수 있는 곳. 제대로 길을 열어주지는 않았지만 바다를 건넜다. 또 다른 섬이었다. 나무로 만든 계단을 맨발로 올랐다. 아직 물길이 열리지 않았으니 혼자였다.

거센 폭풍우에 삶과 죽음을 넘나들다가, 짙은 해무에 방향을 가늠하지도 못하던 어부의 눈에 스민 등대의 불빛은 구원의 불빛이었으리라. 외로움을 태워 불빛을 낼 것 같은 등대는 망망한 바다에서 구원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과연 나는 누구에게 등대 같은 존재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하니 온전히 하늘을 올라다 볼 수 없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보기도 할 거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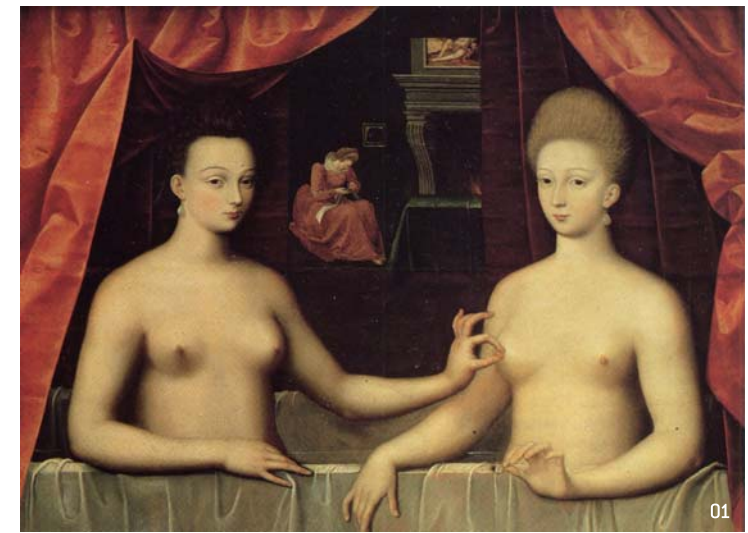
일상을 탈출하고 싶다고 떠나온 길이었지만 결국 다시 일상을 꿈꾸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섬을 떠나야겠지. 빠삐용에게 드가가 한 말이 탈출처럼 섬을 떠나는 자에게 파도처럼 아프게 다가와 부딪치고 있었다.

“네가 아무리 이 섬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거야.”



**김창환**  
교육과학기술부 비상계획보좌관  
mount1020@daum.net



01 작자 미상. 가브리엘레 데스트레와 그 자매. 1592년경. 나무판 위에 유채, 96×125cm, 파리 루브르박물관

## 작자 미상 가브리엘레 데스트레와 그 자매

루브르박물관의 인기몰이 작품은 단연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기 작품도 많다. ‘가브리엘레 데스트레와 그 자매’의 초상은 그런 작품 중 하나다.

이 작품이 유명세를 탄 것은 초상화 속의 가브리엘레(1573~1599년)가 프랑스 최고의 성군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앙리 4세의 부인(사실상의 왕비)이었고 무엇보다도 천하의 절색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동시대인들이 “빛나는 금발, 이상적인 체형, 눈부시게 하얀 피부”를 가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학자 장 피에르 바블롱(Jean-Pierre Babelon)이 “아름답긴 하지만 심검고 내면적 깊이가 없다”고 평가한 것처럼 가브리엘레가 그리 총명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녀의 표정 속에는 주저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하는데 되레 그 점이 그녀를 바

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빼앗아가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 아닐까. 일종의 백치미랄까.

가브리엘레는 케브르 후작인 앙투안 데스트레의 딸로 태어나 케브르 성에서 자랐는데 1590년 앙리 4세와 처음으로 만난다. 첫눈에 반한 왕은 그녀에게 6개월 넘게 구애한 끝에 겨우 마음을 얻는다. 왕은 그녀를 끔찍이 사랑해 그녀에게 몽소후작부인의 칭호를 내리고 호화로운 성을 지어줬다고 한다. 앙리 4세는 그녀를 정비로 삼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와 결혼한 상태였다. 그는 마르그리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왕비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교황 클레메트 8세도 이혼에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한다. 가브리엘레는 명목상으로는 후궁이었지만 사실상의 왕비로 군림했고 앙리 4세에게 세 명의 아이를 선사했다. 그렇게 영광과 행복의 절정을 누리던 가브리엘레는 1599년 1월 9일 밤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세간에는 독살설이 무성했다. 어떤 이들은 가브리엘레가 그녀를 시기한 악마에 의해 목 졸려 죽었다고 입방아를 찧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을 꼼꼼히 체크해 본 학자들은 급성 뇌졸중 혹은 임신중독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천하의 절색 가브리엘레는 이승에서 그렇게 꿈같은 9년의 세월을 보낸 뒤 하늘나라의 문을 두드렸다.

루브르박물관의 초상화는 바로 가브리엘레가 생애 최고의 순



02 로소 피오렌티노, 피에타, 1530~1535년, 나무 판 위에 유채, 127×163cm, 파리 루브르박물관



03 프랑수아 클루에, 목욕하는 부인, 1570년경, 나무 판 위에 유채, 92.1×81.3cm, 워싱턴 내셔널갤러리

간을 맞이했던 1594년경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처음 이 그림을 본 감상자는 백이면 백 동성애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시라. 겉보기와 달리 그림의 속내는 전혀 판판이기 때문이다. 욕조에 함께 들어간 두 여인은 놀랍게도 서로 자매지간이다. 자매가 레즈비언 커플일리는 만무하다. 이 그림을 좀 더 찬찬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친숙한 르네상스의 사실적 묘사기법과 달리 다소 과장된 표현과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이 그림이 그려진 16세기 말 프랑스 궁정에선 회화와 조각을 중심으로 매너리즘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로소 피오렌티노(Rosso Fiorentino)와 프란체스코 프리마티초(Francesco Primaticcio)가 그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퐁텐블로(Fontainebleau) 화파로 불린 이 양식은 인물의 자세를 과장하고 신체를 기형적으로 늘어뜨려 묘사하는 특징을 지녔는데 프랑수아 클루에 등 프랑스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가브리엘레 데스트레와 그 자매'는 바로 이 양식을 계승한 화가에 의해 그려졌는데 누군지는 확실치 않다.

그림 속의 두 여인 중 오른쪽이 가브리엘레인데 그녀는 왼손에 반지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욕조에 걸치고 있다. 왼쪽 인물은 그녀의 누이 빌라르(Villard) 공작부인으로 왼손으로 가브리엘레의 오른쪽 유두를 붙들고 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바로 이 '망측한' 액션 탓이다. 그 태도가 너무나 천연덕스러워 실소를 자아내기까지 한다. 두 여인의 뒤에는 침모가 옷을 만들고

있고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벽난로 위에는 누드의 남성이 하체를 가린 모습의 그림이 보인다.

유두를 붙잡고 있는 제스처는 가브리엘레의 임신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가브리엘레는 이 그림이 그려진 1594년 6월 앙리 4세의 아들인 세자르를 출산했다. 이 경우 침모가 짓고 있는 옷은 장차 태어날 아이를 위한 옷이고 그림 속 누드의 남성은 곧 아이의 아버지인 앙리 4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가브리엘레가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반지는 앙리 4세에게서 받은 혼인의 정표로 해석된다.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겉모습과는 완전 판판인 셈이다.

출지에 아리따운 부인을 잃은 앙리 4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가브리엘레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그는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다. "나의 회한과 탄식은 죽는 날까지 나를 따라다니리라. 내 마음의 뿌리는 이미 죽었고 다시는 싹을 틔우지 않으리라"라고. 루브르박물관의 방문객들이 이 그림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은 그림의 겉모습이 보여주는 흥미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림 속에 숨은 안타까운 사연 때문인 것이다. [한경닷컴]



**정석범**  
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  
sukbumj@naver.com  
프랑스 파리대학 미술사학 박사, 저서로는 「어느 미술사가의 낭만적인 유럽문화기행」, 「아버지의 정원」 등이 있다.

# 대한민국을 스포츠마케팅 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티티카카호는 해발 3,810m 높이에 위치해 하늘 가장자리에 닿은 호수라 불린다. 남쪽에서는 볼리비아, 북쪽에서는 페루가 티티카카호를 감싸고 있다. 내가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파견된 지역이 바로 이 티티카카호를 북쪽에서 감싸고 있는 도시, 푸노(Puno)였다.

푸노는 페루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난한 지역이다. 처음 이 지역으로 갈 때만 해도 의욕이 앞서 있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고산지역에 적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임지에 도착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볼까 했더니 파견지였던 알티플라노 국립대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전국 국립대 교수들이 임금 문제로 동시파업을 진행한 모양이었다. 안전상의 문제로 원래 가기로 했던 임지를 떠나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인데, 여기서도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됐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어린이 축구교실이었다.

파견 전 스포츠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축구교실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리기로 했다. 두 명의 대학생이 이 프로젝트를 도와줬고, 대학 측에서는 운동장과 필요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다. 나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서로를 도와가

KOICA에서 지원해준 유니폼을 입은 푸노의 축구교실 아이들



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원인 내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대신 최대한 학교의 역할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언제까지나 그곳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이들도 점차 내 뜻을 알아주었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여러 제안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동시에 덤으로 얻은 것이 있다. 축구단 모집을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축구교실이 알려져 지역 신문과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다. 이왕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알려 국가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을 보면, 또한 유니폼에 들어간 태극기와 페루 국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축구교실을 통해 현지인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말 그대로 '우리 편'이 돼가는 모습에 또 하나의 행사를 기획하기로 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티티카카호에서의 수영대회! 고산 지역에서 먹고살 것이 없어 항상 가난하다고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지역 홍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큰 대회는 아니었지만 대회의 상징성 때문인지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졌고, 함께 준비했던 이들도 행사의 정기적 개최와 대회 규모 확대를 약속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며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려 했는데, 잘 받아들여졌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마음만이라도 잘 전달됐길 바랄 뿐이다. 이렇게 스포츠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이자 스포츠 외교가 아닐까.

그렇게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광고대행사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상품·서비스 홍보를 넘어 언젠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획자가 되고자 한다. 푸노에서의 경험이 그 꿈을 향해 다가가는 디딤돌이 돼주었음은 물론이다. [한경닷컴]



**서원덕**  
광고대행사 미르포스 AE  
sta@hanmail.net



오영수  
경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 경제교육은 인성교육이어야

신부와 심리학자, 경제학자 이렇게 셋이 골프를 치러 갔다. 그런데 이들 앞에서 캐디를 동반한 채 골프를 치고 있는 두 사람의 플레이 속도가 너무 느렸다. 참다못한 세 사람이 캐디에게 가서 자기들이 앞질러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캐디는 이 분들은 볼 속에서 인명을 구하다가 실명을 한 용감한 소방관들이니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말을 들은 신부와 심리학자는 곧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했다. “오, 주여! 이 못난 인간을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심리학 공부를 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경제학자는 캐디에게 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분들더러 다음부터는 밤에 와서 치라고 하면 안 될까요?”

합리성과 효율성을 숭배하는 경제학자들을 풍자한 유머다.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의 원인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분분하겠지만, 경제학자의 눈에는 경쟁과 효율성을 지상과제로 삼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약육강식적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금력과 권력이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바깥 사회의 분위기가 학교 안에서는 물리적 힘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표출됐을 뿐이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데 경제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 대책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순화하는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도덕이나 윤리 과목에서 담당할 일이지 경제교육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다. 심지어 사람에 따라서는 시장원리와 경쟁을 강조하는 경제교육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

할지도 모른다.

부정적 시각으로 보자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사람은 경제활동에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될 뿐 다른 사람의 사정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기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 시장의 가격원리는 경제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자신의 계엄과 무능이 초래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이렇게 메마르고 냉정한 학문으로 잘못 인식시켜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방향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컨대 시장원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인간 사회의 인지상정(人之常情)과 책임감으로, 공공재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질서 의식의 함양으로, 외부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연계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특화와 분업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함을 알려주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교환의 이득은 상대방의 이득 없이 나만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시장의 거래자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제이론은 그것을 어떤 관점과 태도로 가르치는가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교육은 인간 세상의 원리에 대한 교육인 만큼,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이 인간과 세상에 대해 보다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부터 따뜻하게 데워야 하지 않을까. **박민정**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30년의  
꿈꾸는  
바다  
이야기

### 2012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0여 개국

- (입장권 안내)
-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 25,000원, 경로 어린이 19,000원
  - 평일 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 17,000원, 경로 어린이 13,000원
  - 자세한 안내는 하단의 입장권 구매처 참조

- (입장권 구매처)
-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 [www.expo2012.kr](http://www.expo2012.kr)
  - 인터파크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http://www.interpark.com)
  - 전화예매 | 1577-1763(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부) / 1544-1555(인터파크)

Official Global Partners

HYUNDAI KIA MOTORS

Official Partners

IBK기업은행 KJB 광주은행 DSME 대우조선해양

Official Sponsors

SAMSUNG 제일모직 아세아나방공 롯데칠성음료 GS

Official Suppliers

현대캐상 인터파크 INT

Official On-line shopping Mall

NAVER 여수세계박람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아이유